

부 록



제18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



제18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

(약칭) : 통합민주당(민), 한나라당(한), 자유선진당(선), 민주노동당(노), 창조한국당(창), 국민중심당(국), 친박연대(박), 진보신당(진), 평화통일가정당(평), 직능소상공인연합(직), 구국참사랑연합(구국), 통일당(통), 무소속(무)

※ 초청요건 비충족 대상은 편의상 “비초청”으로 표기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합동(3)	연설	서강대 스튜디오	4. 7(월) 19:00~19:54	(주)큐릭스 종로중구방송, 주C&M 중앙케이블	강영희 (아나운서)	손학규(민) 박진(한) 정인봉(선) 최현숙(진) 김영동(평)	
중구	초청	토론	서강대 스튜디오	4. 8(화) 19:00~20:11	주C&M 중앙케이블, (주)큐릭스방송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범구(민) 나경원(한) 김인식(노)	신은경(선)
	비초청(7)	연설		4. 8(화) 20:13~20:31			오형석(박) 한만억(평)	
용산구	초청	대담	서강대 스튜디오	4. 3(목) 11:00~11:30	주C&M 용산케이블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김종민(노)	성장현(민) 진영(한) 이인숙(선)
	비초청(6)	연설		4. 3(목) 12:00~12:10			김만호(평)	
성동구갑	초청	토론	서강대 스튜디오	3.31(월) 19:00~20:00	(주)큐릭스 광진성동방송, 주C&M 동서울케이블	강웅선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최재천(민) 진수희(한) 최창준(노)	
	비초청(6)	연설		3.31(월) 20:00~20:15			김공수 (위원)	정일권(평)
성동구을	초청	토론	서강대 스튜디오	4. 1(화) 19:00~19:50	(주)큐릭스 광진성동방송, 주C&M 동서울케이블	강웅선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임종석(민) 김동성(한)	
	비초청(6)	연설		4. 1(화) 19:50~20:05			김공수 (위원)	한용대(평)
광진구갑	합동(3)	연설	고려대 TV방송국	4. 4(금) 11:00~12:00	주C&M 동서울케이블	이애진 (시인,문화센터강사)	임동순(민) 권택기(한) 김준교(선) 김영준(평)	
광진구을	합동(3)	연설	고려대 TV방송국	4. 4(금) 14:00~15:30	주C&M 동서울케이블	이애진 (시인,문화센터강사)	추미애(민) 김홍준(선) 이중원(노) 전지명(박) 김정호(평)	박명환(한)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동대문구갑	초청	토론	동대문 청소년수련관 5층 소극장	4. 2(수) 20:00~21:00	(주)Tbroad 동대문케이블 ,(주)동서방송	이대회 (광운대 교수)	장광근(한)	방종욱(노)	김희선(민)
	비초청 (7)	연설		4. 2(수) 21:00~22:00			신은섭 (위원)	김정석(박)	박상선(평)
동대문구을	합동 (3)	연설	동대문 청소년수련관 5층 소극장	4. 2(수) 22:00~23:00	(주)Tbroad 동대문케이블 ,(주)동서방송	신은섭 (위원)	민병두(민)	홍준표(한)	박용만(평)
중랑구갑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TV방송국	4. 3(목) 11:17~12:07	(주)C&M 중랑케이블	윤종빈 (명지대 교수)	임성락(민)	김철기(박)	유정현(한)
	비초청 (7)	연설		4. 3(목) 12:48~13:09			김종묵(평)	강경환(무)	
중랑구을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TV방송국	4. 3(목) 16:33~17:48	(주)C&M 중랑케이블	윤종빈 (명지대 교수)	김덕규(민)	진성호(한)	강동호(무)
	비초청 (6)	연설		4. 3(목) 18:17~18:30			이용휘(선)	전권희(노)	
성북구갑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TV방송국	4. 2(수) 11:10~12:30	(주)C&M 북부케이블	이대회 (광운대 교수)	손봉숙(민)	정태근(한)	
	비초청 (6)	연설		4. 2(수) 13:00~13:20			김형준(평)	정태홍(노)	
성북구을	초청	토론	고려대학교 TV방송국	4. 2(수) 16:10~17:05	(주)C&M 북부케이블	이대회 (광운대 교수)	박찬희(민)	김효재(한)	신계륜(무)
	비초청 (7)	연설		4. 2(수) 18:00~18:40			박창완(박)	정종수(평)	
강북구갑	초청	토론	삼각산 문화예술회 대공연장	4. 2(수) 11:15~12:28	(주)큐릭스 방송	김은경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오영식(민)	정양석(한)	
	비초청 (6)	연설		4. 2(수) 12:50~13:03			백두성 (강북선관위 사무국장)	김서진(창)	
강북구을	초청	토론	삼각산 문화예술회 대공연장	4. 2(수) 16:00~17:20	(주)큐릭스 방송	김은경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최규식(민)	이수희(한)	
	비초청 (7)	연설		4. 2(수) 17:40~18:04			백두성 (강북선관위 사무국장)	임강신(선)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도봉구갑	초청	토론	도봉구청 2층 대강당	4. 5(토) 15:00~16:07	(주)큐릭스 방송	김은경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김근태(민) 신지호(한) 김승교(노)		
	비초청	미개최 (후보자 불참)							이현재(평) 홍우철(무)
도봉구을	초청	토론	도봉구청 2층 대강당	4. 6(일) 15:00~15:43	(주)큐릭스 방송	김은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유인태(민) 김선동(한)		
	비초청 (6)	연설		4. 6(일) 15:43~15:55			황인춘(평)		
노원구갑	초청	미개최 (후보자 불참)							정봉주(민) 현경병(한) 함승희(박)
	비초청 (7)	연설	고려대 스튜디오	3.30(일) 14:20~14:45	(주)노원 케이블 종합방송	김현주 (광운대 교수)	김의열(진) 위인규(평)		
노원구을	초청	토론	고려대 스튜디오	3.30(일) 16:05~17:05	(주)노원 케이블 종합방송	김현주 (광운대 교수)	우원식(민) 권영진(한) 조현실(노)		
	비초청 (7)	연설		3.30(일) 17:50~18:14			고진목(국) 여석동(평)		
노원구병	합동	토론	고려대 스튜디오	4. 1(화) 15:50~16:35	(주)노원 케이블 종합방송	김현주 (광운대 교수)	김성환(민) 노회찬(진)	홍정욱(한)	
은평구갑	초청	토론	CJ케이블넷 스튜디오	4. 1(화) 19:00~20:55	(주)CJ케이블 넷	유정아 (방송인)	이미경(민) 안병용(한) 조일호(신) 강화연(노) 강인섭(박)		
	비초청 (7)	연설		4. 1(화) 20:55~21:13			이상재(평) 오순택(무)		
은평구을	초청	토론	CJ케이블넷 스튜디오	4. 2(수) 19:00~20:56	(주)CJ케이블 넷	유정아 (방송인)	송미화(민) 이재오(한) 정두형(신) 문국현(창)		
	비초청 (7)	연설		4. 2(수) 20:56~21:15			장재완(박) 엄윤형(평)		
서대문구갑	합동 (3)	연설	서강대 방송스튜디오	4. 6(일) 19:00~19:45	(주)C&M 서서울케이블, (주)큐릭스 서대문방송	김왕식 (이화여대 교수)	우상호(민) 이성현(한) 정현정(진) 노학우(평)		
서대문구을	합동 (3)	연설	서강대 방송스튜디오	4. 7(월) 19:00~19:35	(주)C&M 서서울케이블, (주)큐릭스 서대문방송	김왕식 (이화여대 교수)	정두언(한) 이상훈(노) 방송만(평)	김영호(민)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마포구갑	합동	토론	서강대 방송스튜디오	4. 4(금) 19:00~23:00	(주)C&M 마포케이블	이수영 (서강대 교수)	노응래(민) 강승규(한) 윤성일(노)	남기준(평)
마포구을	초청	토론	서강대 방송스튜디오	4. 5(토) 19:00~23:00	(주)C&M 마포케이블	이수영 (서강대 교수)	정청래(민) 강용석(한)	
	비초청	미개최(후보자 불참)						
양천구갑	초청	토론	경인미디어센터 스튜디오	4. 3(목) 19:00~20:10	(주)CJ케이블넷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제학(민) 원희룡(한) 강삼재(선)	
	비초청 (6)	연설		4. 3(목) 20:10~20:25		심중보 (앵커)	왕성태(평)	
양천구을	초청	토론	경인미디어센터 스튜디오	4. 4(금) 19:00~20:00	(주)CJ케이블넷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낙순(민) 김용태(한)	
	비초청 (6)	연설		4. 4(금) 20:00~20:10		심중보 (앵커)	최 정(평)	
강서구갑	초청	토론	(주)Tbroad 강서방송	4. 1(화) 10:30~12:20	(주)Tbroad 강서방송	김광석 (전 KBS 보도본부장)	신기남(민) 구상찬(한) 백 철(선) 최동석(노)	
	비초청 (6)	연설		4. 1(화) 12:30~12:50			박종훈(평)	
강서구을	초청	토론	(주)Tbroad 강서방송	4. 1(화) 14:30~16:20	(주)Tbroad 강서방송	왕종근 (전 KBS 아나운서)	노현송(민) 김성태(한) 김백중(선) 이성호(무)	
	비초청 (6)	연설		4. 1(화) 16:30~16:50			신규대(평)	
구로구갑	초청	토론	서강대 방송스튜디오	4. 2(수) 19:00~20:00	(주)C&M 구로케이블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이인영(민) 이범래(한)	
	비초청 (7)	연설		4. 2(수) 20:00~20:30			나인환(평)	유영철(박)
구로구을	초청	토론	서강대 방송스튜디오	4. 3(목) 19:00~20:30	(주)C&M 구로케이블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박영선(민) 고정화(한) 한형교(선) 유선희(노)	
	비초청 (7)	연설		4. 3(목) 20:30~21:00			조평열(박) 정호윤(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금 천 구	합동 (3)	연설	서강대 방송스튜디오	4. 5(토) 19:00~20:10	(주)C&M 구로케이블	최락인 (성결대 교수)	이목희(민) 안형환(한) 장영호(선) 최석희(노) 김당수(기) 유준수(평)	
영등포구갑	초청	토론	한강케이블 스튜디오	4. 3(목) 12:00~13:10	(주)한강 케이블TV	김현주 (광운대 교수)	김영주(민) 전여옥(한) 이정미(노)	한경남(박)
	비초청 (6)	연설		4. 3(목) 13:20~13:40			김문식(평)	
영등포구을	초청	토론	한강케이블 스튜디오	4. 3(목) 14:00~15:00	(주)한강 케이블TV	이권영 (광주대 교수)	이경숙(민) 권영세(한)	
	비초청 (7)	연설		4. 3(목) 15:00~15:20			김용승(평)	
동작구갑	초청	토론	HCN 동작방송	4. 5(토) 21:00~22:40	(주)HCN 동작방송	김민전 (경희대 교수)	전병현(민) 권기균(한)	
	비초청 (7)	연설		4. 5(토) 22:40~23:10			손상윤(박) 김학규(진) 배명선(평)	
동작구을	초청	대담	HCN 동작방송	4. 6(일) 21:00~21:30	(주)HCN 동작방송	유정아 (방송인)	김지희(노)	정동영(민) 정몽준(한)
	비초청 (7)	연설		4. 6(일) 21:30~22:00			나용집(기) 김종철(진) 정연중(통)	육윤호(평)
관악구갑	초청	토론	HCN 관악방송	4. 2(수) 21:30~22:55	(주)HCN 관악방송	이세진 (EBS이사)	유기홍(민) 김성식(한) 박명희(노) 성경훈(창)	
	비초청 (7)	연설		4. 2(수) 22:55~23:20			김 응(진) 송해건(평)	
관악구을	초청	토론	HCN 관악방송	4. 3(목) 21:30~22:55	(주)HCN 관악방송	박영웅 (한국기업 회장)	김희철(민) 김철수(한) 엄윤섭(노) 신장식(진)	
	비초청 (7)	연설		4. 3(목) 22:55~23:20			오영재(평) 임충섭(무)	
서초구갑	합동 (3)	연설	서강대 방송스튜디오	3.31(월) 11:03~11:36	(주)C&M 서초케이블, (주)HCN 서초방송	김왕식 (이화여대 교수)	박찬선(민) 양한별(국) 조병석(평)	이혜훈(한)
서초구을	합동 (3)	연설	서강대 방송스튜디오	3.31(월) 16:06~16:58	(주)C&M 서초케이블, (주)HCN 서초방송	김왕식 (이화여대 교수)	김 윤(민) 고승덕(한) 박천숙(노) 성순욱(평) 조남호(무)	
강남구갑	합동 (3)	연설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강당	4. 3(목) 22:00~23:13	(주)GS강남 방송	이상열 (세종대 석좌교수)	김성욱(민) 이종구(한) 엄원태(평) 권현성(무) 김원중(무) 박부서(무) 서상목(무)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강남구을	합동(3)	연설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강당	4. 4(금) 22:00~23:03	(주)GS강남 방송	이상열 (세종대 석좌교수)	최영록(민) 공성진(한) 신대철(선) 김재연(노) 신언직(진) 김미화(평)	
송파구갑	합동(3)	연설	고려대TV 방송국	3.31(월) 11:00~11:30	(주)C&M 송파케이블	정종기 (성결대 교수)	정 직(민) 박영아(한) 김원근(평)	
송파구을	합동(3)	연설	고려대TV 방송국	3.31(월) 16:00~16:30	(주)C&M 송파케이블	정종기 (성결대 교수)	장복심(민) 유일호(한) 이재혁(평)	
송파구병	합동(3)	연설	고려대TV 방송국	4. 1(화) 11:00~12:10	(주)C&M 송파케이블	정종기 (성결대 교수)	김성순(민) 이계경(한) 이재권(선) 김현중(노) 안명순(창) 성환부(평)	
강동구갑	초청	토론	고려대TV 방송국	4. 5(토) 11:00~11:56	(주)C&M 강동케이블	임주완 (아나운서)	송기정(민) 김충환(한)	박용규(선)
	비초청(7)	연설		4. 5(토) 12:20~12:30			박치웅(진)	신인선(평)
강동구을	초청	대담	고려대TV 방송국	4. 5(토) 15:00~15:39	(주)C&M 강동케이블	임주완 (아나운서)	심재권(민)	윤석용(한) 최형숙(노)
	비초청	미개최(후보자 불참)						최광길(평)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합동(3)	연설	부산MBC 스튜디오	3.29(토) 12:25~13:00	부산MBC	김영일 (신라대 교수)	정의화(한) 오경석(선) 정윤근(평)	
서구	합동(3)	연설	부산MBC 스튜디오	4. 3(목) 09:45~10:20	부산MBC	안동진 (아나운서)	조양환(한) 김복순(평) 유기준(무)	
영도구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3.29(토) 09:55~11:00	부산MBC	김영일 (신라대 교수)	김비오(민) 문제열(노) 김용원(무)	김형오(한)
	비초청(6)	연설		3.29(토) 12:10~12:25		안동진 (아나운서)	김무규(평)	
진구갑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3.30(일) 08:20~09:30	부산MBC	김영일 (신라대 교수)	정해정(민) 주선락(노)	허원제(한) 최우원(선)
	비초청(7)	연설		4. 1(화) 12:55~13:20			박종욱(평) 강동훈(무)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진구을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4. 2(수) 09:45~11:00	부산MBC	김영일 (신라대 교수)	이덕욱(민) 이종혁(한) 황백현(선) 민병렬(노)	
	비초청 (7)	연설		4. 3 (목) 10:20~10:45		안동진 (아나운서)	박주미(진) 박성열(평)	
동래구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4. 7(월) 09:45~11:00	부산MBC	김영일 (신라대 교수)	정상원(민) 오세경(한) 이진복(무)	
	비초청 (6)	연설		4. 7(월) 12:40~12:50		안동진 (아나운서)	박재은(평)	
남구갑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3.28(금) 10:50~11:55	KBS부산	김창룡 (인제대 교수)	주창근(민) 김정훈(한) 여민영(노)	
	비초청 (6)	연설		3.28(금) 14:10~14:25		김평래 (아나운서)	김익현(평)	
남구을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4. 6(일) 08:20~09:30	부산MBC	김영일 (신라대 교수)	정태윤(한) 박재호(무)	김무성(무)
	비초청 (6)	연설		4. 7(월) 13:10~13:25		안동진 (아나운서)	김인숙(평)	
북구 강서구갑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3.28(금) 19:30~20:10	KBS부산	김창룡 (인제대 교수)	전재수(민)	박민식(한)
	비초청 (6)	연설		3.28(금) 20:10~20:25		김평래 (아나운서)	임중보(평)	
북구 강서구을	합동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4. 1(화) 19:30~20:25	KBS부산	김창룡 (인제대 교수)	정진우(민) 박양수(진)	허태열(한) 박말식(평)
해운대구 기장군갑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4. 1(화) 09:45~11:00	부산MBC	김영일 (신라대 교수)	송관중(민) 이병희(선) 신지은(노)	서병수(한)
	비초청 (6)	연설	부산MBC 스튜디오	4.1(화) 12:40~12:55	부산MBC	안동진 (아나운서)	백인복(평)	
해운대구 기장군을	합동 (3)	연설	KBS부산 스튜디오	4. 7(월) 10:50~11:35	KBS부산	김창룡 (인제대 교수)	손현경(민) 안경률(한) 김세현(박) 김복남(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사하구갑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4. 3(목) 10:55~12:00	KBS부산	김창룡 (인제대 교수)	김종필(민) 현기환(한) 엄호성(박)	
	비초청 (6)	연설		4. 4(금) 08:25~08:40		김평래 (아나운서)	박재영(평)	
사하구을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4. 3(목) 22:00~23:00	KBS부산	김창룡 (인제대 교수)	조경태(민) 최거훈(한) 이희수(노)	
	비초청 (7)	연설		4. 4(금) 08:40~09:05		김평래 (아나운서)	배진탁(박) 신동국(평)	
금정구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4. 5(토) 09:55~11:00	부산MBC	김영일 (신라대 교수)	박승환(한) 이의엽(노) 김세연(무)	
	비초청 (6)	연설		4. 7(월) 12:55~13:10		안동진 (아나운서)	홍인배(평)	
연제구	초청	토론	KBS부산 스튜디오	4. 4(금) 19:30~20:20	KBS부산	김창룡 (인제대 교수)	김희정(한) 장귀선(노) 박대해(박)	
	비초청 (7)	연설		4. 7(월) 15:05~15:30		김평래 (아나운서)	이수석(평) 최제완(무)	
수영구	합동 (3)	연설	KBS부산 스튜디오	4. 4(금) 14:10~14:45	KBS부산	김평래 (아나운서)	박형준(한) 이재숙(평) 유재중(무)	
사상구	합동 (3)	연설	KBS부산 스튜디오	4. 2(수) 10:55~11:40	KBS부산	김평래 (아나운서)	장제원(한) 조차리(노) 강주만(박) 김명운(평)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초청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4. 8(화) 11:00~12:30	대구MBC	김중학 (MBC 정경부장)	박형룡(민) 배영식(한) 곽성문(선) 이인선(노) 이재용(무)	
	비초청 (7)	연설		4. 8(화) 12:30~13:00			유정화(평) 박헌경(무)	
동구갑	합동	토론	KBS대구 스튜디오	4. 3(목) 22:00~23:00	KBS대구	이창희 (KBS 심의위원)	주성영(한) 송영우(노) 전재용(평)	
동구을	합동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4. 7(월) 11:00~12:00	대구MBC	이창선 (KBS 보도국장)	유승민(한) 정동희(선) 배병철(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서구	합동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4 .4(금) 14:40~16:00	대구MBC	김환열 (MBC 편집부장)	이종현(한) 홍사덕(박) 장태수(진) 오세광(평)	
북구갑	초청	토론	KBS대구 스튜디오	4 .2(수) 14:10~15:25	KBS대구	이창희 (KBS 심의위원)	이현주(민) 이명규(한) 구본항(선)	
	비초청 (7)	연설		4 .2(수) 15:33~15:55			박영민(박) 김진철(평)	
북구을	합동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4 .1(화) 11:00~12:00	대구MBC	김종학 (MBC 정경부장)	서상기(한) 박원진(평)	
수성구갑	합동	토론	KBS대구 스튜디오	4 .3(목) 10:00~11:25	KBS대구	주경애 (KBS 편집부장)	이한구(한) 이연재(진) 이대주(평)	
수성구을	합동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4 .4(금) 22:50~24:00	대구MBC	이창선 (MBC 보도국장)	주호영(한) 신귀남이(평) 유시민(무)	
달서구갑	초청	대답	KBS대구 스튜디오	4 .7(월) 10:00~10:55	KBS대구	주경애 (KBS 편집부장)	홍지만(한)	박종근(박)
	비초청 (7)	연설		4 .7(월) 11:05~11:25			황성수(평) 김충환(무)	
달서구을	초청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4 .3(목) 13:50~14:45	대구MBC	김종학 (MBC 정경부장)	권영범(한) 이해봉(무)	
	비초청 (6)	연설		4 .3(목) 14:45~15:00			육태명(평)	
달서구병	합동 (1)	연설	대구MBC 스튜디오	4 .2(수) 11:00~11:40	대구MBC	김종학 (MBC 정경부장)	유재한(한) 조원진(박) 김영석(평)	
달성군	합동 (3)	연설	KBS대구 스튜디오	3.31(월) 15:40~16:00	KBS대구	이창희 (심의위원)	노윤조(노) 임정현(평)	박근혜(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옹진군	초청	토론	ICN인천방송 스튜디오	4 .4(금) 10:30~12:30	㈉Tbroad 서해방송	성기철 (ICN 보도부 차장)	한광원(민) 박상은(한) 이세영(무)	
	비초청 (7)	연설		4 .4(금) 12:30~13:00			문성진(진) 서기석(평)	
남구갑	합동 (3)	연설	남인천방송 스튜디오	4 .1(화) 10:00~10:40	㈉남인천 방송	김동주 (NIB 방송실장)	유필우(민) 홍일표(한) 김인창(평)	
남구을	합동 (3)	연설	남인천방송 스튜디오	4 .2(수) 10:00~10:50	㈉남인천 방송	김동주 (NIB 방송실장)	박규홍(민) 윤상현(한) 민만기(선) 홍성순(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연수구	초청	토론	남인천방송 스튜디오	4. 3(금) 10:00~11:35	㈜남인천 방송	김동주 (NIB 방송실장)	문영철(민) 황우여(한) 김성중(선)	
	비초청 (6)	연설		4. 3(금) 11:35~11:47			이준도(평)	
남동구갑	초청	토론	ICN인천방송 스튜디오	4. 2(수) 10:30~12:30	ICN인천방송, (주)Tbroad 남동방송	성기철 (ICN 보도부 차장)	신명순(민) 신창현(노)	이윤성(한)
	비초청 (6)	연설		4. 2(수) 12:30~13:00			차윤희(평)	
남동구을	합동 (2)	연설	ICN인천방송 스튜디오	4. 3(목) 10:30~11:30	ICN인천방송, (주)Tbroad 남동방송	성기철 (ICN 보도부 차장)	조전혁(한) 김석우(선) 배진교(노) 조기중(창) 안갑동(평) 이호웅(무) 이원복(무)	
부평구갑	초청	토론	CJ 케이블방송 스튜디오	4. 5(토) 10:30~12:20	(주)CJ케이블 넷 복인천방송	전영우 (인천대 교수)	문병호(민) 조진형(한) 권순덕(선) 한상욱(노)	
	비초청 (6)	연설		4. 5(토) 12:20~12:30			김영순 (인하대 교수)	장영희(평)
부평구을	초청	토론	CJ 케이블방송 스튜디오	4. 6(일) 20:30~21:50	(주)CJ케이블 넷 복인천방송	전영우 (인천대 교수)	홍영표(민) 구본철(한) 조용균(선)	
	비초청 (7)	연설		4. 6(일) 21:50~22:10			김영순 (인하대 교수)	홍대회(평) 진영광(무)
계양구갑	초청	토론	CJ 케이블방송 스튜디오	4. 5(토) 20:30~21:48	(주)CJ케이블 넷 복인천방송	이준한 (인천대 교수)	신학용(민) 김해수(한) 한정애(노)	김유동(선)
	비초청 (6)	연설		4. 5(토) 21:48~21:58			왕계순(평)	
계양구을	초청	토론	CJ 케이블방송 스튜디오	4. 6(일) 10:30~12:09	(주)CJ케이블 넷 복인천방송	이준한 (인천대 교수)	송영길(민) 이상권(한) 박희룡(선) 박인숙(노)	
	비초청 (6)	연설		4. 6(일) 12:09~12:19			송광석(평)	
서구 강화군갑	초청	토론	ICN인천방송 스튜디오	4. 4(금) 10:30~11:42	ICN인천방송, (주)Tbroad 새롬방송	성기철 (ICN 보도부 차장)	김교홍(민) 이학재(한)	
	비초청 (7)	연설		4. 4(금) 11:43~12:05			이상구(진) 홍승석(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서구 강화군을	초청	토론	ICN인천방송 스튜디오	4. 2(수) 14:00~15:50	ICN인천방송, Tbroad 서해방송, 새롬방송	성기철 (ICN 보도부 차장)	서원선(민) 이규민(한) 박용호(무) 이경재(무)	
	비초청 (6)	연설		4. 2(수) 15:50~16:00			정혁순(평)	김윤영(무)
광주광역시								
동구	초청	토론	광주MBC 2층 공개홀	3. 31(월) 23:10~24:20	광주MBC	김형주 (광주MBC 사업위원)	박주선(민) 김태욱(한) 구봉우(선)	
	비초청 (6)	연설		3. 31(월) 24:20~24:30			김공수(평)	
서구갑	초청	토론	KBS광주 1층 공개홀	4. 7(월) 10:00~11:20	KBS광주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 대학원장)	조영택(민) 정용화(한)	
	비초청 (7)	연설		4. 7(월) 11:20~12:00			김남희(진) 문상필(평) 국충현(무) 강주일(무)	
서구을	합동	토론	KBS광주 1층 공개홀	4. 7(월) 14:10~16:00	KBS광주	주원 (KBS 쟁점토론 진행자)	김영진(민) 정순길(한) 오병윤(노) 이동규(평)	
남구	합동	토론	광주MBC 2층 공개홀	4. 5(토) 13:10~15:25	광주MBC	김형주 (광주MBC 사업위원)	지병문(민) 노영복(한) 공석윤(평) 강도석(무) 강운태(무)	
북구갑	초청	토론	KBS광주 1층 공개홀	4. 3(목) 10:00~11:30	KBS광주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 교수)	강기정(민) 이가연(한) 이봉훈(노)	
	비초청 (7)	연설		4. 3(목) 11:30~12:00			최한규(평) 김정진(무) 한화갑(무)	
북구을	합동	토론	KBS광주 1층 공개홀	4. 3(목) 14:10~16:00	KBS광주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 교수)	김재균(민) 김천국(한) 김현정(노) 양길문(평)	
광산구갑	초청	토론	광주MBC 2층 공개홀	3. 30(일) 14:10~16:00	광주MBC	김형주 (광주MBC 사업위원)	김동철(민) 조재현(한) 조삼수(노) 송병태(무)	
	비초청 (6)	연설		3. 30(일) 16:00~16:10			박정수(평)	
광산구을	초청	토론	광주MBC 2층 공개홀	4. 4(금) 13:50~15:20	광주MBC	김형주 (광주MBC 사업위원)	이용섭(민) 강경수(한) 장연주(노)	
	비초청 (5)	연설		4. 4(금) 15:20~15:30			김경옥(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대전광역시								
동구	초청	토론	TJB 공개홀	4. 3(목) 17:35~19:00	TJB 대전방송	이창기 (대전대 교수)	선병렬(민) 윤석만(한) 임영호(선) 이병구(노)	
	비초청 (6)	연설		4. 3(목) 19:00~19:10			신기영(평)	
중구	초청	토론	TJB 공개홀	4. 4(금) 17:28~18:35	TJB 대전방송	이창기 (대전대 교수)	유배근(민) 강창희(한) 권선택(선)	
	비초청 (6)	연설		4. 4(금) 18:37~18:46			이현영(평)	
서구갑	초청	토론	TJB 공개홀	4. 7(월) 12:20~13:40	TJB 대전방송	이창기 (대전대 교수)	박병석(민) 한기운(한) 백운교(선) 이영규(박)	
	비초청 (7)	연설		4. 7(월) 13:40~14:00			길준구(평) 권석원(무)	
서구을	초청	토론	TJB 공개홀	4. 7(월) 17:30~18:40	TJB 대전방송	이창기 (대전대 교수)	박범계(민) 나경수(한) 이재선(선)	
	비초청 (7)	연설		4. 7(월) 18:40~19:10			서종환(박) 유지혁(평) 이제윤(무)	
유성구	초청	토론	KBS대전 스튜디오	4. 1(화) 10:00~11:47	KBS대전	조찬래 (충남대 교수)	정병욱(민) 송병대(한) 이상민(선) 조영재(박) 이병령(무)	
	비초청 (6)	연설		4. 1(화) 11:48~11:59			정만희(평)	
대덕구	초청	토론	KBS대전 스튜디오	4. 7(월) 10:00~11:25	KBS대전	정순오 (한남대 교수)	김원웅(민) 이창섭(한) 김창수(선) 김영덕(노)	
	비초청 (6)	연설		4. 7(월) 11:25~11:35			최효정(평)	
울산광역시								
중구	초청	토론	울산MBC 공개스튜디오	4. 6(일) 08:20~09:25	울산MBC	김진영 (영산대 교수)	임동호(민) 정갑윤(한) 천병태(노)	
	비초청 (6)	연설		4. 6(일) 09:25~09:30			김도희 (울산대 교수)	이상용(평)
남구갑	초청	토론	울산KBS 스튜디오	4. 1(화) 23:30~00:45	KBS울산	이경찬 (영산대 교수)	최병국(한) 이영순(노)	
	비초청 (6)	연설		4. 2(수) 00:45~00:55			박덕원(평)	
남구을	초청	토론	울산KBS 스튜디오	4. 2(수) 23:30~00:45	KBS울산	이경찬 (영산대 교수)	김기현(한) 김진석(노)	
	비초청 (6)	연설		4. 3(목) 00:45~00:55			이경순(평)	이동해(무)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북구	초청	토론	울산KBS 스튜디오	4. 3(목) 23:30~01:20	KBS울산	이경찬 (영산대 교수)	윤두환(한) 이영희(노) 최윤주(박)	
	비초청 (6)	연설		4. 4(금) 01:20~01:30			전병일(평)	
동구	합동	토론	울산MBC 공개홀(1층)	3.31(월) 18:30~19:45	울산MBC	김진영 (영산대 교수)	안효대(한) 박정주(박) 노옥희(진) 이정문(평)	
울주군	초청	토론	울산MBC 공개홀(1층)	3.30(일) 08:20~09:25	울산MBC	김진영 (영산대 교수)	이채익(한) 강길부(무) 이정훈(무)	
	비초청 (6)	연설		3.30(일) 09:25~09:30			김도희 (울산대 교수)	김성환(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합동 (3)	연설	수원방송 스튜디오	3.31(월) 22:00~22:40	㈜Tbroad 수원방송	장성근 (변호사)	이찬열(민) 박종희(한) 정인석(평)	
수원시 권선구	초청	토론	수원방송 스튜디오	4. 6(일) 22:00~23:20	㈜Tbroad 수원방송	장성근 (변호사)	이기우(민) 손중학(선) 이성윤(노)	정미경(한)
	비초청 (7)	연설		4. 6(일) 23:20~23:50			이상진(박) 신연경(평)	
수원시 팔달구	합동 (3)	연설	수원방송 스튜디오	4. 1(화) 22:00~22:30	㈜Tbroad 수원방송	장성근 (변호사)	이대의(민) 남경필(한) 정종호(평)	
수원시 영통구	초청	토론	수원방송 스튜디오	4. 2(수) 22:00~23:00	㈜Tbroad 수원방송	유광재 (수원방송 보도제작 국장)	김진표(민) 박찬숙(한)	임희수(선)
	비초청	토론		4. 2(수) 23:00~24:00			이중철(평) 최윤호(무)	
성남시 수정구	초청	토론	아름방송 스튜디오	4. 3(목) 16:30~18:00	㈜한국CATV 아름방송	정용석 (FM분당 대표)	김태년(민) 김경수(선) 김미희(노)	신영수(한)
	비초청 (7)	연설		4. 3(목) 18:10~18:55			박용승(박) 최상면(직) 김경립(평) 이윤수(무)	
성남시 중원구	초청	토론	아름방송 스튜디오	4. 1(화) 16:30~18:10	㈜한국CATV 아름방송	정용석 (FM분당 대표)	조성준(민) 신상진(한) 정형주(노)	김기평(박)
	비초청 (7)	연설		4. 1(화) 18:25~18:38			권혁서(평)	
성남시 분당구갑	합동 (3)	연설	아름방송 스튜디오	3.31(월) 16:30~17:05	㈜한국CATV 아름방송	정용석 (FM분당 대표)	이재명(민) 고흥길(한) 최정환(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성남시 분당구을	합동(3)	연설	아름방송 스튜디오	4. 2(수) 16:30~17:06	㈜한국CATV 아름방송	송태수 (경원대 교수)	김종우(민) 임태희(한) 최진태(평)	
의정부시갑	합동(3)	연설	우리방송 스튜디오	4. 5(토) 17:00~17:40	우리방송, 나라방송	소성규 (대진대 교수)	문희상(민) 김상도(한) 김인수(노) 김경태(평)	
의정부시을	합동(3)	연설	나라방송 스튜디오	4. 5(토) 21:00~22:00	나라방송, 우리방송	문태욱 (아나운서)	강성종(민) 박인균(한) 송우근(선) 민태호(노) 목영대(진) 김동호(평)	
안양시 만안구	초청	토론	ABC방송사 스튜디오	4. 3(목) 18:00~19:44	㈜Tbroad ABC방송	서정미 (안양대 교수)	이종걸(민) 정용대(한) 홍두화(선) 이시내(노)	
	비초청(6)	연설		4. 3(목) 19:48~20:10			박정희(평)	
안양시 동안구갑	합동(3)	연설	ABC방송사 스튜디오	4. 5(토) 18:00~18:50	㈜Tbroad ABC방송	정종기 (성결대 교수)	이석현(민) 최종찬(한) 고 강(선) 박원용(박) 유태순(평)	
안양시 동안구을	합동(3)	연설	ABC방송사 스튜디오	4. 6(일) 18:00~18:30	㈜Tbroad ABC방송	정종기 (성결대 교수)	이정국(민) 심재철(한) 이석현(평)	
부천시 원미구갑	초청	토론	경기예고 아트홀	4. 1(화) 20:30~22:30	㈜CJ케이블넷 드림씨티방송	최영목 (성공회대 교수)	김경협(민) 임해규(한) 안동선(선) 백성기(창)	
	비초청(6)	연설		4. 1(화) 22:30~22:40			유경영(평)	
부천시 원미구을	초청	토론	경기예고 아트홀	4. 2(수) 20:30~22:30	㈜CJ케이블넷 드림씨티방송	김민배 (인하대 학장)	배기선(민) 이사철(한) 최순영(노)	
	비초청(7)	연설		4. 2(수) 22:30~22:50			박성희(박) 유정하(평)	
부천시 소사구	초청	토론	경기예고 아트홀	4. 4(금) 20:30~22:10	㈜CJ케이블넷	강치원 (강원대 교수)	김만수(민) 차명진(한) 전덕생(선) 이혜원(노)	
	비초청(7)	연설		4. 4(금) 22:10~22:30			박종인(평) 길영수(무)	
부천시 오정구	초청	토론	경기예고 아트홀	4. 3(목) 22:30~22:00	㈜CJ케이블넷	정은길 (아나운서)	원혜영(민) 박종운(한)	
	비초청(6)	연설		4. 3(목) 22:00~22:10			이관성 (방송기자)	권기혁(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광명시갑	합동	토론	안산상공회의소 4층대회의실	4. 3(목) 20:00~21:59	㈜Tbroad 한빛방송	이현정 (변호사)	백재현(민) 정재학(한) 임종금(선) <u>엄양일(평)</u>		
광명시을	초청	토론	안산상공회의소 4층대회의실	4. 6(일) 20:00~21:18	㈜Tbroad 한빛방송	이현정 (변호사)	양기대(민) 전재희(한) 이병렬(노)		
	비초청 (6)	연설		4. 6(일) 21:18~21:28			송종익(평)		
평택시갑	초청	토론	기남방송 스튜디오	3.31(월) 22:30~23:50	㈜Tbroad 기남방송	이원희 (한경대 교수)	우제항(민) 원유철(한)		
	비초청 (6)	연설		3.31(월) 23:50~24:00			연인기(평)		
평택시을	초청	토론	기남방송 스튜디오	4. 1(화) 22:30~24:17	㈜Tbroad 기남방송	이원희 (한경대 교수)	정장선(민) 박상길(한) 이현주(노)		
	비초청 (6)	연설		4. 2(수) 00:17~00:27			전주원(평)		
양주· 동두천시	합동 (3)	연설	우리방송 스튜디오	4. 6(일) 17:00~17:40	우리방송, 나라방송	소성규 (대진대 교수)	정성호(민) 김성수(한) 우주호(평)		
안산시 상록구갑	초청	토론	한빛방송 4층대회의실	4. 7(월) 20:00~22:00	㈜Tbroad 한빛방송	서정훈 (안산뉴스 기자)	전해철(민) 이희수(한) 임종영(노) 김영한(무)		
	비초청 (7)	연설		4. 7(월) 22:00~22:20			윤정홍(구국) 엄상록(평)		
안산시 상록구을	초청	토론	한빛방송 4층대회의실	3.31(월) 20:00~22:00	㈜Tbroad 한빛방송	서정훈 (안산뉴스 기자)	김재목(민) 이진동(한) 홍장표(박) 임종인(무)		
	비초청 (7)	연설		3.31(월) 22:00~22:20			이재문(평) 최창한(무)		
안산시 단원구갑	초청	토론	안산상공회의소 4층대회의실	4. 2(수) 14:00~16:00	㈜Tbroad 한빛방송	김정기 (한양대 교수)	천정배(민) 허 승(한) 박미진(노)		
	비초청 (6)	연설		4. 2(수) 16:20~16:30			이희숙(평)		
안산시 단원구을	초청	미개최(후보자 불참)						제종길(민) 박순자(한)	
	비초청 (7)	연설	안산상공회의소 4층대회의실	4. 4(금) 14:00~14:10	㈜Tbroad 한빛방송	김정기 (한양대 교수)	김남준(평)		
고양시 덕양구갑	합동 (4)	연설	경기케이블 스튜디오	4. 4(금) 22:00~23:06	㈜C&M 경기케이블	최원익 (변호사)	한평석(민) 손범규(한) 이국현(선) 심상정(진) 김현수(평) 김태경(무)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고양시 덕양구울	합동 (4)	연설	경기케이블 스튜디오	4. 5(토) 20:30~21:15	㈜C&M 경기케이블	최원익 (변호사)	최 성(민) 김태원(한) 이은영(노) 정 미(평)	
고양시 일산동구	합동 (4)	연설	경기케이블 스튜디오	4. 5(토) 22:00~22:50	㈜C&M 경기케이블	남광호 (변호사)	한명숙(민) 백성운(한) 김형진(박) 유형목(평) 소병규(무)	
고양시 일산서구	합동 (4)	연설	경기케이블 스튜디오	4. 6(일) 20:30~21:10	㈜C&M 경기케이블	김갑성 (교수)	김현미(민) 김영선(한) 김형오(선) 김승석(평)	
의왕·과천시	합동 (3)	연설	ABC방송사 스튜디오	4. 2(수) 18:00~18:40	㈜Tbroad ABC방송	박종수 (수원대 교수)	이승채(민) 안상수(한) 김형탁(진) 최창국(평)	
구리시	합동 (3)	연설	남양주시청 다산홀	4. 6(일) 13:00~13:54	㈜C&M 경기케이블	이창현 (국민대 교수)	윤호중(민) 주광덕(한) 조재호(선) 백현중(진) 정익철(평)	
남양주시갑	초청	대담	남양주시청 다산홀	4. 5(토) 10:00~10:35	㈜C&M 경기케이블	이창현 (국민대 교수)	최재성(민)	심장수(한)
	비초청 (7)	연설		4. 5(토) 10:36~10:46		곽윤전 (언론인)	신흥균(평)	박상대(박)
남양주시을	합동 (2)	연설	남양주시청 다산홀	4. 5(토) 13:00~14:13	㈜C&M 경기케이블	곽윤전 (언론인)	박기춘(민) 김연수(한) 조정무(선) 김창희(노) 이진호(창) 조현근(박) 양영택(평)	
오산시	초청	토론	수원방송 스튜디오	4. 3(목) 22:00~23:20	㈜Tbroad 수원방송	이원희 (한경대 교수)	안민석(민) 신정숙(노)	최순식(한) 박동우(선)
	비초청 (6)	연설		4. 3(목) 23:20~23:30			이욱환(평)	
화성시갑	합동 (3)	연설	수원방송 스튜디오	4. 4(금) 22:00~22:50	㈜Tbroad 수원방송	장성근 (변호사)	송옥주(민) 김성희(한) 조준호(노) 박윤구(박) 황재성(평)	
화성시을	합동 (3)	연설		4. 5(토) 22:00~22:50			이원욱(민) 박보환(한) 이상무(노) 신광용(평)	
시흥시갑	초청	토론	한빛방송 4층대회의실	4. 5(토) 20:00~21:10	㈜Tbroad 한빛방송	신현덕 (산업 기술대 교수)	백원우(민) 함진규(한)	
	비초청 (6)	연설		4. 5(토) 21:10~21:20			권한숙(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시흥시을	초청	토론	한빛방송 4층대회의실	4. 1(화) 20:00~21:40	㈜Tbroad 한빛방송	신현덕 (산업 기술대 교수)	조정식(민) 김양규(한) 김수정(노)	
	비초청 (6)	연설		4. 1(화) 21:40~21:50			김현실(평)	
군포시	합동 (3)	연설	ABC방송사 스튜디오	4. 1(화) 18:00~18:30	㈜Tbroad ABC방송사	유문중 (한국매니 페스트실천 본부 사무총장)	김부겸(민) 유영하(한) 김현준(평)	
하남시	합동 (3)	연설	남양주시청 다산홀	4. 5(토) 19:00~19:40	㈜C&M 경동케이بل	정용석 (FM분당 대표)	문학진(민) 이현재(한) 유성근(선) 윤찬욱(평)	
파주시	합동 (4)	연설	㈜C&M 경기케이بل	4. 4(금) 20:30~ 21:10	㈜C&M 경기케이بل	박재숙 (파주시 YWCA 회장)	윤후덕(민) 황진하(한) 안소희(노) 김석찬(평)	
여주군· 이천시	초청	토론	기남방송 스튜디오	4. 6(일) 22:30~24:30	㈜T-broad 기남방송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문환(민) 이법관(한) 이희규(선) 김선정(노) 이규택(박) 유승우(무)	
	비초청 (7)	연설		4. 6(일) 16:12~16:22			김치중(평)	신철희(무)
용인시 처인구	초청	토론	기남방송 스튜디오	4. 5(토) 22:30~24:00	㈜T-broad 기남방송	최우철 (아카데미 대표)	우계창(민) 여유현(한)	
	비초청 (7)	연설		4. 6(일) 00:00~00:20			이우현(박) 최승길(평)	
용인시 수지구	합동	토론	기남방송 스튜디오	4. 3(목) 22:30~24:15	㈜T-broad 기남방송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중희(민) 윤건영(한) 한선교(무)	
용인시 기흥구	초청	토론	기남방송 스튜디오	4. 4(금) 22:30~24:00	㈜T-broad 기남방송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재일(민) 박준선(한) 주경희(노)	
	비초청 (7)	연설		4. 5(토) 24:00~24:20			민학기(박) 방철웅(평)	
안성시	합동 (3)	연설	기남방송 스튜디오	4. 2(수) 22:30~23:03	㈜T-broad 기남방송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학용(한) 이병호(선) 하정호(평)	
김포시	초청	토론	CJ케이بل넷 방송스튜디오	4. 5(토) 20:30~22:30	CJ케이بل넷	정은길 (TBS교통 방송 아나운서)	김창집(민) 유정복(한) 김두섭(선)	
	비초청 (7)	연설		4. 5(토) 22:30~22:50			민원통(직) 신동관(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광주시	합동	토론	남양주시청 다산홀	4. 6(일) 10:00~12:00	(주)C&M 경동케이블	정용석 (FM분당 대표)	소병훈(민) 정진섭(한) 이건희(선) <u>이청은(평)</u>	
포천시	초청	토론	나라방송 스튜디오	4. 6(일) 21:00~22:38	나라방송, 우리방송	김환철 (경민대 교수)	장명재(민) 김영우(한) 박윤국(무)	
	비초청 (6)	연설		4. 6(일) 22:38~22:47			김성규(평)	
양평군 가평군	합동	토론	남양주시청 다산홀	4. 5(토) 16:00~17:40	(주)C&M 경동케이블	정용석 (FM분당 대표)	장봉익(민) 정병국(한) <u>신진이(평)</u>	
강원도								
춘천시	초청	토론	춘천KBS 스튜디오	4. 1(화) 10:10~11:50	춘천KBS 춘천MBC	김기석 (강원대 교수)	최 윤(민) 허 천(한) 유종수(선) 엄재철(노)	
	비초청 (7)	연설		4. 1(화) 11:50~12:00			전찬홍(평) 유현규(무)	
원주시	합동	토론	원주MBC 스튜디오	4. 1(화) 10:00~12:00	원주MBC 원주KBS	양준모 (연세대 교수)	박우순(민) 이계진(한) 유영돈(선) 김광호(노) <u>박원근(평)</u>	
강릉시	초청	토론	강릉MBC 스튜디오	4. 1(화) 10:00~11:45	강릉MBC 강릉KBS	고민수 (강릉대 교수)	홍준일(민) 심재엽(한) 염우철(노) 홍재경(창) 최욱철(무)	
	비초청 (7)	연설		4. 1(화) 11:45~11:55			김봉래(진) 박삼하(평)	
동해시 삼척시	합동	토론	삼척MBC 스튜디오	4. 2(수) 10:00~12:00	삼척MBC 강릉KBS	정정화 (강원대 교수)	한호연(민) 정인억(한) 정문기(평) 최연희(무)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초청	토론	강릉KBS 스튜디오	4. 2(수) 14:10~15:47	강릉KBS 강릉MBC	최철재 (동우대 교수)	이동기(민) 조동룡(한) 황정기(선) 이성국(노) 송훈석(무)	
	비초청 (6)	연설		4. 2(수) 15:47~15:50			최효섭(평)	
홍천군 횡성군	초청	토론	춘천KBS 스튜디오	4. 2(수) 14:20~15:55	춘천KBS 춘천MBC 원주KBS 원주MBC	김기석 (강원대 교수)	조일현(민) 황영철(한) 원종익(선)	
	비초청 (6)	연설		4. 2(수) 15:55~16:00			황보군(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합동	토론	원주KBS 스튜디오	3. 31(월) 14:00~16:00	원주KBS 원주MBC 강릉KBS 삼척MBC	유오중 (한라대 교수)	이광재(민) 최동규(한) <u>김승갑(평)</u>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초청	토론	춘천MBC 스튜디오	4. 2(수) 10:00~11:48	춘천MBC 춘천KBS	김기석 (강원대 교수)	이용삼(민) 박세환(한) 이부균(선) 서미화(노)	
	비초청 (6)	연설		4. 2(수) 11:48~11:53			김경모(평)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합동	토론	KBS청주 공개홀	4. 4(금) 23:30~01:15	KBS청주	엄태석 (서원대 교수)	홍재형(민) 한대수(한) 김현문(선) <u>김인식(평)</u> <u>채영만(무)</u>	
청주시 홍덕구갑	초청	토론	청주MBC 공개홀	3. 29(토) 22:50~24:35	청주MBC	최남식 (청주MBC 아나운서)	오계세(민) 윤경식(한) 최현호(선) 장우정(노)	
	비초청 (7)	연설		3. 31(월) 13:35~13:55			이인선(진) 윤인환(평)	
청주시 홍덕구을	초청	토론	청주MBC 공개홀	4. 5(토) 22:50~24:35	청주MBC	최남식 (청주MBC 아나운서)	노영민(민) 송태영(한) 오효진(선) 정남득(노) 김준환(박)	
	비초청 (6)	연설		3. 31(월) 14:05~14:15			정해철(평)	
충주시	합동	토론	KBS충주 공개홀	4. 3(목) 23:30~01:05	KBS충주 KBS청주	최일지 (KBS충주 기자)	이시중(민) 윤진식(한) 김선애(노) 최영일(창) <u>심길래(평)</u>	
제천시 단양군	합동	토론	충주MBC 공개홀	3. 31(월) 23:10~24:30	충주MBC	박길용 (세명대 교수)	송광호(한) 정우택(선) 박상은(노) <u>한인수(평)</u> <u>이근규(무)</u>	
청원군	합동	토론	KBS청주 공개홀	3. 28(금) 23:30~01:05	KBS청주	엄태석 (서원대 교수)	변재일(민) 오성균(한) 장한량(선) <u>손병호(평)</u>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합동	토론	KBS청주 공개홀	4. 1(화) 23:30~01:25	KBS청주	엄태석 (서원대 교수)	김서용(민) 심규철(한) 이용희(선) <u>지준범(평)</u>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합동	토론	청주MBC 공개홀	4. 7(월) 23:10~24:35	청주MBC 충주MBC	최남식 (청주MBC 아나운서)	김종률(민) 김경희(한) 송석우(선) 김종호(박) <u>박상규(평)</u>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충청남도								
천안시갑	합동	토론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3.31(월) 12:20~13:40	TJB대전방송	김홍진 (순천향대 교수)	양승조(민) 전용학(한) 도병수(선) 고종원(평)	
천안시을	초청	토론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3.31(월) 17:35~19:10	TJB대전방송	김홍진 (순천향대 교수)	박완주(민) 김호연(한) 박상돈(선) 선춘자(노)	
	비초청 (6)	연설		3.31(월) 19:10~19:20				
공주시 연기군	초청	토론	KBS대전 스튜디오	4. 2(수) 10:00~11:48	KBS대전	김용세 (대전대 교수)	김용명(민) 오병주(한) 심대평(선) 한준혜(노)	
	비초청 (6)	연설		4. 2(수) 11:50~12:00				
보령시 서천군	합동 (3)	연설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4. 1(화) 17:35~18:15	TJB대전방송	김정순 (보령시 토론위 위원장)	조이환(민) 김태흠(한) 류근찬(선) 민승기(평)	
아산시	초청	토론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4. 1(화) 12:20~13:30	TJB대전방송	이충재 (대전YMCA 사무총장)	강훈식(민) 이훈규(한) 이명수(선)	
	비초청 (6)	연설		4. 1(화) 13:30~13:40				
서산시 태안군	초청	토론	충남방송 스튜디오	4. 3(목) 14:00~15:10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	신기원 (신성대 교수)	문석호(민) 김병목(한) 변웅전(선)	
	비초청 (6)	연설		4. 3(목) 16:00~16:10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초청	토론	KBS대전 스튜디오	4. 3(목) 10:00~11:40	KBS대전	이영애 (단국대 교수)	양승숙(민) 김영갑(한) 신삼철(선) 김범명(무) 이인제(무)	
	비초청 (7)	연설		4. 3(목) 11:41~11:59				
부여군 청양군	초청	토론	TJB대전방송 스튜디오	4. 2(수) 17:35~18:25	TJB대전방송	김창규 (교수)	김학원(한) 이진삼(선) 김용갑(평) 권오창(무) 이상일(무)	
	비초청 (7)	연설		4. 2(수) 18:25~18:55				
홍성군 예산군	초청	토론	KBS대전 공개홀	3.31(월) 14:10~15:20	KBS대전	이영애 (단국대교수)	홍문표(한) 유병학(창)	이회창(선)
	비초청 (6)	연설		3.31(월) 15:20~15:30				
당진군	초청	토론	충남방송 스튜디오	4. 1(화) 20:20~21:20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	신기원 (신성대교수)	정덕구(한) 김낙성(선) 고영석(기) 임성대(진) 이한재(평)	
	비초청 (7)	연설		4.1(화) 22:00~22:30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갑	합동	토론	KBS전주 공개홀	4. 1(화) 10:00-11:45	전주KBS	김승환 (전북대 교수)	장영달(민) <u>곽재남(한)</u> 이강욱(선) <u>이무영(무)</u> <u>유철갑(무)</u>	양운성(평)
전주시 완산구을	합동	토론	KBS전주 공개홀	4. 2(수) 10:00-11:45	전주KBS	김승환 (전북대 교수)	장세환(민) <u>이훈석(평)</u> 김완자(무) <u>심영배(무)</u>	김정옥(한)
전주시 덕진구	합동	토론	전주MBC 공개홀	4. 2(수) 13:35~15:10	전주MBC	신기현 (전북대 교수)	김세웅(민) <u>염경석(진)</u> <u>김두형(평)</u> <u>이창승(무)</u>	최재훈(한)
군산시	초청	토론	MBC 공개홀	4. 4(금) 14:20-16:00	전주MBC	신기현 (전북대 교수)	강봉균(민) <u>이종영(한)</u> <u>강현욱(무)</u>	
	비초청 (6)	연설	MBC 공개홀	4. 4(금) 14:20-16:00			이근옥(평)	
익산시갑	합동	토론	MBC 공개홀	3.31(월) 14:15-16:00	MBC	신기현 (전북대 교수)	<u>이춘석(민)</u> <u>임석삼(한)</u> <u>이철재(평)</u> <u>강익현(무)</u>	
익산시을	초청	토론	KBS 공개홀	3. 28(금) 10:00-11:15	KBS	김승환 (전북대 교수)	조배숙(민) <u>김영배(한)</u> <u>조진권(노)</u>	
	비초청 (7)	연설		3. 28(금) 11:20~11:50			<u>김금산(평)</u> <u>김상기(무)</u> <u>박경철(무)</u> <u>황 현(무)</u>	
정읍시	합동	토론	KBS전주 공개홀	4. 8(화) 10:00-11:45	KBS전주	김승환 (전북대 교수)	장기철(민) <u>이남철(한)</u> <u>김상휴(평)</u> <u>유성엽(무)</u>	
남원시 순창군	합동	토론	KBS전주 공개홀	4. 7(월) 10:00-11:50	KBS전주	김승환 (전북대 교수)	이강래(민) <u>유병수(한)</u> <u>황의돈(선)</u> <u>설용수(평)</u> <u>김환태(무)</u> <u>최진영(무)</u>	
김제시 완주군	합동	토론	전주MBC 공개홀	4. 3(목) 14:15-16:00	전주MBC	신기현 (전북대 교수)	<u>최규성(민)</u> <u>정영환(한)</u> <u>하연호(노)</u> <u>이윤형(평)</u> <u>이돈승(무)</u> <u>이중석(무)</u> <u>최상현(무)</u>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초청	미개최 (후보자 불참)						정세균(민) 장용진(한) 박병관(선)
	비초청	미개최 (후보자 불참)						최대식(평)
고창군 부안군	합동 (3)	연설	MBC 공개홀	4. 1(화) 13:30~13:55	MBC	신기현 (전북대 교수)	김춘진(민) <u>서동주(평)</u>	김종훈(한)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전라남도								
목포시	초청	토론	KBS목포 공개홀	3. 31(월) 14:10~13:50	KBS목포 목포MBC	박종두 (목포대 교수)	정영식(민) 친성복(한) 윤소하(노) 박지원(무) 이상열(무)	
	비초청 (6)	연설		3. 31(월) 13:50~14:00			-	최승규(평)
여수시갑	초청	토론	KBS순천 공개홀	4. 2(수) 14:20~15:20	KBS순천	임정섭 (KBS 아나운서)	김성곤(민) 김미경(진)	주봉심(한)
	비초청 (6)	연설		4. 2(수) 15:20~15:30			주해성(평)	
여수시을	초청	토론	여수MBC 공개홀	3.31(월) 12:40~14:10	여수MBC	복문수 (전남대 교수)	주승용(민) 심정우(한) 김형운(노)	
	비초청 (6)	연설		3.31(월) 14:10~14:20			박귀인(평)	
순천시	합동	토론	KBS순천 스튜디오	4. 2(수) 23:30~01:30	KBS순천	임정섭 (KBS 아나운서)	서갑원(민) 이수근(노) <u>이정주(평)</u>	김기룡(한)
나주시 화순군	초청	토론	광주MBC 공개홀	4. 2(수) 14:20~15:00	광주MBC	김형주 (MBC 사업위원)	이광웅(선) 전종덕(노)	최인기(민) 김창호(한)
	비초청 (6)	연설	광주MBC 뉴스스튜디오	4. 2(수) 15:00~15:10			김재곤(평)	
광양시	초청	토론	여수MBC 공개홀	4. 2(수) 14:20~15:50	여수MBC	김준옥 (전남대 교수)	우윤근(민) 김광영(한) 유현주(노)	
	비초청 (7)	연설		4. 2(수) 15:50~16:20			김원빈(평) 이옥재(무) 정병훈(무)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합동 (3)	연설	KBS광주 공개홀	4. 2(수) 11:30~12:00	KBS광주	-	김효석(민) 김문일(한) 양우석(평)	
고흥군 보성군	합동 (3)	연설	여수MBC 공개홀	4. 3(목) 14:15~18:00	여수MBC	김준옥 (전남대 교수)	박상천(민) 장귀석(한) 박성곤(평) 진종근(무)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초청	토론	KBS목포 공개홀	4. 4(금) 14:10~15:10	KBS목포 목포MBC	신순호 (목포대 교수)	유선호(민) 채경근(한)	
	비초청 (7)	연설		4. 4(금) 15:10~15:40			김종열(평) 강성재(무) 곽동진(무)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합동	토론	목포MBC 공개홀	4. 1(화) 10:00~12:00	목포MBC KBS목포	모지환 (대불대 교수)	민화식(민) 설철호(한) <u>이민호(평)</u> 김영록(무)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무안군 신안군	초청	토론	목포MBC 공개홀	4. 2(수) 12:40~14:20	목포MBC KBS목포	정기영 (대불대 교수)	황호순(민) 고기원(한) 김홍엽(무) 이윤석(무)	
	비초청 (7)	연설		4. 2(수) 14:20~14:40			강성현(무) 서성종(평)	
함평군 장성군 영광군	초청	토론	KBS광주 공개홀	4. 2(수) 10:00~11:10	KBS광주	장하경 (광주대 교수)	이낙연(민) 한남열(한)	
	비초청 (7)	연설		4. 2(수) 11:10~11:30			김영수(평) 이상신(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합동	토론	KBS포항 공개홀	4. 1(화) 10:00~11:55	KBS포항	이창희 (KBS대구 심의위원)	오중기(민) 이병석(한) 박승우(평) 허명환(무)	
포항시남구 울릉군	초청	토론	포항MBC 스튜디오	4. 1(화) 23:10~01:00	포항MBC	오영석 (동국대 교수)	허대만(민) 이상득(한) 이성석(무)	
	비초청 (6)	연설		4. 2(수) 01:00~01:10			백운학(평)	
경주시	합동	토론	포항MBC 스튜디오	4. 4(금) 22:00~23:50	포항MBC	오영석 (동국대 교수)	정종복(한) 김성태(노) 김일윤(박) 김수열(평)	
김천시	초청	대담	대구MBC 특별토론폰장	4. 7(월) 23:10~23:40	대구MBC	이창선 (대구MBC 보도국장)	이철우(한)	박필용(무)
	비초청 (6)	연설		4. 7(월) 23:40~24:00			김대환(평)	
안동시	초 청	토론	KBS안동 공개홀	4. 4(금) 23:30~24:50	KBS안동	박준형 (안동KBS 방송부장)	허용범(한) 김윤한(선) 장대진(박) 김광립(무)	
	비초청 (6)	연설		4. 5(토) 01:00~01:07			김구한(평)	
구미시갑	합동	토론	KBS대구 공개홀	4. 7(월) 14:10~15:10	KBS대구	오영철 (대구KBS 취재부장)	김성조(한) 임경만(선) 김형도(평)	
구미시을	초청	토론	대구MBC 특별토론폰장	4. 3(목) 11:00~12:20	대구MBC	김환열 (대구MBC 편집부장)	김경훈(민) 이재순(한) 최근성(노) 김대환(무)	
	비초청 (6)	연설		4. 3(목) 12:20~12:30			서한구(평)	
영주시	합동	토론	안동MBC	4. 4(금) 21:55~23:50	안동MBC	권영두 (안동MBC 기자)	장윤석(한) <u>최억철(평)</u> 권영창(무)	
영천시	합동	토론	대구MBC 스튜디오	4. 2(수) 14:20~15:10	대구MBC	김환열 (대구MBC 편집부장)	송두봉(선) <u>박준범(평)</u>	정희수(한)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상주시	초청	토론	안동MBC 스튜디오	3.28(금) 21:55~23:40	안동MBC	권영두 (안동MBC 기자)	손승태(한) 도현기(선) 성윤환(무)	
	비초청 (6)	연설		3.28(금) 23:40~23:50			위성선(평)	
문경시 예천군	합동	토론	안동MBC 스튜디오	3.31(월) 17:35~19:35	안동MBC	권영두 (안동MBC 기자)	이한성(한) 김명환(평) 김수철(무) <u>진경수(무)</u>	
경산시 청도군	합동	토론	대구MBC	3.31(월) 14:15~15:20	대구MBC	김환열 (대구MBC 편집부장)	서헌성(민) 김영수(진) <u>손동훈(평)</u>	최경환(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합동	대답	대구MBC 스튜디오	4. 7(월) 14:15~14:35	대구MBC	김환열 (대구MBC 편집부장)	전춘길(평)	석호익(한) 이인기(무)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초청	토론	KBS안동	4. 4(금) 14:10~15:10	KBS안동	박준형 (안동KBS 방송부장)	전병오(선) 정해걸(무)	김동호(한)
	비초청 (6)	연설		4. 4(금) 15:10~15:20			변시흠(평)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합동	토론	KBS포항 스튜디오	4. 1(화) 23:30~01:25	KBS포항	이창희 (KBS대구 심의위원)	강석호(한) <u>이귀영(박)</u> <u>김영화(평)</u> 김중권(무) <u>김교찬(무)</u>	
경상남도								
창원시갑	초청	토론	KBS창원 스튜디오	3.28(금) 14:10~15:40	KBS창원	조효래 (창원대 교수)	조재완(민) 권경석(한) 최재기(진) 공민배(무)	
	비초청 (6)	연설		3.28(금) 15:40~15:50			-	박영배(평)
창원시을	합동	토론	KBS창원 스튜디오	3.27(목) 22:00~23:30	KBS창원	조효래 (창원대 교수)	구명회(민) 강기윤(한) 권영길(노) <u>황성배(평)</u>	
마산시갑	초청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3.28(금) 17:20~18:20	마산MBC	전하성 (경남대 교수)	오길석(민) 이주영(한) 주대환(무)	
	비초청 (6)	연설		3.28(금) 18:20~18:30			-	조민기(평)
마산시을	초청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4. 3(목) 17:20~18:10	마산MBC	전하성 (경남대 교수)	하귀남(민) 안홍준(한)	
	비초청 (7)	연설		4. 3(목) 18:10~18:30			-	송정문(진) 이수철(평)
진주시갑	초청	토론	진주MBC 스튜디오	4. 3(목) 17:20~18:20	진주MBC	이영석 (경상대 교수)	김재천(무) 최구식(무)	최진덕(한)
	비초청 (7)	연설		4. 3(목) 18:20~18:30			-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진주시읍	초청	토론	KBS창원 스튜디오	4. 1(화) 10:25~11:45	KBS창원	조효래 (창원대 교수)	김재경(한) 강병기(노)	
	비초청 (7)	연설		4. 1(화) 11:45~11:55		-	김순환(평) 우종표(무)	
진해시	합동 (1)	연설	마산MBC 스튜디오	3.31(월) 17:35~18:05	마산MBC	-	김학송(한) 강충일(평) 최연길(무)	
통영시 고성군	합동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4. 1(화) 17:20~18:30	마산MBC	전하성 (경남대 교수)	이군현(한) 권수원(평) 김명주(무)	
사천시	초청	토론	진주MBC 스튜디오	4. 4(금) 17:20~18:23	진주MBC	이영석 (경상대 교수)	이방호(한) 이순근(선) 강기갑(노)	
	비초청 (6)	연설		4. 4(금) 18:23~18:30		-	김순자(평)	
김해시갑	초청	토론	KBS창원 스튜디오	4. 7(월) 14:10~15:40	KBS창원	옥원호 (경남대 교수)	정영두(민) 김정권(한) 옥반혁(선) 전진숙(노) 강재규(창)	
	비초청 (7)	연설		4. 7(월) 15:40~16:00		-	허점도(박) 김종형(평)	
김해시을	초청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4. 4(금) 17:20~18:20	마산MBC	이호영 (창원대 교수)	최철국(민) 송은복(한) 이천기(노)	
	비초청 (6)	연설		4. 4(금) 18:20~18:30			박남욱(평)	
밀양시 창녕군	초청	토론	마산MBC 스튜디오	4. 2(수) 17:00~18:10	마산MBC	이호영 (창원대 교수)	이태권(민) 조해진(한) 박한용(선) 박성표(무)	
	비초청 (7)	연설		4. 2(수) 18:10~18:30			-	김종상(박) 김환섭(평)
거제시	초청	토론	KBS창원 스튜디오	3.31(월) 14:10~15:10	KBS창원	옥원호 (경남대 교수)	윤 영(한) 김한표(무)	김경진(노)
	비초청 (7)	연설		3.31(월) 15:10~15:30			-	백순환(진) 구판희(평)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초청	토론	KBS창원 스튜디오	4. 4(금) 14:10~15:40	KBS창원	조효래 (창원대 교수)	유영태(민) 조진래(한) 강선희(노) 김용균(무)	
	비초청 (7)	연설		4. 4(금) 15:40~15:55			-	박희원(박) 이철호(평)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양산시	초청	토론	부산MBC 스튜디오	3.31(월) 08:30~09:45	부산MBC	김영일 (신라대 교수)	허범도(한) 심경숙(노) 김진명(창) 송인배(무) 유재명(무)	
	비초청 (7)	연설		4. 1(화) 13:20~13:45			안동진	김홍득(평) 정병문(무)
남해군 하동군	합동	토론	진주MBC 스튜디오	4. 2(수) 17:20~18:30	진주MBC	이영석 (경상대 교수)	여상규(한) 김두관(무) <u>김윤곤(평)</u>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동	토론	KBS창원 스튜디오	4. 2(수) 14:10~15:20	KBS창원	옥원호 (경남대 교수)	신성범(한) 김홍엽(선) <u>양동인(박)</u>	송동훈(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초청	토론	제주MBC 스튜디오	3. 31(월) 17:40~19:40	제주MBC KBS제주	홍성화 (제주대 교수)	강창일(민) 김동원(한) 현경대(무)	
	비초청 (6)	연설		4. 1(수) 14:15~14:25			-	유병녀(평)
제주시을	초청	토론	제주KBS 스튜디오	4. 4(금) 23:30~01:25	KBS제주 제주MBC	김부일 (KBS 심의위원)	김우남(민) 부상일(한) 강창재(선) 김효상(노)	
	비초청 (7)	연설		4. 2(수) 14:25~14:45			-	김창엽(박) 김창진(평)
서귀포시	초청	토론	제주MBC 스튜디오	4. 3(목) 17:40~19:40	제주MBC KBS제주	홍성화 (제주대 교수)	김재윤(민) 강상주(한) 오영삼(선) 현애자(노)	
	비초청 (6)	연설	제주KBS 스튜디오	4. 2(수) 14:45~14:55	KBS제주 제주MBC	-	신명수(평)	

* 토론회 초청후보자 상황별 표기

- 초청 및 비초청후보자 합동토론회의 경우 참석한 비초청대상 후보자를 “000”(밑줄) 표시
- 토론회 불참자 중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 불참한 후보자는 “000”(굵게) 표시

*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사유별 현황 표기(대상)

- 초청 및 비초청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의 경우
 - 초청대상 후보자가 1인인 경우 : (1)
 - 초청대상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 (2)
 - 초청대상 후보자 중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 (3)
 - 중계방송사가 방송연설회만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온 경우 : (4)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5)
- 비초청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의 경우
 - 비초청대상 후보자가 1인인 경우 : (6)
 - 비초청대상 후보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 : (7)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

I.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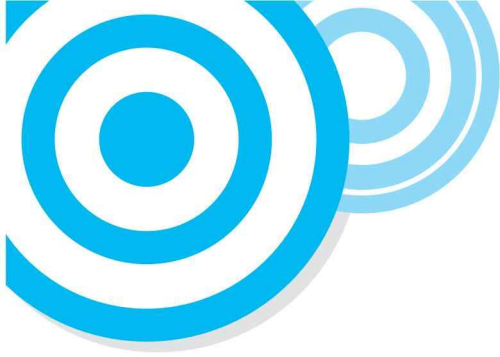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강동구	초청	대담 토론(방송 연설회)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	5. 31(토) 16:00~18:00	(주)씨엔엠강 동케이بلTV	곽은주 (전KBS 아나운서)	이해식(민), 박명현(한)	
대구서구	합동	방송 연설	대구MBC 스튜디오	6. 2(월) 15:03~16:20	대구 MBC	김종학 (대구MBC 정경부장)	강성호(무), 김옥주(무) 서중현(무), 손창민(무) 위용복(무), 임은경(무) 임태상(무), 정태영(무)	
인천서구	합동	토론	(주)ICN 인천방송 스튜디오	5. 30(금) 10:30~12:30 [6. 2(월) 10:30~12:30 6. 3(화) 18:30~20:30]	(주)티브로드 새롬방송	성기철 (아나운서)	이훈국(민), 강범석(한) 조한천(선), 송영우(무) 송춘규(무)	
포천시	초청	토론	나라방송 스튜디오	6. 1(일) 20:00~21:30	나라방송 우리방송	김환철 (교수)	이병욱(민), 양호식(한) 조용성(노), 서장원(무) 차상구(무)	
	비초청	방송 연설		6. 1(일) 21:30~21:40				
영광군	합동	방송 연설	광주MBC 스튜디오	5. 30(금) 10:30~16:30 [6. 1(일) 14:10~15:40]	광주 MBC		정기호(민), 김규현(무) 김성환(무), 김연관(무) 김천식(무), 장 현(무) 전태갑(무), 조기상(무) 최종걸(무)	
청도군	합동	토론	KBS대구 공개홀	5. 30(금) 19:30~20:25	KBS 대구	서태교 (KBS취재 기자)	이중근(한), 김하수(무) 박진수(무), 이이동(무)	이광호(무)
남해군	초청	토론	진주MBC	6. 2(월) 16:00~18:00	진주 MBC	이영석 (경상대 교수)	김일주(한)최태백(선) 정현태(무)	
거창군	초청	토론	KBS 창원	5. 30(수) 14:10~15:10	KBS 창원	조효래 (창원대 교수)	변현성(한), 김한권(선) 이상학(무)	
	비초청	방송 연설	KBS 창원	5. 29(목) 13:00~17:00 [5. 30(금) 15:10~15:55]	KBS 창원		김기범(무), 김길수(무) 김병욱(무), 김석태(무) 김영철(무), 김재권(무) 양동인(무)	

II.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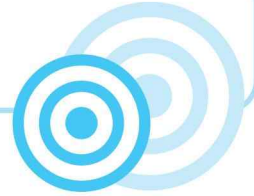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참석	불참
연기군	합동	방송연설	대전MBC 공개홀	10. 23(목) 13:50~14:50	대전MBC	송인암 (대전대 교수)	최무락(한), 박영송(민) 유한식(선), 성태규(무) 이천규(무)	
울주군	합동	대담토론	KBS울산 스튜디오	10. 21(화) 23:30~ 10. 22(수) 01:25	kbs울산	이경찬 (영산대 교수)	신장열(한), 홍정련(노) 배임태(무), 서진기(무) 이형철(무)	-

III. 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결과

선거구명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주관방송사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초청후보자		비고
							참석	불참	
서울	토론회	KBS 제4스튜디오	7. 25(금) 14:00~15:20	KBS	KBS MBC	신 울 (명지대 교수)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	비초청
전북	토론회	KBS 공개홀	7. 16(수) 10:00~11:50	KBS	KBS	김승환 (전북대 교수)	오근량 최규호	-	비초청
		MBC 공개홀	7. 18(금) 14:35~16:00	MBC	MBC	유기하 (전주MBC 보도국장)	오근량 최규호	-	비초청
충남	대담회	대전MBC 스튜디오	6.19(목) 10:30~11:30 (15:00~16:00)	대전 MBC	대전KBS 대전MBC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오제직	-	후보자 1인 등록
	대담회	대전KBS 공개홀	6.20(금) 10:30~11:30 (14:10~15:10)	대전 KBS	대전KBS 대전MBC	김이경 (충남대 교수)	오제직	-	후보자 1인 등록



정책토론회 큐시트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일 시 : 2008. 1. 31(목) 10:00~ 12:00 (120분간)

□ 장소 : MBC A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20초	10:00:00	MC/ S/T	
3	의제 및 진행방식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	10:01:20	MC/ S/T	
4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정부조직개편의 쟁점>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30초) - 후보자 답변(각1분) 김형오 → 최인기 → 김효석 → 천영세	5분 30초	10:02:20	S/T	
5	토론규칙 설명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10회 발언(1회당 30초씩) 총 5분	40초	10:07:50	S/T	
6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 최인기→ (자유토론)	24분	10:08:30	S/T	
7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경제 기능>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30초) ▶ 김효석→ (자유토론)	24분 30초	10:32:30	S/T	
8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통일·안보 기능>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30초) ▶ 천영세→ (자유토론)	24분 30초	10:57:00	S/T	
9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교육등 기타>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30초) ▶ 김형오→ (자유토론)	24분 30초	11:21:30	S/T	
10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맺음말(각2분) 최인기 → 김효석 → 천영세 → 김형오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8분 30초	11:46:00	S/T	
11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11:54:30	S/T FS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5:30	VTR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일 시 : 2008. 2. 29(금) 10:00~ 12:00 (120분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20초	10:00:00	MC/ S/T	
3	의제 및 진행방식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	10:01:20		
4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책 방향>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30초) -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권선택 → 이한구 → 강제규 → 우제창 → 이영순	9분 20초	10:02:20	S/T	
5	토론규칙 설명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5회 발언(1회당 1분씩) 총 5분	40초	10:11:40	S/T	
6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 이한구→ (자유토론)	30분	10:12:20	S/T	
7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대기업 정책>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30초) ▶ 강제규→ (자유토론)	30분 30초	10:42:20	S/T	
8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중소기업 정책>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30초) ▶ 우제창→ (자유토론)	30분 30초	11:12:50	S/T	
9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맺음말(각2분) 이영순 → 권선택 → 이한구 → 강제규 → 우제창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12분	11:43:20	S/T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11:55:20	S/T F.S	
11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6:20	VTR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일 시 : 2008. 3. 13(목) 23:20 ~ 01:20 (120분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20초	23:20:00	MC/ S/T	
3	의제 및 진행방식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	23:21:20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각1분30초) 문국현 → 이회창 → 손학규 → 강제섭 → 천영세	8분	23:22:20		S/T
5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선거의 실현> - 사회자 질문(30초) -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이회창 → 손학규 → 강제섭 → 천영세 → 문국현	9분	23:30:20	S/T	
6	토론규칙 설명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5회 발언(1회당 1분씩) 총 5분	40초	23:39:20	S/T	
7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 손학규 → (자유토론)	30분	23:40:00	S/T	
8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30초) ▶ 강제섭 → (자유토론)	30분	00:10:00	S/T	
9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깨끗한 선거의 실현 방안>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30초) ▶ 천영세 → (자유토론)	30분	00:40:00	S/T	
10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맺음말(각1분) 문국현 → 이회창 → 손학규 → 강제섭 → 천영세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6분 30초	01:10:00	S/T	
11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01:16:30	S/T FS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01:17:30	VTR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 일 시 : 2008. 6. 27(금) 10:00~ 12:00 (120분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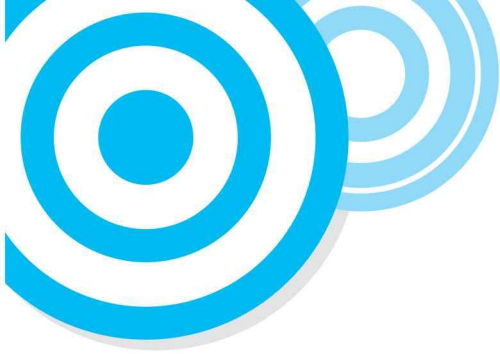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30초	10:00:00	MC/ S/T	
3	의제 및 진행방식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	10:01:30		
4	사회자 공통 질문	<p style="text-align: center;">< 토론주제 : 한미 쇄고기협상 문제 ></p>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토론자 답변(각1분30초) 임호성→류근찬→윤영상→임태희→이정희→강재규→최인기	13분	10:02:30	S/T	
5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4회 발언(1회당 1분씩) 총 4분 ▶ 류근찬 → (자유토론)	32분	10:15:30	S/T	
6	사회자 공통 질문	<p style="text-align: center;">< 토론주제 : 고유가 등 물가안정 대책 ></p>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토론자 답변 (각1분30초) 윤영상→임태희→이정희→강재규→최인기→임호성→류근찬	13분	10:47:30	S/T	
7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6회 발언(1회당 1분씩) 총 6분 ▶ 임태희 → (자유토론)	47분	11:00:30	S/T	
8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맺음말(각1분) 이정희→강재규→최인기→임호성→류근찬→윤영상→임태희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8분	11:47:30	S/T	
9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11:55:30	S/T FS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6:30	VTR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 일 시 : 2008. 11. 28(금) 10:00~ 12:00 (120분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30초	10:00:00	MC/ S/T	
3	의제 및 진행방식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	10:01:30		
4	사회자 공통질문	<p>“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p> <p><제1주제 :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p> <p>☞ 사회자 Bridge</p> <p>-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토론자 답변(각 1분)</p> <p>임호성→이정희→박병석→임영호→이용경→노중기→최경환</p>	10분	10:02:30		S/T
5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6분 (1회 발언기준 : 2분) ▶ 이정희 → (자유토론)	47분	10:12:30	S/T	
6	사회자 공통질문	<p>“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p> <p><제2주제 : 고용안정과 실업 대책></p> <p>☞ 사회자 Bridge</p> <p>-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토론자 답변 (각 1분)</p> <p>박병석→임영호→이용경→노중기→최경환→임호성→이정희</p>	10분	10:59:30	S/T	
7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5분 (1회 발언기준 : 2분) ▶ 임영호 → (자유토론)	39분	11:09:30	S/T	
8	맺음말	<p>☞ 사회자 Bridge</p> <p>- 맺음말(각 1분)</p> <p>이용경→노중기→최경환→임호성→이정희→박병석→임영호</p> <p>※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p>	8분	11:48:30	S/T	
9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11:56:30	S/T F.S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30	VCR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큐시트



제1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토론회

제2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토론회

비초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토론회



제1차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 일 시 : 2008. 3. 31(월) 10:00 ~ 12:00 (120분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20초	10:00:00	MC/ S/T	
3	의제 및 진행방식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	10:01:20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 기조연설(각1분) 박선영 → 김석수 → 송민순 → 정옥임 → 지금종	6분	10:02:20	S/T	
5	토론규칙 설명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6회 발언(1회당 1분씩) 총 6분	40초	10:08:20	S/T	
6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 ▶ 김석수 → (자유토론)	34분	10:09:00	S/T	
7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한미FTA 국회 비준>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 ▶ 송민순 → (자유토론)	34분	10:43:00	S/T	
8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문제>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 ▶ 정옥임 → (자유토론)	34분	11:17:00	S/T	
9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맺음말(각1분) 지금종 → 박선영 → 김석수 → 송민순 → 정옥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30초	11:51:00	S/T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11:56:30	S/T F.S	
11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30	VTR	

제2차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 일 시 : 2008. 4. 4(금) 10:00~ 12:00 (120분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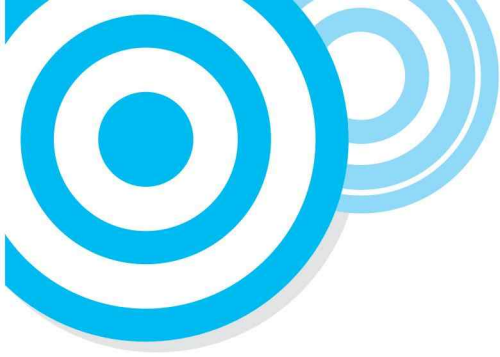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20초	10:00:00		
3	의제 및 진행방식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	10:01:20	MC/ S/T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 기조연설(각1분) 최영희 → 나성린 → 김용구 → 이정희 → 이용경	6분	10:02:20	S/T	
5	토론규칙 설명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6회 발언(1회당 1분씩) 총 6분 : 발언이 1분10초를 넘기면 2분으로 간주	40초	10:08:20	S/T	
6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물가안정 대책>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 ▶ 나성린 → (자유토론)	34분	10:09:00	S/T	
7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비정규직 문제>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 ▶ 김용구 → (자유토론)	34분	10:43:00	S/T	
8	토론자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토론주제 : 국민연금 개선 방안>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주제설명 ▶ 이정희 → (자유토론)	34분	11:17:00	S/T	
9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맺음말(각1분) 이용경 → 최영희 → 나성린 → 김용구 → 이정희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30초	11:51:00	S/T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11:56:30	S/T F.S	
11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30	VTR	

비초청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 일 시 : 2008. 4. 1(화) 14:00~ 16:00 (120분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 타임	영상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후보자 소개	1분30초	14:00:00	MC/ S/T	
3	의제/진행 방식 설명	- MC 의제선정 과정 및 진행방식 설명 등	1분 10초	14:01:30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 기조연설(각1분) 이애란→오준호→류승구→김석준→김명규→송영선→박행방→김호일→손대오	10분 40초	14:02:40		
5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30초) ➡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오준호→류승구→김석준→김명규→송영선→박행방→김호일→손대오→이애란	15분 30초	14:13:20	S/T/ S/T F.S	
6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한미FTA 국회 비준>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30초) ➡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류승구→김석준→김명규→송영선→박행방→김호일→손대오→이애란→오준호	15분 30초	14:28:50		
7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문제>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30초) ➡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김석준→김명규→송영선→박행방→김호일→손대오→이애란→오준호→류승구	15분 30초	14:44:20		
8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물가안정 대책>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30초) ➡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김명규→송영선→박행방→김호일→손대오→이애란→오준호→류승구→김석준	15분 30초	14:59:50		
9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비정규직 문제>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30초) ➡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송영선→박행방→김호일→손대오→이애란→오준호→류승구→김석준→김명규	15분 30초	15:15:20		
10	사회자 공통질문	<토론주제 : 국민연금 개선 방안> ☞ 사회자 Bridge - 사회자 질문(30초) ➡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박행방→김호일→손대오→이애란→오준호→류승구→김석준→김명규→송영선	15분 30초	15:30:50		
11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맺음말(각1분)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김호일→손대오→이애란→오준호→류승구→김석준→김명규→송영선→박행방	10분 40초	15:46:20		
12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5:57:00		
13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5:58:00		VTR



정책토론회 녹취록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율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3의 규정에 근거해서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MBC, KBS에 의해 동시 생중계로 여러분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으로 정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전)원내대표인 김형오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반갑습니다.
-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그리고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입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안녕하십니까.
-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반갑습니다.
-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안녕하십니까.
-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오늘 토론은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토론 진행방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의 큰 틀에 대해서 논의하고 난 다음 세부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경제 기능, 통일·외교 안보문제, 교육 및 기타 문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토론의 의제는 정치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 진행방식은 제가 먼저 여기 계신 네 분께 공통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오늘 처음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되는 토론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네 분이 시간을 잘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질문하시다 보면 어떤 한

분이 질문하시고 다른 분이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삼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 흥분하시다 보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분명히 제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공통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안, 지금 현재 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있습니다만 각 당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지 차례로 여쭙 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안녕하세요.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가 하면 산업의 경제도 허물어지고 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동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고유가로 인해서 장래가 불확실한 측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정부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갈라먹기 식의 정부부처로서는 대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의 칸막이 그리고 규제로서는 국민과 기업의 위축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화가 되더라도 정부는 수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우선 정부조직개편 안은 큰 정부를 지향했던 과거와는 달리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했다는 점에 대해서 금번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해방 이후 최대의 정부개편 작업에 있어서 그 절차나 과정이 너무 졸속이고 밀어붙이기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상징인 통일이나 여성부 같은 데는 폐지를 했는가 하면 장래에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는 축소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이 강한 부처는 강화하고 농촌진흥청 등 농민과 서민의 권익을 신장시킬 기관은 축소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여론수렴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발언하

실 순서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새정부가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정부조직도 손을 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와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2주 만에 만들어서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국회에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아무리 새로 출범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기본양식을 무너트려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정부 부처는 국민의 복리를 위한 조직입니다.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CEO의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영리기업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개편안은 내용과 절차에서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에서 정부부처의 공공성을 철저히 약화시키고 주변에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부처는 더욱더 강하게 되고, 힘없는 약한 부처는 더욱더 약화되는 강익장, 약익약의 기조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또 공청회, 토론회 한번 거치지 않는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은 지금까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국민 여러분이 수렴하고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세분의 원내대표 그리고 한 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상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호 자유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시간 보이실 것입니다. 30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0초씩 한 주제에 대해서 열 번의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1분 30초, 다시 말해 세 번의 기회를 한꺼번에 쓰실 수 있는데 시간을 넘으실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초를 넘으시면 한 번의 발언이 아니라 두 번의 발언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발언횟수가 다 보이실 것입니다. 발언횟수를 보시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 삼가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등 지금은 총론적인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역할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첨 순서에 의해서 먼저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이번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 안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성이 강한 정부의 기구를 기업형 정부구조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의 총수가 수 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은 권한을 강화하고, 키우고, 이윤이 작은 기업은 투자도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국가조직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지 못한 부분을 신장시켜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업 CEO적 발상에서 나오는 정부조직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정부기구를 축소했지만 힘센 부처는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리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또 대통령 실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라고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를 통합해서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쥔 공공부처를 다시 만들었는가 하면 지식경제부를 만들어서 또 다시 강화하는 몇 개의 각론 중심으로 나가는 과거 각료체제를 독점체제로 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지금 세 번의 기회를 쓰셨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조직개편 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자이기 때문에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더구나 국민들이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데 웬 말이 많으나, 무조건 도와 달라는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왜 우리가 정부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고, 이런 설득하는 승자의 논리보다는 국민을 설득하는 겸손한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운영도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 대한 것도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은 사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인데 국회에 이렇게 던져놓고 며칠 내로 원한

대로 일점일획도 거치지 말고 통과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 서로 정부가 일해 나가는데 우리는 새정부가 일하는데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리더십을 앞으로 새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점을 우선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발언신청하셨습니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작은 정부, 효율성 있는 정부, 지금까지 현 참여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림화, 정부의 어떤 축소 부분에 여론을 일정하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작은 정부, 큰 정부로 봐야 될 것인가, 일 잘 하는 정부, 일 잘못하는 정부, 질 좋은 정부, 질 나쁜 정부가 잣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큰 정부가 아닙니다. 공무원 대비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이 3%, 선진국 같은 경우 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일 잘 하는 정부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통일, 인권, 방송, 생태 등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부처들은 거의 폐지되거나 주변화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로 경제 권력은 훨씬 더 강화되는 이른바 대부처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 슬림화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강한 부처, 주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그런 부처들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편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께서 발언신청하셨습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정부조직개편을 보면서 저는 40년 전 개발독재시대의 국정운영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 경제 각료 한두 사람이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개발시대를 주도하면서 나갔던 시대를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농촌진흥청 폐지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만 농민을 지원하는 기관을 폐지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지원기능도 약화시키고 수산, 산림 1차산업 분야의 사회적 약자, 저소득, 생산력이 낮은 분야에 대한 기구는 축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대 공용부처를 다시 키우는 것은 개발독재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사고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기업적 방법으로 정부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한다면 최인기 원내대표께서는 대통령의 권한집중, 농민과 같

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김효석 원내대표는 여론수렴 부족이고, 천영세 원내대표는 작은 정부, 큰 정부든 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좌석에 안고 보니까 세 분의 원내대표가 집중적으로 나오니 3대 1로 아주 버겁고 힘든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은 똑 같이 주니까 사실상 저는 4분의 1 시간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에 일일이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선진국 정부들이 왜 작은 정부로 가느냐, 정부기구를 왜 축소하느냐, 왜 우리는 그동안 기능과 효율, 정부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했는가에 대해서 일정한 국민적 반성 속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효율성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총리실부터 축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줄속으로 처리하느냐는 말씀이 계시는데 10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와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12일 만에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낸지 오늘로 11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진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지금은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청문회도 없었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원내대표님 말씀하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어차피 김형오 대표께 질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답변에 이번 정부개편안이 대통령실을 상당히 축소했다, 슬림화 했다,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 전혀 그 정반대입니다. 경호실, 비서실 통폐합해서 20% 감축했다, 규모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대통령 보좌기능은 훨씬 더 권력화 되었고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청와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는 폐지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숫자는 작아졌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청와대가 상당히 무서워 졌습니다. 오히려 4개의 실을 합쳐서 대통령실로 편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통형 역할, 누가 대통령 실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 외에 누가 가능할 것인지, 내각이 전부 다 청와대, 대통령 실장만 쳐다보고 가지 않을 것인지, 오히려 총리는 그야말로 의전총리로 총리실의 중요한 업무기능을 빼서 청와대에 다 넘겼습니다. 오히려 발달된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개편안, 특히 청와대나

총리실을 본다면 주로 사람의 인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우선 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팩트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장관급 세 자리가 줄었습니다. 수석이 두 자리 줄었습니다. 비서관 17 자리가 줄었습니다. 청와대 106명의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청와대든 어디든 사람이 줄어들고 조직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데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슬립화 되었다, 대통령실이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지 강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 정 반대라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김대중 대통령 출범할 당시의 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 시도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장관급도 10여 자리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1당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결국 반발, 반대가 심해서 그 당시의 정부조직개편 안은 아주 소규모 개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 정부 출범할 때 총리서리, 총리인준 문제도 1월 4일 김종필 총리서리를 임명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계속 인준을 해 주지 않아서 8개월 만에 총리인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개편안은 한나라당이 한두 개 부처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부처가 56개 부처 중에서 13개가 통폐합이 됩니다. 법률안만 해도 45개 법안이 엄청난 정부조직개편 안을, 옛날에 일주일 만에 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넘어가자는 논리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빨리 최대한 우리 국회에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나가자는 것입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지난번에 12일 걸렸습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기일 내에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지난번에 없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까지 했습니다. 2월 25일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대통합신당에서 말로만 도와주신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여 개의 정부조직 법안을 놓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던 것이고, 22개의 법안은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심지어 정부로부터 나온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던 것이고,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고 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 것

이 아니고 정부조직이 이미 국민들 간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인규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규** : 정부조직 개편은 지금 대부처 주의가 가까운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정부조직,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5년 정도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대부처 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축소했다, 물론 숫자는 축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적인 기관을 대통령부로 옮긴 것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도 대통령부로 옮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놓고 본다면 결코 약화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 내의 토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편안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이번에 내놓은 정부개편안은 그야말로 사상 유례없는 정말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개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앞으로 5년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1개의 부처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철학과 국정 기조가 다르면 또 바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 국민적인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토론회, 공청회 한번 없이 더군다나 45개의 법을 새로 만들고 고쳐야 되는 부분을 일주일 만에, 아니면 열흘 만에 내놓고 처리해 달라는 것이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적으로 이번처럼 대폭 개편 했을 때 국가의 어떤 연속성,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업의 부서를 일거에 조정하고 개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 부처가 새로 생겼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따져보고 살펴봐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으로, 근원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여 줍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형호 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호** : 대학, 연구소, 행정부로부터 받은 20여 개 정부부처안 중에서 제일 많은 조직안이 15부, 작은 것이 8부였습니다. 거의 모든 기관들이 낸 것이 공통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인규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22성청이 12성청으로 되었습니다. 영국 26부성을 18부성으로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23부를 16부로, 미국, 독일은 15부입니다. 프랑스, 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대체로 세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뒤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간소화된 정부로 가자고 하는데 국민적 동의하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 **사회(신울 명지대학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일반적으로 정부부처를 줄여가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경제부처는 줄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규제가 걸려있는 것들이 경제부처 쪽에 있습니다. 경제부처를 줄여가고 사회복지 부분들은 늘려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안을 보게 되면 경제부처가 오히려 공용부처화로 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런 쪽이 강화되고, 예를 들면 건교부 같은 경우도 권한이 강화되고 공용부처화 되어 가는데 비해서 사회복지 기능들은 오히려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들을 없애서 보건복지를 붙인다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쪽의 수요, 사회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큰 틀로 볼 때 방향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도 조금 이상합니다.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바꾼 것은 참 다행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학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발언기회가 한번씩 남았는데 최인기 원내대표만 세 번 남으셨으니까 최인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듣고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정부개편안에서 센 부처는 강화하고, 약한 부처는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커야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해 버린다든지 산림청, 수산청 등 독립적인 1차 산업 기구에 대해서는 흡수하거나 다른 쪽으로 통폐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으로 지원기능을 정부기구가 하는 것인데 그런 힘이 작은 부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힘센 부처, 기업 지원 부처간 강화하는 정부개편안의 기본적인 발상이 저희 당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이 자리에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농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북돋우고, 서민이 잘 살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고 보건복지 분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농업의 산업화를 가지고 오겠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화로 연결시키겠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 번 썩의 발언 기회를 나머지 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30초 동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아까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향에 대해서 기획재정이라든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정부가 가려고 하는 것은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획재정부, 기획이라는 것은 플레이닝하는, 기업에 있는 전략기획부처부서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역시 국정에는 결단해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개편이야 말로 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 출범하고서도 이후에 또 논의하고 의견수렴해서 손을 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이 대표기관으로 선출해 준 국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보완되고, 국민의 동의 속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의 자세와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도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계적 형평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다음에 줄이더라도 10초만 쓰겠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마무리 발언 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정부 출범 후에 정부조직개편을 하자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저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물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분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한번 답변을 하는 방식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관련 정부조직개편의 중심 내용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있는 경제관련 기능들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3개의 부처로 통폐합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기능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도 있지만 거대한 공용부서가 탄생되어서 통제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토론에서도 잠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경제기능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순에 의해 이번에는 김효석 원내대표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경제부처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가 간의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상 선제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만들었던 부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다른 나라에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차별화해서 치고 나가자고 해서 만든 부처이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처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러 가지 국가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첫 번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의 화두는 사회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분야가 위축이 될 수 있다, 기획예산처를 재경부에 통합시켜놓게 되면, 예산부처가 경제 쪽에 하게 되면 경제논리에 밀려서 사회복지분야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재경부 쪽으로 갖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제논리에서 딱히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한마디로 이번의 특징이 경제부처의 과대권력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에 기획예산처를 포함해서 기획재정부, 과거 재경원, 재정경제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야말로 공용부처의 부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 분야가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도 직원 수만 하더라도 1,200명 정도로 거대부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기획파트와 집행파트가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한 부처 안에 있기 때문에 집행력이라든지 추진력은 이를 모르겠지만 각 부처간의 어떤 상호견제, 상호검증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맹점을 결정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경제계획을 위해서 어떤 기획과 집행이 같이 갈 수도 있었고, 과거에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대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정부부처간의 균형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부처를 평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기획과 재정이 균형과 견제의 관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우선 경제 부처는 공통적인 현상이 공용화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부처가 공용화되고 비대화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부적인 통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제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큰 사고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 위기를 받았을 때의 재경원, 과거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쳐서 국제금융국과 증권국을 심의관 하나로 놓아두었다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놓쳐버리고 경제부총리는 늘 어렵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펀드멘탈이 건설하다, 이것으로 일관해 가다가 저희는 그런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부처 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일본에서 후생성, 노동성을 합쳐서 공용화 되다 보니까 5,000만 명의 연금기록이 누락되어서 엄청난 국가적인 사건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화된 부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와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따

라주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이제 김형오 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이번 정부부처 재편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 내부 간에 있어서는 조정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처끼리 조정하느라고 시간을 허송했습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정했고, 총리실에서 조정했고, 기획예산처에서 조정하고, 재정부에서 조정하고, 각 과기부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부처가 너무 많아서 조정하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도 이제는 한 군데에서 하든지 신속하게 간편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대의 과기부, 정통부의 역할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더 신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 조직개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어떤 가치가 더 중요 하나,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모아보자는 것도 일면성이 있어 보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각 부처가 다 하지 않습니다. 금년만 해도 10조 8,000억원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각 부처에 4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종합조정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부를 과학과 기술로 쪼개는 것이라든지, 정보통신부가 사전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정보산업보다는 지식경제부로 가고, 전자정부 쪽은 행정안전부로 가고, 디지털콘텐츠는 문화부로 가고, 방송통신서비스는 방통위로 가고, 4개로 전부 찢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정보통신강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성했던 4개 분야는 적어도 선진국부터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상당한 성과를 봤던 분야인데 이렇게 쪼갠 때 우리의 경쟁력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융정책 기능에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하나로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체제하에서도 금융의 도덕적인 해이, 론스타 은행매각 문제, 카드 규제완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재벌 대기업 측에서 금융규제의 획기적인 완화라는 재벌들의 이해, 경제 관료들의 금융부의 창설,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획예산처를 독립한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문화, 복지, 노동, 인권, 생태환경 등 이런 사회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그런 대로 배정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재경부 쪽으로 기획예산이 편제되었을 경우 재정경제부가 지금까지 재벌이라든지 외국자본, 금융자본이 대변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주십시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경제부처의 현 개편안은 근본적으로 대기업,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는 금산분리원칙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에다 감독원 업무, 감독정책 업무와 이런 것을 다 주면서 재벌의 금융자본진출까지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이 근본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전반을 뒷받침하는 금융이 아니라 재벌 내지는 기업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화시켰다,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 하는 것이 정부 조직개편안을 제안하는 측 입장에서는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한.미FTA를 앞두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결국 기술농업 쪽으로 가야 합니다. 신품종, 새로운 기법, 새로운 영농방법의 발전을 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출현 연구기관으로 해 버리고 국가기관을 폐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어촌의 크나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정리해 주십시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지금 저는 마치 정부조직법 반대 방송의 엑스트라로 끼어서 출연한 기분입니다. 계획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합니다. 총론에는 찬성하면서 부처

정부 살려내라면 결국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정부부처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분명히 그것부터 가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와 금감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지금은 1인 2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감위 원장이나 감독위원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 한 것이고, 기획재정부에 있는 금융기능을 따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라고 했는데 당선자의 철학은 대기업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살리느냐, 이것이 역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이명박 당선인께서 대기업 위주의 국정철학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거대화 권력화로 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식경제부가 아니라 산자부로, 중소기업부로 승격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고용의 90% 가량을 중소기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을 국가에서 지원 육성하지 않아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집중적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떤 건전한 발전,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기능들을 묶어서 부로 승격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번 개편안에는 정부 슬림화의 원칙하에 8개의 법률상 행정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를 남겨 두었습니다. 친 대기업 규제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규제개혁위원회만 존속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김형오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대를 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부처를 다 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같은 부처 내에서도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부처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기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조직개편을 하는데 부처는 몇 개 줄이고, 공무원 수를 몇 개 줄이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

지막에 농촌진흥청을 떼어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비료가격이 금년 들어 25% 이상 올랐습니다. 많은 품목은 5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부처의 숫자를 줄이는 것, 임원 줄이는 것에 급급하지 말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개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겸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감독원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유리할 수 없고, 재벌의 금융자본지배를 허용하고자 하면 금산분리 완화가 이 당선자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감독업무와 정책업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분명히 대기업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겠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 중점이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김형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금융위원회와 감독위원회가 똑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민간기구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작동원리가 한다는 것이지, 금산분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폐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비료 값 올리지 않았느냐, 비료값 올린 것은 이 정부가 올린 것이고 비료값을 올린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이지 농촌진흥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특위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특위가 대통령 위원회에 중소기업 특위가 있고, 중소기업청이 있고, 산자부에 있고 중소기업들이 여러 군데 쫓아다니느라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오로지 중소기업청을 제대로 키우면서 상층구조로 지식경제부에서 과거 정보통신 관련되는 산업,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산업, 여러 군데 산업부의 고유한 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되었을 때 중소기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런 부서가 없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조직을 슬림화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영세 대표와 김효석 대표는 30초씩 쓰실 수 있고, 최인기 대표 1분, 김형오 부위원장께서는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김효석 대표께서 30초 안에 발언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비료가격을 농진청이 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민들이 어려울 때 왜 농진청 지원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안의 기름덩어리를 닦아 내는 데에는 사실 오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순식간의 잘못으로 엇질러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처라든지 기능이 한번 흐트러져 버리면 다시 모으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중소기업부, 산자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해서 중소기업부로 개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통부 또는 산자부, 여타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들을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중소기업지원육성책의 한 부분으로서 승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농촌진흥청 문제를 거듭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미FTA 국회비준 요청이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농업 경쟁력을 올리는 것은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영농기술을 키워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농촌진흥청의 업무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연구 보급지도를 국가가 포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FTA에 대해서 농촌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은 경쟁력을 살리지 않고서는 농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정리해 주십시오. 김형오 부위원장께서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드디어 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

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이명박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숙원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확고한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인, 선도적인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가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선도를 해서 이제는 지식경제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앞질러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경제적인 그리고 지원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농진청 문제는 정부의 청으로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유일한 것이 농진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공무원 조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출현연구기관으로 해야 FTA라든지 우리 농업의 경쟁력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오랜 숙고 끝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농진청은 앞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키우겠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기관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역할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더 강조할 것이고, 출현연구기관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100%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부에 식품을 첨가해서 식품산업까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신을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경제부처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논리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통일, 안보 기능입니다.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차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 중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일부 기능이 외교통일부로 흡수된다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남북교류는 경제협력이 모든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과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각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순에 의해서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실 순서입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시절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과오를 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남북관계,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민족의식과 철학은 뚜렷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대통령은 그 어떤 동맹보다도 동맹도 민족보다 우상할 수 없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과연 평화와 향후의 통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철학과 기조가 어떤 것인지 대단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간의 외교관계로 과연 볼 수 있는가, 이미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

다. 이미 남북 관계는 한편으로 군사적인 대결 체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끊임없이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국제관계, 특히 한미 관계의 종속적인 관계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개편안에 나와 있는 기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정책의 기초는 바뀔 수 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서 거칠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통일안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새 정부는 국제 문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 문제, 외교 문제도 미국 중심의 대미외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남북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전략적 상호주의,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이 폐기될 때까지는 상호주의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문제가 바로 우리가 먹고 살 경제문제입니다. 통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경색이 되면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다시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게 되면 신용평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를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학교수) :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이번 통일부의 폐지와 외교부로의 통합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기초의 변화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시작된 사고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남북문제가 과연 외교정책의 큰 틀 속에 들어가서 남북문제 분단국 관리가 되겠는가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사고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꾸준히 노력해서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전담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정책을 수행해야 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처럼 헌법상의 국가지상목표로 설정된 부처를 없애면서 통합하는 것이 당면한 분단국가 현실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존속은 반드시 주장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우선 통일부가 없어지거나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외교통일부로 더욱 확대되어서 긴밀하게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로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미 국제화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만이 통일문제를 전담한다는 사고방식은 떨어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전문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통일부가 단독으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합의까지 해 왔지만 결국 산자부, 한전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통일 문제, 남북문제는 전부 올인 하고 협력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UN에 남북한이 공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 문제 속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통일부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인수위 자리에도 폐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개편안에 인수위 측에서 통일부 폐지를 바라보면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10년간 정권을 잡지 못한 이런 변화 가운데 제일 큰 부분이 사실은 남북관계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국민정부,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어떤 강박증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부에 있는 모든 기능을 여기 부처, 저 부처에 다 떼어 주고 한 20여 명 남는데 남북협력에 종사할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외교부에 그냥 넣자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정신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의 교류협력, 6.15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가는 거대한 큰 흐름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역사적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단순히 정책이나 상징성처럼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김형오 대표께서 남북문제는 국제화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핵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 독자적인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제화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외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외교적으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결국 강대국의 주장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우리 남북문제의 특수성을 가지고 주장을 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벽을 만들어 두는 의미에서도 통일부는 따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내독성에서 통일 문제를 서독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외교부 산하에 두고 통일 문제를 같이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결국 전담했었던 서독의 통일방안이 우위를 점했던 것처럼 타국의 예를 참고하자는 것입니다만 남북 분단의 특수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결국 통일부가 존속됨으로써 근거와 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제가 중간에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고 들어가면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 문제가 외교통일부가 되고, 통일부가 독자 부서가 아니고 외교통일부가 되었다고 해서 통일부가 폐지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을 결코 위배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소봉대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집어야 될 것은 저희도 폐지한 부서는 국정홍보처 한 곳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전담부서를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남북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외교통일부 안에서 특수한 지위와 역할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복수차관제를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전담하는 차관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내독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 통일되는 데는 내독성 만의 역할로 된 것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라든지 UN 이런 곳에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 **사회(신을 명지대학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통일부를 외교부로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당장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외교부 장관이 통일 문제 전문가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국제적인 문제를 다룬 외교 전문가가 장관을 맡게 되고 남북 장관회담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장관이 참석하는 옷지 못하는 모양이 나오게 될 것 아닙니까. 통일문제, 남북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남북문제 아닙니까. 민족 문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과 접촉하면서 몸을 부딪쳐 가면서 쌓아온 전문

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북대화 문제, 경협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처를 두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왜 없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만약 외교 문제를 가졌을 때 우리 사례를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구한말이나 해방이후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 외교 중심으로 갔을 때 미국은 혈맹이지만 책임문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속국 들어갈 때 가스라테프트의 밀약을 알 것입니다. 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에치스라인을 잘못 그어서 미국이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학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민족 문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 통일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북 민족인 동시에 북핵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북장관회담을 말씀하셨는데 통일부장관의 북쪽이 어디입니까? 북한에 통일부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통전부라는 것이 내각입니까? 경제 문제는 경제장관이 하면 되는 것이고, 외교부장관이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특임장관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관이 점단해서 통일문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와대의 통일비서관 자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문제는 꼭 통일부라는 부처의 단독이 있어야 된다는 발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학교수)** :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북의 내각에는 통전부가 없고 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초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장관급 회담이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외교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6자회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6자회담을 통해서 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좋은 본보기라고 봅니다. 국제적인 일반 관계, 어떤 사업 활동만 가지고서는 사실 남북문제나 북의 핵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남북의 어떤 관계, 회담과 협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오면서 6자회담 안에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자회담 안에서도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축소시키고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한나라당 내부에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정책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께서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북한에 대해서 냉정적인 입장을 가져오신 분인데 그분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통일부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분은 지금 더 이상 정치를 않겠다고 자유스럽게 양심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통일부가 없어지고 각 부처로 쪼개지면 경협부분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단관리부문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갑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된 하나의 수출단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경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경협사업 중의 하나로만 보이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남북문제의 특수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대북정책을 잘 하려면 전담부처를 두고 나머지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해서... 한전의 전전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일부는 하려고 했지만 전담부처인 산자부에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 쪽을 전문하는 통일부와 각 부처의 전문성을 합해서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바로 그 점입니다. 개성공단은 통일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에서 하는 것보다 지식경제부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증적인 예가 바로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산자부, 한전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력문제는 지식경제부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통일할 수 없다면 북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리는 것이냐,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점에서 관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한다는 나라가 나름대로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선택하는 가치, 기준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결국 정책 결정자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지식경제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농림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다 가능합니다. 효율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것이 50년의 분단이 넘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인가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서 통일방안에 대한 접근도 하고,

관계부처가 계속 공무원들 밖에 나가면서 연속성이 없는 부처 공무원들보다는 꾸준히 연구해서 특수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남북통일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도 주장할 수 있고 논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교의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통일정책 가지고서는 그런 특수상황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정책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 측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반대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사회(신을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외교통일부가 됨으로 인해서 통일 전문가를 계속 키우는 동시에 국제적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추는 전문가가 양성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틀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틀 플러스 국제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통일부의 통일 전문가가 더욱더 양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신을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김형오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30초씩 쓰실 수 있고, 김형오 부위원장은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분부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새로 대북정책을 결정할 때 한번 쯤 성과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대북정책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 주시고 통일부 문제도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회(신을 명지대교수)** :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경제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위상과 역할이 분명한 통일부를 왜 약화 폐지시켜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신을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정책은 집권자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통일

부 존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의 지상 과제이다, 상징적인 목표이다, 이런 뜻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부처를 존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외교통일부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통일부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좋겠는지, 외교통일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수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외교통일부와 함께 있는 것이 통일부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낫다는 국민적 여론이 훨씬 높은 수치로 나왔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또 지난 10여 년간, 또 최근 5년간에 있어서 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 퍼주기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남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진정한 도움이 되고,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문제를 외교부가 주관부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통일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통일부를 통해서 더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통일부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당의 생각과 인수위 측의 생각을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토론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교육 등 기타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정부조직개편 안 경제기능, 통일안보 기능 외에 교육, 보건, 복지 분야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어교육 문제로 여러 가지 찬반토론이 있었습니까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순에 의해서 김형오 부위원장부터 발언하실 순서입니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총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지금까지 매주 2회 중앙정부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숫자로는 566회 정부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행정기관은 12% 늘었고, 장관급은 21% 늘었습니다. 차관급은 무려 32% 늘었습니다. 상급 고위공무원은 20% 늘었습니다. 전체 행정부 공무원이 7.5%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현 공무원 수준이 OECD 국가의 2분의 1수준이다, 3분의 1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OECD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를 정부가 지출할 경우 징집병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될 경우 OECD 평균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대, 정부부터 군사를 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국회와 각 당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자가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오직 정부의 군살을 빼서 국민에게 혜택과 봉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이 되어야만 2월 25일부터 정상적인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인수위가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여론조사에서 어떤 부의 통폐합 폐지에 대해서 가장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부입니다. 과학기술부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여론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위에서 이것을 떼어내려고 하는지, OECD 의견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 가장 선진화된 업무로서 칭송을 하고 있는 부처를 왜 없애려고 하는지... 과학기술은 나눌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방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원천기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권한을 대학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하셨는데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현실은 공공성이 대단히 낮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관치교육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립대학이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새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영역이 교육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박정희 정권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던 평준화라는 틀이 전체적으로 깨질 위험에 놓여 있는데 새 정부의 모든 논리가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시장이 경쟁의 논리를 도입했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정권이 달라졌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학벌 사회에서 벗어나야 되고, 가난의 되물림을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보게 되면 초·중·고등학교는 시도에다 위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시도교육감들이 전부 교육의 자사고, 특목고를 만들면 경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가 자사고냐, 비자사고냐 양분이 되어서 엄청난 사교육, 지금 이미 사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대학입시를 대기업에 위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기업은 친목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신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를 가지고 다들 텐데 결국은 대학에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학교의 공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월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소외될 수 없는 것은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준화 문제가 그동안 오랜 과제였습니다만 지금 위임하겠다고 하면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만약 재정력 격차가 큰 시도 사이에서 보편화된 기준을 유지해야 될 의무교육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생겨 버리면 대단히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고교입시 문제도 금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외국어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교육부장관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화 해 버리면 모두 남 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과외 시작되고, 사교육비 늘고, 엄청난 입시지옥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저는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총장을 세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들의 이익단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학입시를 맡길 능력이 없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과학 교육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부에 R&D 예산의 거의 90%는 과학교육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구 하는데 분리가 된 다거나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교육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더 튼실해 지는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대학과 연구소에 체계적으로 인재 양성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과학교육부로서의, 교육과학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평준화의 덫에 깔려있다 보니까 하향평준화로 되었습니다.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난의 되물림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확고한 당선인의 의지가 교육과학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도의 교육문제가 이관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행정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는 것이고, 중앙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도 하는 것이고 지방 자치의 원칙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그렇습니다. 교육과학부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학과 기술은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어찌됐든지 기능은 기술까지 따라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초과학을 통해서 생성되는 기초원천기술의 개발, 연구기능까지는 일관되게 과학과 묶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와 분리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은 합쳐서 교육부와 묶어주는 것이 국가장래로 봐서 옳다고 봅니다. 또 지식경제부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은 단기이고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과학기술부로 교육과 합쳐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마저 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학입시를 대학에 맞기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으로 대교협에 대학입시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교협은 그런 검증된 능력, 객관적인 투명성이 없는 단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교육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정부의 좋은 구호는 다 갖다 붙인 감이 있습니다. 학교 만족을 두 배로 하겠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가난의 되물림 없겠다, 다 좋은 구호입니다. 그런데 실제 만들어 놓은 정책을 보면 정책은 거꾸로 갈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지금 자사고를 100개 만들겠다, 시도지사 위임하겠다, 특성화 고교 300개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고등학교 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학교 서열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교육 시장이 중학교 영역은 비교적 덜한 지역인데 고교 등급화가 되게 되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사교육 열풍이 불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구호로 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2분의 1로 줄인다든지, 가난의 되물림이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문제점들,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각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한 것인데...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인력양성 업무를 일원화 하겠다, 평생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산학협력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R&D 부분도 결국 교육부로 이관되는 기초과학은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산업기술 부분만 확대될 것인데 오히려 인력양성업무를 통합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으로 가야 될 텐데 노동부에 대한 업무는 통합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고자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상업방송이 중심입니다. 미국 FCC도 완전히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주로 미국의 FCC를 주요한 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위가 주요 모델로 삼은 미국 FCC의 독립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에서 권력의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가 감추어진 것이 아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시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입시 문제를 대교협에서 한다는 것은 대교협에서 입시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큰 방침을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자율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평생학습 교육에 대해서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앞으로 평생 학습교육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런 체제 속에서 교육문제에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방통위를 왜 대통령위원회에 두었느냐고 하는데 우리 헌법 구조상 입법부나 사법부에 둘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위헌, 합헌의 논란입니다만 논의할 때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헌법학자들도 합헌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위헌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그렇습니다. 언론학자들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다르지만 이미 그 당

시에 논의가 다 끝난 부분입니다. 인권위 부분도 그렇고 제4부로 삼권분립에서부터 제4부로 하는 그런 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내용을 들여다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굳이 행정 독립을 해서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권력기구로부터의 인권위의 침해, 이런 것을 구제하자고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이 대통령직속으로 들어가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인권침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지금 방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발전기금에서 나오고, 일부 국가예산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통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방송을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FCC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느냐...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도록 별도로 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방송위원회가 대통령소속 하에 들어가서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화하는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구 통폐합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었지만 지방에 대한 권한위임과 지방의 특별관세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이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 국토관리청, 보훈청, 노동청, 병무청 여러 특별관세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속할 것은 속하도록 하면서 특별관세 통폐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인력감축 기구 조정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아까 위원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이미 서한을 보내 왔고, 만약 이 문제를 정식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삼았을 경우에 문제로 삼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회 중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없애겠다고 한다면 정말 새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인가, 지금 균형의 추를 맞추고 가려는 그 안의 노력을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광주 문화수도특별법에 의해서 문화중심위원회 같은 것도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의 4.3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겨우 특별법을 여야 합의에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오랜 동안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너무 위원회를 즐겼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개를 합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전부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을 하나로 하는 것은 억지로 통합하려고 하는...

- **사회(신울 명지대학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중앙선관위나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 후에 나온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위, UN 판문관남한에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갔었습니다. UN도 대통령을 장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혀 그런 뜻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인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과학기술 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술도 교육과학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 문제와 지방특별기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고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균형발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기획이라든지 획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로 돌려드리고 416개 위원회에서 200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습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학교수)** : 고맙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0초씩 세 분 남으셨습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조직개편은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한번 지혜를 모아 봅시다.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내밀면서 같이 해 보자면 우리는 손을 잡

고 같이 해 보겠지만 우리가 손을 내미는데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겠다고 발목을 내밀면 우리는 그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열린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못 고치겠다는 자세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아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는데 비상기획위원회까지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제에 소방기능과 방재, 민방위의 기능을 분리해서 소방은 소방전담청으로 분리하고 민방위 방재, 비상기획 업무를 본부소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영세 원내대표 30초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민주노동당의 정부조직개편은 단편적이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의 50%를 점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 제도를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개발, 너무 전국을 개발로 일구어놓은 건교부를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공보원으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고,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시각을 갖게 되었느냐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각 토론자들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대표께 2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첨순서대로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우선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측에 요망을 합니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농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구조를 만드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압

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4% 투표율에 48% 득표를 얻었습니다. 유권자의 30.5%의 지지로 얻고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이르는 국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은 그만큼 큼니다. 그 기대가 크다고 해서 그것들 등에 업고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건 데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절충안, 수정안, 여러 가지 고쳐진 안이 만들어질 경우 흔쾌히 동의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정부의 조직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독선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고집스럽게 나갈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효율성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형으로 정부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또 기업위주의 정부구조개편이 된다면 영원히 정부 하에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국민의 뜻을 받아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공감을 얻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다 함께 준비하는 사심 없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 **사회(신울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조직개편은 청계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 관행이라는 것이 'All or Nothin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주장이 부딪혀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우리가 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지혜를 모아서 합의해 나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나라당이 중앙정부를 독점하고 현재 거의 모든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한나라당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예를 봐도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기초단체시장 할 것 없이 90%, 95% 이상이 한나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국회까지도 만약에 한나라당이 독점하게 되면 한나라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장과 효율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어려운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견제세력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지 견제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겠습니다. 야당이지만 무조건 과거의 야당처럼 발목 잡는 야당은 안 하겠습니다. 함께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가지고 경쟁하는 창조적인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우리는 5년 뒤를 기약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뛰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새로운 수권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신울 명지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당선인이 내는 공약대로 파격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협조를 구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기꺼이 협조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이 상생정치를 표방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진정성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자고 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안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정부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정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작은 정부이냐, 큰 정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 잘하는 정부이냐 그렇지 못한 정부이냐, 질 좋은 정부이냐, 질 나쁜 정부이냐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45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고 고쳐야 되는 이런 정부조직개편, 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정부조직개편 안 부분을 포문을 발표하듯이 이렇게 내놓고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 지금부터라도 정말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국회 안에서부터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개편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정부개편 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번에 국민들의 염원과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더 몸을 낮춰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반드시 민생안정을 이루어내도록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신을 명지대교수)**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나라당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소수당입니다. 힘이 약합니다. 정부조직법도 밀어붙이려고 해도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각 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지금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고치지 못합니다. 정부의 군살을 빼고 청와대부터 축소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온 것은 국민 여러분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고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그 돈으로 교육과 복지에 쓰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각 정당, 각 정파에게도 호소합니다. 이제 새정부 출범이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무총리 인준도 되어야 되고 국무위원 인준도 하려면 정부조직법이 빠른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 이후에 대통령만 있는 그런 정부를 원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조직법은 어떤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빼고 정부를 효율화 시키고, 일 잘 하는 정부를 만들고,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섬기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되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신을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벌써 두 번째 정권교체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치학을 이야기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바로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 조직법개편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관가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만큼 지금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좀 더 성숙한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희가 네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 마무리 발

언을 끝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나라당 김형오 부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번의 공직선거 정책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의 정책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각 당의 정당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기회로 이번 토론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엄길청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3의 규정에 근거해서 오는 4월 27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두 세 번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입니다. 현재 이 방송은 전국의 KBS, MBC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토론자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이 발언순서와 좌석은 모두 사전추첨에 의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정책위의장입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입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입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나오셨습니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안녕하십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오늘 토론은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을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다시 각론으로 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제는 경제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패널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방식은 먼저 사회자인 제가 공통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각 1분 30초씩 답변하신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총론 토론과 각론 토론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발언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경제 활성화

화를 위한 기업정책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투자, 고용, 소비에 선순환이 있어야 된다고 모두들 믿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는 현재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의 틀을 제시하면서 경제회생에 대한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놓고 경기침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양극화 확대와 같은 다른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부터 각 정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기업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러 사태들, 예를 들면 인수위에서의 어설픈 정책 발표 그리고 조각과정에서의 파행 등을 종합해서 볼 때 국민들은 과연 국정수행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한,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되겠느냐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만 보더라도 친기업정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친재벌정책, 대기업만 살리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60년대, '70년대의 토목공사, 대운하와 같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있고 또 반시장적 조치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원칙이 있고 그야말로 균형 감각이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약자를 위한 보호대책,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선진당은 반드시 제1야당이 되어서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그야말로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 잘못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투자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제는 선진국처럼 완화하고 세금부담은 우리 경쟁국가 수준으로 낮추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한테 새로운 시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기업투자환경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시장 쪽에는 FTA를 대거 확충해서 체결하도록 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중산층을 육

성하고, 핵심부품은 첨단소재산업을 육성하고 고급 서비스산업을 창달시켜서 내수시장을 많이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줄여주어서 수익모델을 많이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집약형, 장기자금 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이고 투자펀드 같은 이런 리스크를 분산 시키는 지원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서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산업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고용창출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강재규입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토목사업을 통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방편적인 토목사업으로서는 어려운 우리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우리 금수강산을 콘크리트로 도배될 하고, 승례문이 불에 타 쓰러졌듯이 수천 년, 수만 년 흘러온 한강과 낙동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운하 건설 같은 정책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불도우저나 시멘트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이런 정책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해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반드시 건설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반드시 지난 정부에서 취해온 정책과 효과를 먼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최대 고민이 무엇이나, 저는 선진국형 혁신주도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06년도 23위에서 '07년도 11위로 급상승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 제3단계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어 냈고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수많은 대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FTA를 추진해서 그동안 혁신주도형 경제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나, 이러한 혁신주도형 시스템, 제도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이 정작 활동할 수 있

는 규제개혁이라든지 또는 자생력이나 핵심 능력이 없는 그런 주체들, 소위 말해서 서민 경제를 돌볼 수 있는 투자를 말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앞으로는 경제개별 주체들이 최대한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제도의 성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이 활기찬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수년 동안 경험해 왔듯이 기업이 잘 된다고 우리 서민 경제가 나아지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업만 잘 된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험해 왔던 바입니다. 경제성장률의 수치는 그동안 해마다 5% 유지해 왔습니다. 수치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를 살리는 진보경제성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 성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부자만, 대기업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 서민들이 함께 하는 경제성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기업만을 위한 그런 규제완화정책이 아니라 88%의 전체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부터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다섯 분의 정책위의장께서 기업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밝히신 기본 입장을 토대로 해서 상호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1분씩 다섯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면 2분까지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발언하신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론 토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경제의 틀 위주로 상호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의 앞쪽에 보시면 토로자의 이름과 잔여 발언횟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토론자는 앞의 토론자의 말미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남은 시간과 횟수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지명의 순서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점에 의해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그러면 모두 각각 질문해도 됩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질문하셔도 좋고 입장을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모두설명 관련해서 큰 틀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각 당에 대해서 토로하실 것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저희들은 기업투자환경을 좋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믿음은 다 압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업이 잘 되어도 결국 고용이 잘 안 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고용을 많이 하는 방식의 성장구도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정권이 잘 한 것이 많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잘 했는데 투자는 굉장히 둔화되고 외국자본을 유치시키기가 그렇게 나쁜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재규 정책위의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투자, 교육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무엇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 정책위의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성장 방식은 무엇이며, 그동안 민노당이 주장하던 것은 정책에 상당히 많이 반영했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먼저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에 가장 큰 것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가 무엇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경제 주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작았다, 특히 양극화로 고생하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가는 곳이 있어서 대부분 싱가포르, 일본이나 설비투자증가율이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 정도로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소비 역시 2.1%,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규제완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대기업, 중소기업에 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나 하면 어떻게 하면 자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또는 국민부담, 소위 말해서 사회보험, 건강보험을 통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려서 소비를 안정화 시키고, 순환 구조로 다시 고용이 증대되게 하고, 투자를 증대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낙동강, 한강을 잇는 생태파괴적인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유가 있다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재정을 투자하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한다 해도 요즘은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만 모두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1년에 1만 2,000명~2만명씩 신규사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규사원 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근의 실업자들은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들, 기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취직시키지 못해서 실업자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우리 경제는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는 성장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항상 낮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용을 높이는 성장을 하시겠다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서민들이 경제가 살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고용이 보장된 성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나라당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출충제 폐지, 법인세 인상, 금산분리완화 정책은 사실 1, 2%에 불과한 대기업들의 정책일 뿐이지,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용 사정이 어떤가 하면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ILO, EU

의 연구를 참고해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29개 비교대상국 중에서 고용의 질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고용안정이 제일 꼴찌, 근로조건이 꼴찌, 고용평등이 꼴찌입니다. 여러 가지 고용기회, 능력개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부의 실업률을 보면 3.2%에 불과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임금을 받고 단시간 노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11.7%에 이른다고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이한구 정책위의장께 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임기 중 평균 7%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 당선되자마자 7%가 6%로 다운되었고, 어저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께서 6%는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사실상 처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금년도 성장률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대외경제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중 평균 7%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의 경우에는 10% 정도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재성장율에 거의 두 배 정도에 달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조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인위적인 경기조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우선 747은 공약이 아니고 비전이라고 공약발표 할 때 바꿨습니다. 저희 당에서 바꾼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7% 성장한다는 것이 임기 중 평균을 목표로 잡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6%도 될 수 있고 그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건은 많이 나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투자환경개선조치를 취해서 성장률을 최대한 대로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왜냐 하면 성장률이 높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이 원만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 성장 시키겠다는 것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시스템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 비생산적인 요소를 대폭 바꾸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를 혁신시켜서 정부의 국제경쟁력부터 올려놓겠다, 그리고 사회 각 부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급시켜서 생산성을 올리는 정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장동력이 되면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분야가 노동 분야가

있고, 여성의 인력 문제가 있고, 지방의 경쟁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이 올라가도록 대폭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자세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규제완화, 세제개편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권선택 정책위의장께서 조금 더 물어보시겠습니까?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비전과 공약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표를 의식해서 하는 공약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제대로 정책으로 다듬어 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총선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끝나면 그야말로 5%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 이기는 합니다만 물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물가 강등의 원인이 원자재가, 고유가가 원인입니다만 대내적인 여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정책, 예를 들면 새로운 거대 부처의 탄생, 물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런 기능 축소도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것도 물가를 부채질 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추진하다가는 전 국토를 투기장화 함으로써 또다시 물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마이크를 강재규 정책위의장께 넘기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에서는 한.미FTA의 빠른 체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FTA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FTA 조항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우리 국가법령의 개정을 수십 가지 개정토록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법 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의 공공정책,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조항은 중소기업 정책이라든지 농민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국가 정책의 제동이 걸릴 수 있고, 나중에 체결되면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에 의해 한.미FTA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FTA체결로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농민문제라든지 수산, 축산,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두 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한.미FTA를 두고 완전히 연정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는 기회가 한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해서 답변하시고,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한.미FTA는 대단한 유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일반국민 할 것 없이 여론조사에서 참여정부가 가장 잘 한 것이 무엇이나, FTA타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중국, 대일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문호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점을 넘어서, 심지어 한.미 간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취약부분들 농업, 수산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이영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방금 말씀하신 한.미FTA는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해소대책은 매워 넣지 않은 채 더욱더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소득불평등 지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 해소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경제 학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를 위한 친기업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수상도 규제완화를 이야기했습니

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나 하면 규제완화를 하기 이전에 시장이 충분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한 이후 이중규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장경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자만 살아남을 것이고 승자만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양극화해소가 안 될 것이고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권선택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한.미FTA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조치 뿐이 아니고 경제, 사회에 걸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대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찬반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지향형 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분야라든가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이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경제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사전대책이 권고된 다음에 처리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제가 이한구 정책위의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이나, 74%이나는 대충 처리하신 것으로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비전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올림픽 이후에 특수가 꺼지면서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문제는 무엇이나 하면 이렇게 성장위주,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영순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세밀한 중소기업 정책이 있느냐, 과연 참여정부와 차별된 보수정책이 있는 것이냐 또는 양극화 대책이 있는 것이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본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고,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마지막 질문에 대해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안

보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정책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고, 성장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이 굉장히 세밀하게 제시되고 있고, 복지정책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검토하면서 이것이 민노당 조차도 부러워할 정도의 복지정책이 아니냐,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양극화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고,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고 이제는 고용친화적인 성장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이야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기업들에 대한 보험료, 사회보험료 대납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러면 소기업들조차도 고용을 늘릴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재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장재규 정책위의장** :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내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분권 내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행복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지방분권운동 지역상담 대표도 했는데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만 해도 48%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2020년이면 52% 이상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인구 비례로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나올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이 지극히 왜곡될 수 있는 우려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 경제 운용의 큰 틀에 대해서 주요정당의 정책위의장들의 모두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분이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영순 정책위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유명한 빌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창조적인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지금까지 경험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한테는 그런 정책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출자총액제, 금산분리완화 이런 것들만 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장 우선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실현해야 될 정책에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중소기업에 위한 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권선택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경제 활성화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지 시장경제라고 하는 원리원칙에 맞아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은 심각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대전인데 지금 대전으로, 충청권으로 이전을 생각했던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암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을 어느 정도 살려놓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이 죽고 나서 수도권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정부기획법에 대한 보완문제도 신중하게 처리해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제도는 너무 너무 많습니다. 아마 한나라당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참여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혁신주도형 제도를 만들어 냈지만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한나라당의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친대기업적인 정책 또는 성장위주의 정책,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에 대해서 주요정당의 정책위의장을 초대한 자리에서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모두 토론으로 정책위의 큰 틀에 대한 논

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차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토론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논의했던 기업정책 중에서 우선 대기업 정책은 몇 가지 현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기업의 금산분리 문제라든가 출자총액제한 문제, 일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문제, 최근 경기침체로부터 붙어온 법인세 인하 문제 등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 정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부 여당 입장은 어떤 것인지 각 정당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는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천순에 의해 강재규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저희 창조한국당은 워낙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제시했고, 그러한 대선공약 사항이 불과 2개월 전에 경향신문이나 MBC로부터 평가를 해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소기업 정책에 충실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냐, 저희들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발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 외국에서는 투명성 국제협약인 글로벌컴팩트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주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비판을 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기업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장해 온 것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대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 분부터 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대기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10년의 침체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나 하면 대기업 중심으로 끊임없는 구조조정,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활동, 소위 말해서 이익마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들이 살아나면서 사실 일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대기업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투자도 대개 대기업 투자와 연계해서 60%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라는 것은 정말 3만불 시대, 4만불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R&D 투자를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통해서 활성화 시킬 것이냐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

째는 무엇이나 하면 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를 상당 부분 헐어야 됩니다. 물론 권선택 정책위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폭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 죽고, 수도권도 죽으면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살지 못하는 처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무엇인가 수도권에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서, 규제하지 않으면서 이쪽을 살려나가는 방법이 결국 대기업 투자 활성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한구 정책위의장님 토론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기업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기업들과 관련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의 만들어 주겠다, 선진국에서 대기업들을 다루는 그런 법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국내에 와서는 외국 기업과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이 오히려 외국기업보다 손해를 보는 상황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첨단업종 투자 문제나 또는 출자총액제한 문제나 금산 분리 제도의 단계적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줘야 되겠고 또 고급 서비스 시장에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를 대폭 해 주고, 세계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 그러나 주로 사람을 키워주고 초기 제품 시장을 제공해 주는 식으로 미래성장산업에 대기업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을 등치는 일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확실하게 빨리 적발해서 불공정 경쟁하는 것은 엄격히 처벌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을 상생경제체제의 테두리 속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은 적극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겠다, 그래서 종업원 훈련한다든지 R&D를 공동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자유선진당의 대기업 정책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 혁파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제완화에도 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완화가 있고 그야말로 무원칙하고 무모한 규제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 쪽은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이 말씀

하셨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손을 봐야 되고 완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처지로 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방을 모두 죽인다는 생각입니다. 통합민주당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행정수도를 추진했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정치기능, 행정기능을 빼내고 규제완화를 대폭 시키자,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살아나서 수도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 대기업 정책에 관해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의 대기업 정책입장은 어떻습니까?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지금 재벌 대기업의 폐해로 인해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1인 독재 경영체제, 독식하는 경영구조,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구조화되고 권력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삼성의 문제를 보면 분명하게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특검을 하고 있지만 삼성 문제는 이진희 회장의 개인, 황제 경영이 문제입니다. 삼성 대기업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장 일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기업 전체가 손해를 보아가면서까지 경영권 방어를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불법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서 불법 비자금도 만들어 내고, 검찰이나 정치권 등 로비를 하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정부패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이 대기업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삼성에 대한 문제부터 올바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구조가 대충 그냥 잘못이 없으므로 넘어간다면 저는 대기업이 앞으로 이런 경영개선이나 구조개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변화되어야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분들에게 전반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권선택 정책위의장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대기업 규제 완화 조치 중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다 좋습니다. 금산분리완화정책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보유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 특검에서도 보

신 것처럼 삼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삼성 관련된 금융 계열사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은행을 'BANK'라고 합니다. 'BANK'라고 하는 것이 독입니다만 독이 무너지면 해당 기업은 다 망합니다. 또 재벌기업이 망하면 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금산분리완화정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이번에는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 대기업 정책이 없다, 대기업 정책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입니다.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0%까지 내리겠다, 5년동안 매년 1%씩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 도시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비쌉니다. OECD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한나라당이 아주 강하게 요구해서 법인세를 2% 인하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과연 투자활성화 되었느냐,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1% 낮출 때마다 세수가 1조원씩 감해 집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보면 대부분 수익이 5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부분 법인세의 60% 이상씩 내립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가 부진한 쪽은 어디냐,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이 필요하지 않고 대기업만 살찌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동요되지 않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한구 정책위의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금산분리의 문제입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경제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고 경제방향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산업자본이 소유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폐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한구 정책위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먼저 경제 활성화 이야기할 때는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내려야 된다고 하시더니, 법인세 인하는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우리 경우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어디 가서 투자하고 싶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법인세율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인하해 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효과가 없었느냐 하면 기업들이 김 세는 조치를 골라서 해서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의 활력 조치도 취하면서 세금 인하도 같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만 살찌운다고 하시는데 법인세율 인하하면 왜 대기업만 살찌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세율을 이것보다 더 과감하게 인하합니다. 그리고 R&D에 관계되는 세제지원도 중소기업은 더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살찌는 이런 비판은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산분리는 세계적인 추세, 금융산업을 우리가 제대로 일으키려면 빨리 금산분리는 완화해야 되지만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기본입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 정책에 대한 주요정당의 입장을 듣고 계십니다. 법인세 문제, 금산분리 문제 등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제규 정책위의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강제규 정책위의장** : 앞서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창조한국당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의 특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현상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특검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검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금산분리완화라든지 상업출자규제라든지 도저히 수용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민주노동당 참여하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방금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 문제, 출자총액제한제 문제, 금산분리완화 이 세 문제 모두 1, 2%에 불과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문제도 과세표준이 전체 15.6%에 불과합니다만 납부세액은 전체 법인세 97.9%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결국 대상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위한 이런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에 실제로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구조개선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이런 규제완화조치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 차별, 총수 일가에게 이윤만 떠안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풀이 반복하면서 늘 이야기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민주화 구조개선,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은 구호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법이 아무리 있어도 실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더 많이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자유선진당의 추가적인 대기업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자유선진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법인세율 인하를 했었는데 상당히 정부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8조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확일적으로 1%씩 낮추겠다고 하지 말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 경기부양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일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강재규 정책위의장께서 대기업 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순환출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1세, 2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재벌 가문에서 하나의 특정기업에 1, 2%의 지분을 가지고 수십 조, 수백 조를 지배하는 것이 돌려 막기 식의 순환출자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에서 보이고, 다른 대기업들에서 보여준 행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투명성 부분이 확보되고 나서 완화를 하든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세 문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세수가 비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사회

복지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특히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를 다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원칙이 무엇이나 하면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 주는 대신 대기업들의 경영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리경영, 환경경영, 투명경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제도화 할 것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처리 문제도 확실한 법 위반행위가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일 저질러 놓고 감옥소 안 가고, 병원에 가서 수염 기르고 나오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같이 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비중이 낮다고 하셨는데 대기업이 굉장히 큼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이 중요한 일입니다. 연관 고리를 잘 감안해서 정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세수 부정 문제에 관해서도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같이 감안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대기업 경제정책 부분이 마무리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권선택 정책위의장이 조금 더 시간을 쓰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에는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정부 하에서도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이 7개 기업집단에 25개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문화 되어 있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것이 강력한 사전규제입니다. 그것은 또 규제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권 방어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출총제가 대단히 완화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제가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출총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대내외적인 견제작동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출총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이것

을 죽이는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잡기 위한 권력수단일 뿐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결국 신중하게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출총제를 대신할, 특히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입법이 있어야 된다, 무엇인가 제도적인 보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영순 정책위의장님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대기업을 잘 되어야 중소기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거기에서 일하는 88%의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구조가 정답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은 이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윤이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고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항상 많은 실업자가 되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대기업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만 우리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이전에 규제완화부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스웨덴, 규제가 없어서 투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달려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대기업 관련한 주요 당의 정책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선택 정책위의장님이 한 번 더 발언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대기업의 규제완화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에 입각한 규제완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살아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의 어떤 건전한 사회 윤리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재벌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다만 윤리 경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들의 대기업에 관한 방향을 들어 보셨습니다만 논의의 초점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규제도 풀고 혜택도 필요하다는 것과 이것이 가져올 또 다른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각당이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에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각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업과의 상생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중소기업정책,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과 주요 각당의 입장을 지금부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문제는 우선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R&D 투자, 우수인력 확보, 경영여건의 개선, 전폭적인 지원의 강화와 같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주요 정당의 입장을 추첨순에 의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중소기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9988'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9'는 무엇이나, 중소기업 수가 전체 사업자 수의 99%, 그리고 종사자 수가 전체 고용의 88%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대개 신규고용의 창출을 다 해 냈습니다. 대기업은 그동안 140만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250만명을 고용해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대단한 공인 것이 중소기업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나,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이 지금은 정부의 317개 지원단체에서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6,245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혼선과 중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에 중소기업 수석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고 장관급을 승격시켜서 통합해 내고 조정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을 무엇이나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대기업을 잡는 위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문화,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교정해 낼 것이냐, 이쪽으로 역할을 전일해서 앞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의 애로점이 무엇이나 하면 대기업으로부터의 그런 압박과 납품단가 등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니까 중소기업 전담부처도 신설이 필요하고 하도급의 관행적인 불공정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각당의 입장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저희들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대폭 줄이겠

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의 원리이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대해서는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중소기업 규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화발전전략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수출기업화 하는 문제, 기술 중심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문제, 향토산업 경우에는 전통문화를 적합 시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는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또는 경쟁 제한행위가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원회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돌리도록 하고, 공정위원회의 중소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공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특별히 상생경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거래할 때 현금지급 의무로 한다든지 R&D를 같이 한다든지, 종업원 교육을 같이 시켜준다든지, 시설을 공동운영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상생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টে임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도 그런 상생지수에 들어가는 아이টে임을 중점적으로 제시해서 그분들이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평가를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서 임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한테 저가로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재규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조금 전에 오제창 정책조정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이 99%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8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소기업들이 대도시보다는 주로 시군, 자치단체에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남 김해시입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5,000 내지 6,0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력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IMF 때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150조원의 공적기금을 투입했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부운하에 투자할 수 있는 수십조 원을 집중해서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도 경부운하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부분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보도 된 것으로 봤는데 이 자리에서 경부운하를 포기할 의향이 없으신

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주제가 중소기업 문제이니까 우선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상황을 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정책위의장님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공약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5대 국정지표에서 첫 번째 과제로 활기찬 시장 경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기찬 시장경제는 대기업 중심이 아니냐, 중소기업정책은 없다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한구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은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갈수록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성장둔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영업이익율을 보니까 대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이 '90년 이후 대기업은 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90년도에 5.9%에서 2005년도에 4.3%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향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나 하면 대기업의 매출, 영업이익이 중소기업에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관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기업은 잘 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구조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감안해서 이 주제의 경우는 한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고 충분한 입장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택 정책위의장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중소기업 정책 중요합니다. 나라 경제의 허리를 유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매우 심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정책은 그동안 각 정부에서 열심히 다듬어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실천적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강조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폐지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정책은 정부의 의지, 위정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지확보를 위해서 위원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기청이 있습니다만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정책을 보장하면서 위정자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천적인 정책 한 가지로서 약속어음 제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세중소기업을 옥죄이는 많은 폐해를 겪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결제기관의 장기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조치로서 이런 것 없애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앞장서서 이와 관련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규정을 점검해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강재규 정책위의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중소기업 문제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지역의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보면 시군단위라고 해도 대기업의 유통사업, 즉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전 상권이 완전히 망해 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책이 전혀 없습니다. 허가요건만 갖추어지면 전부 다 행정청, 허가청에서는 허가를 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한국당에서는 입법부에 들어가게 되면 재래시장 문제, 자영업자 문제 등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신문고 제도를 두고, 공정위원회에서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부당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폐지해서 신문고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서도 범위반이 있으면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다시 이한구 정책위의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기술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있되, 소위 말해서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초기단계에 테이크업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한 2만 5,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기보와 신보에서 민간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때 민간금융회사에서 여기에 대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만 곳에 달하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중기청의 정치자금, 신보 기보 보증지원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2조 8,000억원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2조 6,000 억원밖에 정치자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1년까지 매년 4.5%씩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자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대로 어려운 것이고, 전통적 중소기업은 전통적 중소기업대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까만 철저히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형, 독일형 아니겠습니까. 또는 중소기업을 정부 주도하에 육성해야 된다고, 그것이 일본과 싱가포르 형입니다. 우리는 약간 후자에 있습니다. 결국 시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앞으로 5년간은 과연 미국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본형으로 갈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한구 정책위의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조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원만 받아서는 견뎌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 받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면 다시 지원 받아야 될 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정 기간은 집중적으로 높이도록 경쟁력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는 수출 산업화입니다. 수출 지원체제도 이제는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대기업은 알아서 할테니까 그렇게 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D 투자 세액공제도 대기업보다 몇 배 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기술평가기관이나 기술관리체제도 재편해야 됩니다. 기술평가와 기술 금융들이 묶음으로 해서 소위 조인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신기술 제품이 나오면 초기 시장은 공기업 같은 데에서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정부 및 공공 부문 R&D 지원자금 규모도 꾸준히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부분을 중소기업용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마지막 단계에서 주는 돈입니다. 전 단계에서 주는 돈은 더 늘어납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저가임대산업단지들을 만들어서 지방의 특화된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서 소위 부지 관련한 투자는 안 해도 되게 엄청나게 경기가 줄어들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금융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지방의 금융기관이 활성화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민주노동당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중소기업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면 핵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불공정한 원·하청 거래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핵심은 불공정한 원·하청 간의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하청의 관계를 보면 삼성의 경우 2003년 이후 매년 10조 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96년에서 2003년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무려 1,915%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대기업의 이익처분액 약 80%가 상위 100대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으로 함께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원청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100인 이하 사업장의 90%의 비정규직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먹고 살 수 있는 정규직화 되어야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중소기업도 스스로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원청회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납품 단가 하향금지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단가를 확정할 때 하청회사의 임금인상분까지도 반영하는 단가연동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청회사가 일정 기준 이

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하청기업도 함께 나눠가질 수 있는 원청 이윤공유제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중소기업 분야만큼 경쟁원리보다는 따뜻한 배려의 원칙이 많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자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보면 돈 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은행 창구가 높습니다. 그야말로 담보를 선호하는 대출관행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돈이 꼭 필요하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거래관행도 있지만 신기술, 어떤 특허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센터를 확대해야 되고, 확대도 중요하지만 운영시스템을 바꿔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폐지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성역 없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치, 두부 등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권고적 성격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을 강화시켜서 어떤 업종을 보호할 수 있는 권고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들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이 고유 업종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 발언 횟수를 한번씩 추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재규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각 정당에서 나오신 정책위의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지원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 어떤 정권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다거나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이 지금까지는 모든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든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중소기업을 10년, 20년 지원한 업무를 한 전문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중소기업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정보통신부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까지해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서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부로 통합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또 하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정부에서 돈 장사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농어민에게 지원하듯이 대출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2% 정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중소기업고속도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코트라 등 이런 곳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상품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브랜드화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저희 당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중소기업 영향평가제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처럼, 또는 교통영향평가제처럼 중소기업영향평가를 만들어야 된다, 정책을 신설하거나 법령을 제정할 때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도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중요한 공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영향평가라든지, 부패영향평가처럼 이것을 가지고 강력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꼭 추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 하면 아까 권선택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어음단계적 폐지, 그리고 현금, 전자결제에 대해서는 세제적으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늦게 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 1,610개의 재래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35만 명 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인데 주차장 보유율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한 개당 한 개의 주차장을 반드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느냐, 또 한 가지는 시도 단위 광역별로 재래시장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공동마케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통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

해서 지자체한테 들어올 때 심의조정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조금 더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숨통이 트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나오셔서 앞으로 좋은 것은 반영하도록 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재래시장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인 이하의 고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사회보험료를 절반 정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금을 정부가 지원해서 1,000억원까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도시의 경우 합리적으로 입점을 규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시장, 재래시장, 중소기업, 농어업을 기업화하는데 같이 링크 시켜서 중소기업, 재래시장, 농어촌이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정부가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같이 상생체제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좀더 커질 수 있게 중견 기업화하도록 상속세 완화하는 문제, M&A 활성화 지원하는 문제, 오래된 중소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권선택 정책위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직률이 높고, 보수가 낮고, 근무여건이 낮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매력적인 직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시다만 우선 가정 주부님들께서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만 교육 시키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교육제도를 제도화시켜서 그분들을 생산현장이나 기

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고생이나 실업계 학생들한테 학교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출근 시켜서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고, 졸업 후 그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 현재도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보다 확대시킨다면 인력확보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일정한 기간 근무한 우수한 근로자들,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조성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권을 준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각 당에서 인력확충이나 자금지원,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영순 정책위의장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실현이 되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부를 설치하는 것이 이번에 정부조직개편 때 왜 고민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여러 부처에서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통합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향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정과제 속에서 훑어봤습니다만 일반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대선 때 공약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런 과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업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29%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월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가 37.8%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은 IMF 구조조정 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할 수 없이 퇴출되어서 나온 분이 영세상인으로 전락해 있는 경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대책, 사회 안전망 대책을 갖추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개의 큰 섹션이 끝이 났습니다. 국민들

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 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모두에 발언했던 문제들에 대한 미진함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 발언시간을 당초보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분 30초 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한 각 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각 오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순 정책위의장님부터 2분 30초 동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 정책위의장(서리)** : 경제 살리기가 상당히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법률을 위반해도 경제만 살리겠다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전체 기업에 1%도 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만이 난무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과제나 안 해도 좋은 그런 정책으로 그렇게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양극화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IMF 이후 우리 소득분이 20%에 해당하는 다수의 저소득층이 120만원으로 생활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생활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양극화 해소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것이지, 기업만 사는 것이 경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정책위의장께서 2분 30초 동안 국민들에게 당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의장** : 중소기업 정책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납품단가입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굉장히 심한 분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과 연동시킬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다면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조정제도를 보다 완화시키고 강화 시켜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시다만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 경제는 물가불안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안정 기조를 맞추어놓고 경제 활성화, 경제성장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창조한국당에서도 말씀이 계셨습시다만 대운하사업만큼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심판, 국민들의 동의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엄청난 국가적 영향을 준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는 사고방식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인사청문회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한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충분히 토의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재래시장 분야입니다. 재래시장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육성사업을 해 왔습시다. 그렇지만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모두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분석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재래시장,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시장을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구조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검토되어서 그야말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 주요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한 자리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 방향에 대한 총론적 토론과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각 당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저희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목적이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집안마다 우환이 가득 차 있고, 학교 다니는 기간보다 일자리 붙어있는 기간이 더 짧아져 버린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적인 대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민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데 국민 생산성을 올려야 비로소 외부의 물가상승 압력이 와도 생산성을 가지고 커버해서 국내에서 계속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생산성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정부부문이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조직을 줄이고, 예산을 작게 쓰고, 세금 작게 쓰는

식의 구조 개혁을 하면서 산업계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확보의 방법으로서 기존에는 별로 신경 안 쓰던 분야를 어떻게 하면 산업화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국제경쟁력을 올려야 나라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농수산업을 기업화하는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외면해 왔던 문화, 보건, 의료, 교육 등 이런 계통에서도 이제는 기업화하고 산업화하는데 모든 부처들이 매달려서 일을 할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화되면서 범부처적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중소기업 문제에 매달리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활성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 측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노조에서도 법이 잘 지켜지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이번에는 강재규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조금 전에 이한구 정책위의장님께서 기업도 법을 잘 준수하고 노동자도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노동자를 향한 그런 법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삼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보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투표용지가 두 장입니다. 그래서 한 장에는 지역에 나온 창조한국당의 후보를 지지해 주시고...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선거관련 발언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 주시니까 창조한국당이 유일한 전국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지향하는 정당이고...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경제정책 위주로 입장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그래서 창조한국당이 항상 소수자, 약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런 입장에서 정책을 입법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

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의 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민주당 우제창 정책조정위원장** :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당은 이 방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여당에 있던 국회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거시적인 정책, 재정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의 효율성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으로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인허가 관계라든가 규제 관계를 프로젝트별로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마련한 수많은 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투명성, 책임성 등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선진 경제로 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본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대기업 특혜 위주의 정책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은 더 쌓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장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 성장위주로 생각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즉,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데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성장이 되지 않으면 모든 복지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골고루 사회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아니면 모라는 식으로 어느 한 주제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골고루 정책적 배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오늘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다 다루었습니다. 제가 사실 진행 중 본 의제와 거리는 있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습시다만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관심도 있어서, 아까 강재규 정책위의장께서 한나라당의 대운하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변화를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3분 쯤 드릴 테니까 입장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 일단은 환경 파괴적으로 진행될까 제일 걱정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

라,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문가들한테 많이 의존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돈이 들어가서 다른 자금이 줄어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 가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의 전문가들끼리도 굉장히 의견차이가 심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신중해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의 격차가 좀더 줄어드는 과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확실히 서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끼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제에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과 관계되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본 주제 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논의 중에 다른 당에서 다들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말미에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른 당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준 다섯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양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토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는 3월 13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제3차 토론회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안녕하세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동국대학의 박선영 교수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오는 4월 9일에 시행될 제18대 국회의원 총 선거를 앞두고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서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MBC, KBS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로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들이 앉으신 순서와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을 통해서 확정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이십니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안녕하세요.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이십니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안녕하세요.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이십니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안녕하세요.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한라나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안녕하세요.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이십니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안녕하세요.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정책선거라는 관점에서 알아본 후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 함께 모색해 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의 의제는 정치와 선거를 전문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을 패널로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러한 의제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방식은 각 토론자가 먼저 기조연설을 하고 나면 사회자인 제가 공통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1분 30초씩 발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언을

통해서 상호 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연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연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공천 과정과 공천을 하시면서 심사기준이 어떤 것들인지를 간략하게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유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설 시간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이렇게 3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급속히 부활하고 있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한나라당은 영남당, 민주당은 호남당, 자유당은 충남당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경부대운하는 우리 민족의 재앙이고 환경 대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막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 환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운하를 저지한 돈으로 사람에 투자해서 사람 중심, 진짜 경제, 깨끗하고 따뜻한 자본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책정당을 선택해서 꼭 이루어야만 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께서 기초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선진당 이회창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이 끝난 후 자유선진당을 창당했습니다. 제가 대선 때 말씀드렸던 가치추구의 신보수주의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려 왔고, 또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핵심 가치인 자유와 개방, 양심을 추구하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NP가 몇 % 올랐다고 해서,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신뢰사회, 법치가 확립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가 바로 온 것입니다. 세계은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와 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볼 때 그 나라에도 마약과 살인, 갖

가지 범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법을 지킵니다. 이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저희 자유선진당은 이번 총선에서 확고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당대표 기초연설 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민주당 손학규입니다. 지난 겨울 저희 통합민주당은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대선에서 엄중한 심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희망의 바깥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많이 절망스러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자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국민을 최고로 받들고자 합니다. 둘째,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은 공천혁명 중입니다. 의석수 몇 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혁명을 계속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국민 각자는 더 높은 책임을 주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넓은 배려를 하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기초연설 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신 것을 충분히 은혜를 갚아서 국민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우선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면 방한 칸이라도 적어도 10년, 아니면 15년, 아니면 7년, 5년 만에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보장이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트러져 있는 이 나라의 기강을 모두 잡아서 이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민통합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 하고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4월 9일 총선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로부터 기초연설을 들었습니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천영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진심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민주노동당은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출범 초기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난날 인수위의 모습, 첫 조각의 내각 구성의 모습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재벌의 민원 해결은 빠르지만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국민은 교육비에 시달리고 있는데 영어 몰입교육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있는데 노동하기 좋은 환경은 어디에도 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자를 위한, 재벌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민생안정, 서민경제 살리기로 이번 총선에서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들과 함께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금까지 다섯 분의 기초연설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통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통질문에도 역시 1분 30초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됨으로써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보름 여가 지난 후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로서는 안정론이나, 아니면 견제론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설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함께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안정을 얻기 위해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데 견제와 균형을 떠나서 다수를 확보해서 견제를 배제할 수 있고, 또 어떤 균형에 맞지 않게 확고한 다수의 지배를 세우는 것이 안정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갖추어진 가운데 안정을 찾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석을 확보해야만, 과반수를 잡아야만 안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세력을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안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서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안정이 되었으나, 오히려 소수가, 또는 야당이 다수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극렬한 대치정국을 만들어 내어서 파행 국회로 치달았습니다. 안정은 오히려 다수의석, 과반수 의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이 진심을 가지고 타협과 설득을 함으로써 오는 것이다, 국가운영은 이렇게 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감사합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지난 대통령 선거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 하는 선거였다면 이번 총선은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1%의 특권층을 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99%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범하자마자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인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어긋나는 인사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독단적이고 편협하고 편중된 1%, 소수 특권층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99%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를 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 있는 여당도 필요하지만 깨끗하고 능력 있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이어서 한나라당 강재섭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국민 여러분! 총선은 결국 작년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총체적으로 마무리 하는 총선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주신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어야 결국 뜻을 합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이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정치개혁을 완성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가 아니고 총선에서까지 BBK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의 뒷다리를 거

는 선거가 아니고 정말 정책선거를 위해서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정치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정당, 철새정당, 급조된 정당, 지역감정을 고취하는 이런 정치풍토를 쇠신하는, 정치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이번 총선은 안정론과 견제론이 대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정국 안정을 위해서 국회도 안정이 되어야 된다,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정인가, 재벌과 1%의 부자들만을 위한 안정입니다. 거기에는 서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안정은 없습니다. 만약 중앙행정부도 권력을 장악했고, 지방권력도 대부분 장악했습니다. 국회 권력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할 경우 국회는 국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통범부로서 전락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견제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날 집권당에다 과반수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견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의 독주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다 120석 모아주는 것, 견제시키는 것, 민주당에다 100석, 민주노동당에 20석, 그래서 120석, 어느 것이 견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난 17대 국회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소음 같은 역할, 진짜 청량고추 같은 견제세력, 민주노동당이 있기 때문에 견제가 가능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로부터 들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안정론이나 견제론은 다 부질없는, 염치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지난 수십 년동안 지역에 뿌리박은 양대 정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행복도 가져다주지 못 했습니다. 늘 이념투쟁을 일삼고 지역대결을 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바꿨다고 인수위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청와대 구성에서 달라졌습니까? 내각 장관구성에서 달라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40%미만 대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반사 이익만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지역기반, 구태 정당정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오만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고, 따뜻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착한 자본주의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세계적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새로운 정책정당을 키워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정론, 견제론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제 국회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방식은 토론자 한 분당 1분씩 다섯 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분 발언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드시면 2분까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두 번 발언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쪽 무대를 보시면 각 토론자의 성함과 함께 남아있는 발언횟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숫자를 확인하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첨순서에 따라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불안한 독주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견제이냐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구할 수 있는지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3개월 동안 우리는 이미 벌써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하고 독선에 차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검찰, 권력기관은 특정지역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회, 시군의회, 행정부 모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인사도 편중되고 정책도 왜곡이 됩니다. 그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권을 견제할 균형을 이룰 정당은 통합민주당뿐이라고 자부합니다. 통합민주당은 공천혁명으로 사람도 바꾸고, 정책과 노선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깨끗한 능력으로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정책선거로 치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책선거를 위해서 우선 국민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드립니다. 물가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진정한 정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체 후보들이 국민과의 서약을 실행할 것입니다. 꼭 지킬 것만을 약속할 것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권력집중을 우려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분이 토론해 주실지 토론하고 싶으신 분은 간단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시다만 제가 듣기에 약간 거북한 것은 1%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할 때 보면 흑백논리로 편 가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과연 1%의 국민만을 위하는 정당인 것 같으면 어떻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많은 지지를 국민들께서 해 주셨겠느냐, 또 열린우리당이 결국 통합민주당이 되었는데 그 정당이 옛날에 하실 때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서민 살림 다 망쳐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천영세 대표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열린우리당의 구심인 통합민주당은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여당이었지만 국민을 먹여 살리고 위하는 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판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저희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아직 20일도 채 안 되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숭늉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할 것입니다. 조금 숨 돌릴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지, 시작하자마자 당장 1%의 부자만 위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께서 조금 먼저 손을 드셔서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사실 보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인수위 활동부터 두 달여 지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을 보면 이후의 갈 길이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5년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아마추어 정부라고 늘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 활동, 첫 내각을 구성하는 모습들, 일련의 정책들을 본다면 지금 출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진짜 아마추어 정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인수위 말 한마디에 사교육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라면값 100원씩 올려서 서민들이 어렵다고 걱정합니다. 영어 몰입교육 하나 내놓아서 지금 학부모들 허리가 얼마나 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정국 운영을 사실 제대로 견제해야만 안정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통합민주당은 지난 4년간, 참여정부 5년간 집권정당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더 벌어졌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핵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번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경고했습니

다. 이것은 보호법이 아니라 양산법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손잡고 밀어붙였습니다. 서민안정을 위한 서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과연 민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 의심이 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금 사회 양극화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제가 몸담았던 한나라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거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충분히 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당이 과반수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과거 야당으로 있을 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독주하고 횡포를 부릴 때 우리가 굉장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과연 앞으로 잘 하기를 바랍니다만 짧지만 그동안 해 온 행태를 보면 이렇게 가면 큰일 났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대통령이니까 뒷받침해주자고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무조건 뒷받침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이 원활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오히려 수의 지배보다는 적극적으로 집권당이 야당에 대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겸손할 때 오히려 국정운영이 원활히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과반수를 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서로 타협과 겸손으로 가자고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이 이런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오히려 채근하는 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 있는 세력을 두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민주당이 맡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언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문국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제가 보기에 한나라당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부자 경제인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이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있는데 어떻게 전경련을 먼저 찾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인이 재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하트라인도 전경련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이나 벤처나 국민들과의 하트라인을 먼저 개설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방향이 아주 잘못 선정되었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부를 설치할 듯한 의사를 많이 표시했었습니다. 제가 대선 내내 전체 근로자의 93%가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부 신설을 받아줄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부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책임자는 내각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성공을 이루겠다는 그런 정부의 새로운 구조조정 결과가 이럴 수 있습니까? 비정규직 850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생활필수품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견제보다 도움이, 안정보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역시 화두는 경제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제섭** : 우리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대기업만 위하는 그런 당이 아니고 결국 노동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이 지역정당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공천을 하면서 엄청난 물갈이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봤다시피 이미 한나라당은 영남당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지역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그 지역만을 기반으로 해서 급조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지역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회총 총재님께 지금 급조한 정당이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당이 혹시 아닌지, 그것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답변하시겠습니까?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물론 제가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기반이 영남인 당입니다. 그 후에 전국 정당으로 발전해서 많은 다른 지역에도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 정당이라고 강제섭 대표가 자랑하게끔 되었습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충남에 기반을 둔 국민중심당과 합당을 했기 때문에 기반은 일단 충청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처음 출전하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에 많은 의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한나라당과 다릅니까? 또 대표인 제가 충청도에 나간다 해서 지역당이라면 강 대표도 대구가 아닙니까? 지역당이나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힘으로 어떤 편파적인

정치 운용에 쓰느냐 하는 것이지, 어디에 시작을 두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역성 말씀이 나왔는데 토론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먼저 손학규 대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이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아쉬운 것이 국민 편 가르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장관들 평균 재산이 40억이다, 암 검진을 하러 갔는데 괜찮아서 오피스텔을 사셨다, 여의도는 살 곳이 못 된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가슴에 멍을 입혔습니다. 저희는 과거 열린우리당이 편 가르기 또 민생 돌보기에 소홀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잘못을 이명박 정부가 따라서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뀌고 있습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견제와 균형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조금 전에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강제집 최고위원께서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노동운동사에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정책연대라기보다는 공천연대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대통령께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벌들에 대한 규제 풀어주기 중심이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비정규직은 거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시달리다 못해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 파탄 상태에 빠진 서민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성장은 지난 대선 때 7%에서 6%로 공약을 낮췄습니다. 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 되었는데 60만개 일자리에서 35만개로 줄었습니다. 역시 재벌 요구는 상당히 충실하게 받아들이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쉽사리 손길이 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과 1% 부자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범하는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천 물갈이가 한참입니다만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04년에도 했고 이번에 또 했습니다. 사람을 자꾸 물갈이 하는데 정작 정치 물갈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정책 중심이 아닌 인물중심, 계파 중심으로 선거가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문국현 대표가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저는 이번 총선거에서 지난번 대선 때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 대선 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좌절과 그것을 심판하기 위한 욕구 때문에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 버렸고, 한나라당은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반사이익에 의한 한나라당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많이 야기한 영어 몰입교육이라든가 사교육비를 폭발적으로 늘릴 그런 사교육비 조장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경부대운하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환경에 대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오만한 정치는 나치 히틀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견제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됐던 정당이 좋은 변신을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신뢰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경제적 실망을 드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부동산 투기를 만들고, 세금 폭탄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정당을 비례대표제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으로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고위공직자를 2만 5,000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 사이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인수인계되면 새로 된 당선자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성남에 있는 문서기록보존소에다 보내 버리고 일체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인사자료를 보려고 하면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든지, 아니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해야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야당을 했기 때문에 인재의 풀을 그쪽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보내 버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관의 협조가 없으니까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가 있을 때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에 시정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니까 이런 분은 안 되겠다 해서 여성부장관, 환경부장관, 통일부장관 이런 분들은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제가 민심을 전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 말이 맞다고 해서 포용해서 받아들여서 세 분을 사퇴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정부가 이명박 정부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지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께서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지금 주제가 다른 길로 쏠 것 같습니다만 아까 강재섭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반수 의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대운하 같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국토 파괴하고, 환경 파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다고 해서 과반수 의석 가지고 밀어붙이면 국민이 어떻게 대항합니까?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제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잘못된 것을 즉각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대운하 정책은 잘못가고 있는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박수를 받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진정으로 저는 바랍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대운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에 아마 여기 앉은 대표들이 함께 갈 것입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핵심이 실천할 수 있는 공약,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반성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운하는 대재앙입니다. 이미 국민들 절반이 반대하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 지금이라도 강재섭 대표께서 잘못된 것은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부적격 공약, 당장 이것을 시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대운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님, 이번 한나라당의 공식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1인자라고 하는 이재오 의원은 문경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부대운하 강행 방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또 국토해양부 정종택 장관도 반드시 경부운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한구 정책위의장이라든가 박근혜 대표는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반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오만하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온 국민이 위협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자신 없으면 이번 은평 선거 결과를 따르시겠습니까? 밝혀주십시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강재섭 대표와 천영세 대표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십니다. 나중에 자유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방정부, 지방의회, 중앙행정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국회마저 한나라당이 독점한다면 그야말로 유신 이래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약자와 강자, 다수와 소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됩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지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공천혁명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자세를 바꿉니다. 또 과거처럼 부호와 이벤트에 집착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우선 두 가지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이 정부가 독선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대통령의 수하에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보여주기,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실용이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ROTC 임관식에 가서 임관 장교들을 의자에 앉히고, 퇴역 장군들을 단하에 앉히는 것은 새로운 실용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하지 마시고,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국민들에게 하나라도 쥐어주는 실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이회창 총재님 답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지금까지 안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견제를 누가 할 것이냐입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의 손 대표께서 견제말씀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도 언급하셨다시피 통합민주당은 과거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질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책임정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5년 동안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책임정치입니다. 지난 5년간 실종으로 이 나라를 거의 흔들어놓고 망가트려놓은 노무현 정권의 여당 집권당이 현재 민주당입니다. 이제 좋은 대표가 나오셔서 화장을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뀌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이념과 노선은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당이 견제를 한다면 대개 양가품이 되기 쉽고, 극단적인 대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유선진당이 적절한 견제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하실 말씀들이 무척 많으시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60주년이 되도록 선거 때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끈질긴 연고주의를 극복하지 못 했고 또 지역주의까지 가세해서 그동안 정책선거를 실현해 오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정책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첨순서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저희 한나라당은 이번에 공천심사위원회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그동안 지휘하고 있던 김영래 교수를 공천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공천 신청하는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 제출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손학규 대표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하면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늘상 신문에 보도되고 정책은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내내 BBK를 가지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 수사해서 대선 전에 이것을 무혐의라고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총선용으로 특검을 또 하자고 했습니다. 특검을 해서 또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는데 웃기는 것이 정부조직법을 새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손 대표님 정당에서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작년에 네거티브하면서 극렬하게 하던 분, 솔직히 말해서 김대업 같은 그런 활동을 한 분들을 전부 고소취소를 하라는 식으로 제의를 하면 정책선거는 언제 이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거티브 방지법에 같이 서명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그러면 문국현 대표부터 토론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아까 강재섭 대표님께서 억울하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부대운하 외에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새로운 정책이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가장 큰 정책이 경부대운하일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땅값이 열배 씩 올랐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시켜서 땅값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한나라당의 정책입니까? 또 대운하는 온 국민이, 온 과학자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만한 정치를 계속 하십니까? 서울대 교수님들 수백 명이 1960년 4.19혁명 이후 처음 길거리로 나오시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 교수님들이 동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온 국민이 현재 폐놀 사건에 낙동강 치수가 중단된 것을 1991년에도 경험했고 이번 유아 사건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안 기름띠 때문에 태안 주변의 어민들이, 농민들이 수십 년 고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생명수인 식수원을 기름으로 뒤덮으려고 합니까? 왜 검은 물로 죽이려고 합니까? 또 파주가 15년 전에 침수됐었습니다. 같은 날 태풍에 무너진 뉴올리언스가 지금 3년째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 시민을 수도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은평 투표결과를 따르시겠습니까?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금 강재섭 대표한테 질문이 다시 갔습니다만 아무래도 유사한 질문이시면 이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거기에 대한 질문보다도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니페스토 제안도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 각 당이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구체적인 정책 안은 일반 국민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우리가 이미지 선거나 바람선거를 피하려고 하면 몇 가지 중요한 가치나 이슈를 가지고 정책선거화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동성연예라든가 또는 낙태라든가 이런 가치의 문제가 항상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역선거가 되고 바람몰이 선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대북문제, 핵문제, 가장 중요한 핵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아직 어느 당도 이것을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운하 문제, 국토 파괴와 관련된 문제도 정식으로 선거에 쟁점화해서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말하면서 친미도 친중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한 이야기이겠지만 이것은 동맹의 가치나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또 동맹의 가치 문제들이 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만 정책선거가 되는 것이지, 지역선거 또는 바람몰이 선거, 이미지 선거가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총선도 몇 가지 중요한 국가적인 가치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정책선거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아무래도 질문을 받으신 분이 손학규 대표와 강재섭 대표입니다만 시간을 하나도 안 쓰신 분이 천영세 대표입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학규 대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토론의 주제가 정책선거의 실현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책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만 강재섭 대표가 지난 번 통합민주당에서 정책선거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선거를 했다고 하시면서 네거티브를 거셨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 희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고 선거방식이 네거티브에 더 치중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BBK 특검, 이명박 특검이 끝났습니다만 이명박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미흡하다는 인식이 73%에 이릅니다. 또 따지고 보면 BBK 문제는 한나라당 내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됐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표 측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문제를 고소취하와 관련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정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일부 관찰했고 또 크게 양보했습니다. 고소취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서로 정치적인 금도를 취해야 될 일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흑색선전이나 비방은 다음 주제에서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정책선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바로 그것입니다. 정책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서 빼앗긴 것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지금 주제가 정책선거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대선에 BBK를 비롯한 각종 비리와 의혹, 정책은 하나 훑어보지도 못하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조짐이 지금 총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27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거대 정당은 계속 공천 물갈이를 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바뀌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정책은 바뀌었습니까? 4년 전에도 계속 물갈이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 4년 뒤 19대 총선 때 또 물갈이 할 것입니다.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일을 앞두고 사람만 바꾸면 정책선거가 됩니까? 지금 민생, 서민정책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사람 물갈이 하면서 정당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선거 전술로 쓰는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오랜 반세기의 그런 정당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책선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정책선거를 놓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당 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합집산 일어납니다. 또 새로운 정당이 생깁니다. 포말정당입니다. 선거 끝나면 그 정당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정책정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 중심으로 흐르고 정책이 없는 선거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정말로 정당정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정당이 어디인가, 그것은 누가 봐도 모든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처럼만 하면 정책선거 이루어집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천영세 대표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도 지금 당명을 바꾸지 않고 잘 났을 때, 못 났을 때 계속 해서 이번에 정권창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선거가 되려면 결국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당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포말정당, 철새정당, 요새는 철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매달 바뀐다고 해서 월세정당, 이런 식으로 정당이 바뀌니까 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조하니까 정책도 남의 정책을 한나라당이 실컷 만들어 놓은 정책을 급조한 정당이 빼껴가서

이것을 자기들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새정당, 대선을 앞두고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단 지지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손학규 대표께 말씀드린 것은 이제 네거티브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 총선 때는 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소고발 취소하려면 앞으로는 절대 네거티브를 하는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지법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허위로 광고 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광고는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시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런 법을 같이 제도적으로 통과시킬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비방 관련된 것은 다음 주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저는 이 자리에서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운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아주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생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 다들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식품 값 폭등이라든지 식량안보,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렇게 합의는 일어났는데 이번 5당 대표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책토론이 가능합니까? TV, 라디오, 신문을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5당 대표가 선관위 바꾸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5당 대표가 합의하면 이제 정책토론회 열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강소국연방제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를 5,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권역이 마치 단위정부와 같은 그런 국가 권력과 비슷한 자치권한을 가지고서 세계 속에 들어가서 뛰게 하자, 싱가포르, 필란드 같은 독립된 정부처럼 개방해서 나가서 뛰게 하자, 그렇다면 5, 6개의 권역이 합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5플러스 2의 경제권역으로 나누는 그러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찌면 그렇게 제가 대선

때 주장했던 그러한 5, 6개 권역별 분권안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가 원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자유선진당은 지난 대선 때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정말 5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미래의 비전과 그림을 그려서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거에서 정책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당이 내놓은 그림이 얼마나 좋느냐, 또는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정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거를 그야말로 이미지 선거, 바람 선거, 공천으로 한바탕 뛰어드는 선거로 간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한나라당과 같은 집권당은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고 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손학규 대표 토론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이번 총선에서 저희 통합민주당은 깨끗하고 유능한 대한정당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 오늘 지금 토론의 주제가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인데 공약 매니페스트가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총선 예비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트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국민들이 아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통합민주당의 매니페스트 공약집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교육 매니페스트가 나왔습니다. 서민경제, 복지, 부동산 등 공약 매니페스트가 순서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부운하, 국민 반대가 거세지니까 총선공약에서부터 숨기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민생공약 45개 중에 25개는 국정과제에서 사라졌습니다. 특히 복지대책이 그렇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720만 명 신용불량자의 채무탕감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재섭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검증이 필요한 경부운하정책을 총선공약에서 배제하는 것은 알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민생공약의 폐기도 문제입니다. 공약을 앞세워서 인기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그냥 폐기하는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책선거의 실천방안을 이야기한 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다시 강재섭 대표에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간을 천영세 대표가 가장 많이 안 쓰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질문이 계속 강 대표한테 집중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시간 활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정당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경우 공천에 요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특정 정당,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하면 곧 당선이다, 뱃지 달고 의회에 입성하기 때문에 시끄럽지만 이것은 조용히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 당의 정체성이나 정책을 널리 알릴 후보들을 비례 후보의 경우 전략적으로 공천합니다. 이를 테면 몇 분들만 소개하면 여성 장애인 1번입니다. 당원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런 정책을 확고하게 앞으로도 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공천 2번은 비정규직입니다. 이번에는 평생을 환경미화원으로 살아온 870만 비정규직을 대표해서 의회에 입성시킬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대에 이어 18대에도 민주노동당이 혼신을 다해서 온 몸을 다 던져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88만원 세대로 20대 후반의 대학생을 공천으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청년 실업문제, 역시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략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원 등록금 시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로 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민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100여 명 출마자 중에서 43%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기존 정당들이 정책대결을 피하고 있는가, 또 별 정책 없이 서로 상대방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넘겨받는가 하는 것을 보셨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얼마나 좌절하시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희망이 없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책 대결을 하지 않아도 지역 바람만 잘 일으키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늘 지역 표를 몰표로 받아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정당들이 왜 국민 여러분께 필요합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지역 연고주의 버리십시오. 그런 것 이용하는 정당 버리십시오. 새로운 정당을 만드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법이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인 2표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표는 그래도 과거식으로 지역에서 안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찍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무려 245표나 됩니다. 전체 의석수의 82%입니다. 그러나 18% 미래정당, 정

책정당을 위해서 배정된 54석만큼은 절대 지역을 연고로 한 정당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면 뭐 합니까? 이제 18% 54석을 새로운 정당, 정책정당에 주시면 18%가 82%와 경쟁하게 됩니다. 정책경쟁이 일어납니다. 국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위한 국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이제 네 분이 각각 1분씩 남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대운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왜 총선 공약에서 뺐느냐,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무조건 강력히 추진해 나가지 않고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총선공약에서 일단 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여론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뜻도 들어보고 이것은 어차피 국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외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총선공약에서 뺐 것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국현 대표께서 자꾸 대운하 말씀을 하시면서 은평구 이야기 하시는데 은평구에 아마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재오 의원도 이야기하고, 너무 총선용으로 대운하를 발언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선거 운동에 관한 발언이 나오면 제가 중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오늘부터 저희 당 매니페스트가 출판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의 대중화를 위해서입니다. 매니페스트의 핵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은 민생 제일주의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물가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통합민주당 민생물가지수를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물가를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되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큼니다. 등록금 후불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반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입니다. 군복무를 중소기업근무 대체제도를 만들고 납품단가를 원가에 연동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마지막으로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매니페스토 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책, 공약, 훌륭한 공약 좋습니다. 문제는 실천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실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들이 쇠사슬 걸고 한강대교 넘으면서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치부패 해결이 시급하다, 모든 정치인 정당들이 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직자 윤리법 개정할 때는 다른 정당, 정치인도 소극적입니다. 거의 솜방망이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실천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 검증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한나라당이 전에는 정책이 탄탄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의 정치는 조금 엉성합니다. 대운하도 그렇지만 비핵3천, 비핵화가 되면 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리겠다는 약속입니다만 대외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남한의 국민소득 10분의 1, 2,000불 올리는데 15년이 걸리고 160조원이 걸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000불이면 얼마가 들고 얼마가 걸립니까? 전혀 비현실적인 것,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북정책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점에서는 한마디 말없이 비핵화 되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3,000불 올리겠다는 것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저는 한나라당 정책이 현실성이 떠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하루빨리 정책선거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깨끗한 선거의 실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일단 금품수수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이 나온 대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권력기관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보았듯이 특정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금품수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재보궐 선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15대, 16대,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흑색선전이 난무했던 것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과연 어떻게 하면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각 당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우리 사회의 선거가 그동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총선에서 몇 억은 써야 당선인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앞다투어서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선거 때만 되면 고소고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외람됩니다만 한마디로 민주노동당만큼만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민주노동당이 해오던 대로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당비 1만원 이상씩 꼭 내야만 당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진성당원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당 재정의 상당부분을 10만 여명 1만원 씩 내는 당비로 저희들은 충당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당원들이 특별당비를 냅니다. 5만원, 7만원, 어떤 경우는 10만원씩 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당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정치후원금, 개미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 다수모금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을 두어서 국회의원이든 중앙당이든 30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반드시 당의 예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불법정치후원금은 근본적으로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깨끗한 선거는 정당정치의 확립입니다. 그래야만 정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돈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산다는 발상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정당정치가 확립이 되면 정책선거도 될 것이고 깨끗한 선거도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아까 강제섭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반박하고, 천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대운하를 이번 총선에서 명백히 하지 않고 국민투표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 어디서 국민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것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경부대운하 건설 총 사령관을 자처한 이재오 의원과 경부대운하를 저지하겠다는 사람이 1대 1로 대결함으로써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국민을 피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으로 삼았으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이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자신 있는 태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선거

가 이렇게 혼탁해 지는가 보면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고 썩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청도군민들, 희생자 여러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영천에서도 1,000여 명들의 군민들이 돈을 받았다고 몰려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수천 명의 정직한 국민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나라당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썩도록 놔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국민들의 입은 재갈을 물립니까? 왜 인터넷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선관위와 짜고 이렇게 만듭니까? 이번 중앙지법에서 바로 잡았습니다만 인터넷 재갈 물리지 마십시오. 이런 정책토론회 활성화 하십시오. 방송토론에 활성화 하면 부정선거 없어집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우선 자꾸 출마하시는 은평 지역에 있는 이재오 의원과 자꾸 총선 토론회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 깨끗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임명진 목사님을 당의 윤리위원으로 모셔 오고 윤리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전부 외부 인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해 때 골프 치는 분들을 과감하게 저희들은 제명도 하고 그 사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은 지금 어떤 범죄이든 간에 일단 법원에 검찰수사에 의해서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소된 분은 당원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신청 자체를 저희당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신청을 하는데 부정부패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문전에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당규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당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도 전부 심사해서 이번에 안 받겠다고 하니까 참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옥의 티는 무엇이나 하면 옛날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문에 부정부패에서 금품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 당에 강신성일 의원 이런 분은 그때 구속되어서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여당 하신 정당의 모 의원은 지금까지 재판이 지체되어서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대법원 판결 선고하는데 그런 분은 공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 당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들도 좀더 깨끗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한번에 쓰실 수 있는 시간은 2분이 최대입니다. 유념해서 말

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금품선거는 사실 표면상 상당히 잡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에서 전혀 돈을 안 쓰는 선거가 현실적으로 100% 가능한 지 저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처벌하는 것도 물론 질서를 잡는데 중요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할 필요가 없게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돈 쓰는 부분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 즉 정치자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깨끗한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개입입니다. 관련개입하면 요즘 세상에 무슨 관련개입이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한나라당이 거의 석권하다시피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때때로 여당이 되어야만 지역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따올 수 있다, 또 그래야만 편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선거에 불공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깨끗한 선거는 후보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같이 함께 걱정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거티브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선거를 이루기 위한 한 가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 누구 할 것 없이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금품선거 관련개입 네거티브에 대해서 경계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손학규 대표께서 시간을 한번도 안 쓰셨습니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정치에서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 사람입니다. 정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깨끗한 선거, 깨끗한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첫째가 될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은 공천혁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천혁명을 하자니까 아픔도 많습니다. 억울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선거 풍토,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한 선거 풍토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공천혁명을 통해서 통합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풍토가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지 않을 수 없는 정치구조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 안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든지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불법한 정치자금 거래행위에 가담하고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를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당규에 명시하고, 그저 명시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만 깨끗한 선거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어느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모두에 강제성 최고 위원께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 서로 서약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색깔론입니다.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와 일부 몇몇 각료들 사이에서 인적 청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좌파적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략적으로 진행되는 색깔론 아니냐, 앞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었는데 지금 와서 뒤바뀌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색깔론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의에 기대서 득표하고 선거 치르려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안한 네거티브 전술을 이번에 쓰지 말자,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서 같이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색선전이라든지 인신공격고 하지 말고 포지티브로 선거를 치르면 좋겠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같이 합의를 하시면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발언하실 때 2분 이상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강대표께서 20초 초과하셨으니까 마무리 하실 때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느 분께서 토론하시겠습니까?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이왕 합의를 하신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동안 인터넷에서의 어떤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기존 국회에서 그리고 선관위에서 억제해 왔습니다. 이것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위헌이라고 판정이 난 이상 선관위도, 국회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흥미가 다시 부활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선거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5당 대표가 선관위를 설득해서 정책토론회 12회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요정책,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토론하기를 제안하는데 여러 대표님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금 의회나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여기에서 합의

를 통해서 이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아까 천영세 대표께서 색깔론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존 정부의 정책이나 정책 방향을 정권교체가 된 후에 새 정권이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방향, 잘못된 극도의 평견주의적인 정책들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을 바꾸는 문제, 물론 전 정부 때 사람을 심어놓고 일부러 대못을 박기 위해서 직전에 심어놓고,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마땅치 않지만 법이 정년을 정하고 있으면 정년을 무시하고 바로 나가라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되, 본인이 스스로 법이 정한 취지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어느 분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당의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몇몇 장관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색깔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석 비서관을 했다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정부산하단체의 무슨 언론재단이다,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인 코드에 맞추어서 집권해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혀 코드가 다른 새로운 정부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강제로 쫓아내겠습니까? 대못 질을 해서 쫓아내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나가시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충분히 있는 중사법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의 대법원 판사라든지 검찰총장 분들을 우리가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혀 정책이 다른 국정홍보처장 같은 분이라든지, 이상한 방송사 사장을 하셨는데 늘 편파방송을 하고 이렇게 한 분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회창 총재님 말씀처럼 스스로 물러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초를 아꼈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학규 대표 말씀하시겠습니까?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인 검증 장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당 차원에서는 당에서 공천검증을 통해서 깨끗한 후보를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선관위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당 대표의 방송토론도 유효합니다만 특히 지방에서 국회의원 선거, 시장군수 선거,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검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더 폭넓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토론을 많이 기피 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깨끗한 선거와 관련해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토론 해 주시겠습니까? 문국현 대표, 이회창 총재, 손학규 대표 세 분 모두 2분씩 남아 있습니다. 문국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평구 이야기라든지, 이재오 의원 말씀을 더 하시는 경우에는 제지를 하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깨끗한 선거는 정당인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언론 방송도 정책토론회를 필요한 만큼 늘려주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만 TV, 라디오, 신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것도 사실상 잘못된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말 애석하게도 청도주민들 일부 자살까지 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 함께 돈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꿎은 생명을 빼앗아갔고 우리 정치의 신뢰를 무너트렸습니까?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금품수수는 정말 빨리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풍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회창 총재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공천에 관해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의 대표들께서 무척 자랑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각도에서 봅니다. 지금 재판을 받았으니까 신청자격도 주지 않는다, 사실 재판 받았다 하더라도 형이 실효되면 헌법상 피선거권, 선거권이 다 있습니다. 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참여시켜서 내용을 봤더니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참여시키지도 않고 잘라내는 것은 국민들이 박수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중진들을 잘라내고 많은 사람을 잘라내니까 국민들은 박수합니다. 저는 약간 포퓰리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실제로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손학규 대표가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깨끗한 선거 실천을 위한 고민들이 정치인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정치 신인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돈 선거, 사조직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묶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 신인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정치자금이 들어가지만 설사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불법을 유도하게 되고 비리와 탈법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적인 것은 고치고, 법은 엄격하니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고무줄로 적용해서 감옥을 갔다 와도 처벌을 받아도 바로 그냥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되지 않게, 충분히 기회는 주되 법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법의 적용은 국민적인 차원에서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방금 정치 신인들의 정치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조직적으로, 정당별로 보면 정치자금,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압도적으로 교섭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300억 원 가까운 국고보조금이 나왔습니다만 거대 두 정당에 110억 원, 120억 원씩 갔습니다.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이 한 20억 씩 왔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도 배분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책선거를 실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려면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비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물량, 수량으로 대결하는 형태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치자금 제도자체 배분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진 정당의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결국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명박 후보가 늘 1등을 갔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보면 기업인이나 이런 데에서

자금이 한나라당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체 그런 것을 단절하고 정말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당의 후보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못해서 다시 또 재보궐 선거가 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 후보도 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제가 한나라당 총재로 있을 때 16대 총선에서 30 몇 %의 물갈이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목표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언제는 30 몇 %였으니까 이번에 40%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다분히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매해 30~40%씩 걸러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는데 그러면 매 임기마다 30~40%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냐, 이것은 인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퓰리즘보다 진정으로 깨끗한 정치를 위한 공천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문국현 대표 1분 쓰시겠습니까?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군민이라든지 영천군민들처럼 1만원의 혜택을 받으면 50배의 벌금인 50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도층이 일으킨 범죄의 10분의 1도 벌금을 내는 일이 거의 없고 태반이 사면이 됩니다. 지도층이 썩은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국민만이 완전히 깨끗할 수 있고 50배의 벌금을 내야 됩니까? 이토록 유전무죄의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 깨끗한 선거를 이루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새벽 1시가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지금까지 토론을 하시면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거나 또는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문국현 대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국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밤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운하만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저지해야 합니다. 또 부패에 타락한 정치인들 이제 그만 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 더 이상 믿지 마시고 그만 두게 하십시오. 이제 국회를 바꿀 때입니다. 대운하 하나만 저지하더라도 최소 4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을 사람에게 투자하고 지역개발, 재개발, 재건축, 농촌을 살리는 일, 중소기업을 세계화하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보육, 교육과 평생학습을 국가 책임제 하에 둘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8만 6,000원 중에서도 일부를 겨우겨우 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16만원을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 정부대운하를 저지하는데 있습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예전 야당 시절에 당시에 여당이 과반수를 가지고 횡포를 부릴 때 얼마나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는지 상기해야 합니다. 또 한나라당은 무력감을 가지고 그 횡포에 맞서면서 얼마나 격렬하게 대처하고 파행국회로 갔던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국의 안정은 다수나 의석이나 과반수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견제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그 역할을 하면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통합민주당은 반성과 쇄신을 통해서 자세의 변화, 사람의 변화, 정책의 변화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능력 있고 대안을 가진 정당으로서 민생을 첫째로 민생제일주의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당, 더 많은 기회, 모두를 위한 정의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좋은 사회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통합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만으로 평가해 주지 마시고 저희의 의지, 노력, 미래 가치를 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의 변화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제일주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질 것입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로부터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여러분들의 큰 머슴으로 뽑아주셨습니다. 큰 머슴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저희들은 170석, 180석 이런 많은 의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반, 그러니까 150석의 딱 1석만이라도 많게 해서 꼭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거티브선거, 지역주의선거는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새정당, 급조된 철새정치는 이번에 꼭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보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올곧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지금보다 의석이 더 많아지면 우리 사회에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과분하게 사랑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 보수정당과는 분명히 출발부터 다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권리와 생활을 지키자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번 총선을 거쳐서 반듯하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활안정, 민생안정, 서민경제 살리기에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박선영 동국대학교수)** :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 분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열면 토론에 임해 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서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신 다섯 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심한 시각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으셔서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고, 무엇보다 정책선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섯 분의 정당토론을 지켜 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으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고, 선거문화가 깨끗하게 변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정책토론회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엄길청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이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 규정 근거해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비교·평가하시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금 2시간 동안 전국의 KBS와 MBC 방송망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일곱 분의 각 정당 정책위원장을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담당 최고위원입니다.
-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안녕하십니까. 엄호성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원장이십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원장이 류근찬 : 안녕하십니까. 류근찬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진보신당 운영상 정책위부위원장이십니다.
- 진보신당 정책위부위원장 운영상 :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의 운영상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원장이십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임태희 :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원장이 서리입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이 서리 이정희 :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원장이십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원장이 강재규 : 안녕하십니까. 강재규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 통합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최인기 : 안녕하십니까. 최인기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오늘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쇠고기 협상문제와 고유가 등 물가안정대책을 가지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책을 심도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주제는 사전

에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제입니다. 오늘 먼저 진행방식은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토론자 일곱 분께서 1분 30초씩 답변을 하신 후에 토론자 상호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문제'에 대해서 각당의 입장을 듣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등을 포함하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마치고 관보를 통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습니다마는 국민건강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각 정당의 의견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박연대 말씀해 주십시오.

-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어젯밤에 촛불시위가 과격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검역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은 요구를 했지만 결국 '졸속협상'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촛불시위로 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6월 10일 아시다시피 100만 군중이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소통부채를 절감하고 정부 홍보라인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진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협상을 다시 진행해서 일정 부분의 협상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여당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까지 기다리면서 설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불과 하루 만에 관보 게재를 강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에 결국은 국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고, 특히 정치권에 대한 두루두루 의사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국회를 열고 또 정부 여당에서는 각 단체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이 추가협상의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벌여가고, 국회는 국회대로 이 문제를 용광로에 녹이는 차원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장 답변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불행스럽게도 어제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발효되어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부가 추가협상 내용을 받

표할 때만 하더라도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진정시키고 잠재우는 노력을 치열하게 한 뒤에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며칠 후에 느닷없이 이 고시를 강행함으로써 해서 지금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들은 국민대로 대단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특히 등원 문제를 겨우 가까스로 협의하는 여·야 정치권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쇠고기 고시가 강행됨으로써 해서 이제 이 문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유의합니다. 애초 최초 협상은 7개의 SRM 부위를 제외하고 전 쇠고기가 수입되도록 협정을 맺어놓고 지금 QSA라고 하는 민간자율규제 품질시스템 평가프로그램을 가지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고 실효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철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윤영상** :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을 둘러싼 추가협의를 광우병 위험물질의 반입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여전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촛불시위를 국가 정체성 운운하면서 강경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그런 정부가 민주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30개월 이상이나, 이하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허가 들어옵니다. 내장도 들어오지요. 선진회수육도 들어옵니다. 이미 EU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라고 규정했고, 한국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내장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광우병 위험물질이 곳곳에서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과연 있습니까? QSA라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독재자이기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 입장 들어봅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먼저 이 쇠고기 문제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정이 파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될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서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당초에 이 쇠고기 협상 문제는 첫 협상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 또 여당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미국과 전개했던 것입니다. 쟁점이 됐던 것이 3가지입니다. 검역주권의 문제, 30개월 이상의 광우병의 우려가 높은 쇠고기 수입 중단문제, 그리고 뇌, 눈, 머리, 척수와 같이 국민들께서 혐오하는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이런 부위들에 대해서 SRM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30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 식탁위에 오르지 않게 한·미간에 정부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역주권의 경우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지에 필요하면 도축장을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놓았습니다. 문제 있으면 수입중단 합니다. 그리고 뇌, 눈, 머리뼈, 또 척수 같은 경우에는 수입되지 않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국민 여러분께서 촛불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국민들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힘에 밀려서 반성문을 쓴지 5일 만에 국민들에게 “불법시위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변경한 고시안을 제대로 보여 주지도 않고 관보게재를 어제 강행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논의하셔서 추진한 일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촛불을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완전한 전면 재협상과 그리고 정말 정부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12살 초등학생이 연행됐습니다. 81살 잡수신 어르신께서 연행됐습니다. 경찰의 불법적인 통행차단에 항의하고, 또 무리한 연행에 항의해서 경찰책임자가 나와서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현직 국회의원인 저까지 경찰에 불법체포·감금됐습니다. 과연 이렇게밖에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재협상 결과에 안심하지 못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재협상을 해서 안전한 쇠고기를 들여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런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협상을 한 것일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촛불의 힘을 보여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입장을 들어봅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제규** : 사실 저는 종전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4월 18일 쇠고기 협상, 그리고 지금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추가협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전 초기의 협상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일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이고 왔다’ 이런 비판까지도 있습니다. ‘뇌, 눈, 머리뼈, 척수 이것을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다, 내지는 30개월 이상 월령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야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판단을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들의 자율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협상이다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우리 촛불이 잠잠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든 월령의 쇠고기, 모든 부위가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습관은 내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쇠고기의 위험물질,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아주 즐겨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계의 실험실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최인기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지난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국론의 분열과 소모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바로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줄속으로 그리고 굴욕적으로 발생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오만과 독선을 자행하면서 미국에는 저자세로 굴욕적인 협상을 했던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 협상을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검역주권의 문제,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건강상의 안전항에 대해서도 30개월령 이상을 들어오지 못하게는 했습니다마는 QSA라고 하는 민간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실시기간도 모호하고, 또 언제든지 이것은 파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안전을 확보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내장을 비롯해서 사골 뼈, 이런 것까지 모두 수입한다

면 그동안 불안했던 국민들에게 안심을 지켜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시 강행마저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고시를 하면 합의사인을 하겠다, 이 얼마나 굴욕적인 현상입니까? 대단히 굴욕적인 협상이었던 것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제 각 정당의 기본입장을 7개 주요 정당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자유상호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규칙은 1분씩 모두 총 4번의 기회를 각 당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1분이 짧다고 생각되시는 분의 경우는 2분까지 발언이 가능합니다만 3회 연속 사용은 안 되겠습니다. 이때 2분을 다 쓰시게 되면 두 번 사용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대 앞쪽을 보시면 각 토론자별로 잔여 발언횟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혹시 지명토론하시고 싶은 분은 하셔도 좋습니다만 가급적 잔여 발언횟수를 고려해서 지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저에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당의 자유토론으로 들어갑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문제 조금 전에 현격한 각 당의 입장차이를 보셨습니까라는 지금부터 좀 더 밀도 있는 토론, 류근찬 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앞서 제가 말씀 중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임태희 의장님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 당 입장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태희 의장님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했다, 확보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30개 월령 이상이나, 이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안전한 쇠고기를 사다 먹겠다고 하는 건강권 차원이고, 검역주권과 관련된 요체는 고시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라는 고시 제5조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국제 수역사무국 OIE가 미국을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 쇠고기를 가져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정말 안전한 쇠고기를 먹기 위해서 중요한 규정인데,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주에서 얼마 전에 13년 만에 광우병소가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이미 광우병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연히 광우병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British Columbia는 바로 최초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던 미국 워싱턴 주와 아주 인접해 있는 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늘 상존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그 쇠고기를 우리 스스로 수입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재협상을 통해서 손을 못 댄다면 우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이 부분을 분명히 규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임 의장, 대답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가급적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종합해서 하시겠습니까? 다음 어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엄호성 위원님!
-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꼭 여론조사를 제가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24일 동서리서치에서 이번 추가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의 한 2/3 정도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74% 정도는 '재협상을 하라' 이렇게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정부 여당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됐다는 전제하에 관보 계재를 강행했는데, 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당의 임태희 의장께서는 이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협상에 대한 잘못을 국민이 지적한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최 의장님!
-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지금 정부가 추가협상을 완료했다고, 검역주권에 관한 문제, 건강권에 관한 문제, 이제 모두 해결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검역주권을 요구했던 것은 당당하게 주권국가답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우리의 주권적인 권리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미국의 도축장에 대해서 지금처럼 우리의 승인과 취소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달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도축장 작업장에서 위생조건을 위반할 때는 우리의 권한으로 즉각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달라, 검역주권은 그 3가지입니다마는 추가협상에서 보면 이제 작업장에서 특정해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만 강화했을 뿐이지, 그 3가지 어느 것도 명쾌하게 해결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근거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QSA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인

정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미국이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하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마는 여러분, 지난번 요즘 문제가 됐었던 다운너소, 앓은뱅이 소의 경우는 미국에서 식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광우병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자들이 몰래 도축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공개됐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축산업과 도축업자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간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당의 생각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창조한국당의 강 의장 말씀하시지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이번에 쇠고기 협상이 얼마나 형편없었던 협상이었는지 간단한 말로 제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이명박 정부를 일컬어서 옛날의 이라크전쟁에 참여했던 영국의 토니블레어 수상을 부시의 푸들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부시의 토니블레어보다 더 나아간 부시의 푸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쇠고기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동맹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G8 회의가 7월에 일본에서 열리는데 이번에 7월에 일본 방문했다가 부시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윤영상 부의장님 말씀하시지요.
-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한나라당의 임태희 의장님께서는 이번에 성과로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내장, 특히 곱창, 막창, 그리고 꼬리뼈 이런 부분들은 전부 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한국에만 수입이 됩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 중심으로 수입이 됩니다.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이 아니라 내장부터 시작해서 선진회수육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그래도 통제가능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심지어는 광우병이 얼마 전에 발생했던 캐나다보다 그 과정이 대단히 부실하고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2005년도에 입법예고했었던 미국에서 사료조치

는 처음에는 모든 소의 뇌와 척수를 다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4월에 발효된 사료조치를 보면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와 척수는 그대로 사료에 사용해도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도축되는 소의 거의 90%가 30개월 미만의 소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속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30개월 이상의 모든 소는 전수조사에서 검사를 합니다. 일부는 30개월 이상·이하 할 것 없이 모든 소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체 소의 0.01%만 조사합니다. 1년에 3,300만 두 정도가 도축이 됩니다. 그 중에 0.01%면 거의 3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을 믿고, 미국의 QSA제도를 믿고 이 문제를 풀자고 이야기합니다. 광우병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시지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임태희 의장님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임태희 의장 말씀하시지요.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우선 검역주권의 문제는 한·미간의 추가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고시부칙에 넣습니다. ‘국민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입중단 등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을 우려합니다. 어느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수입중단을 취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고시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될 것입니다. 특히 광우병이 미국에서 추가로 발생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고, 우리 검역전문가가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고시를 왜 빨리 이렇게 했느냐, 원래 한·미간에 합의되면 국제적으로는 통상 협상 원문이 사인되고 국내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국이 두 번에 걸쳐서 사인을 서로하고도 국내에서 고시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동안 두 번 한국에서 사인하고도 고시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런 협상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전 두 번에 걸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저희 측의 책임 때문에 이번에는 고시를 하면서 막바로 사인된 협상문서를 같이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정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월요일에 고시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검역에 대한 지침이나 국내 유통될 경우에 여러 가지 보완대책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당에서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고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고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도 설명드리면 자율규제를 신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이정희 의장 말씀해 하시지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검역주권을 고시부칙에 넣었다,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입중단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원래 수입위생조건 제5조에 대해서 ‘이것은 광우병 쇠고기가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보도 자료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칙 제6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되어서 한국은 GATT 제20조와 WTO SPS협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이 부칙 제6조는 본 내용 제5조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조차도 이 부칙 자체는 본문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상반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협정에서 정본은 영문본입니다. 한글본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생조건으로 번역되어서 국내에 시행될 뿐입니다. 해석은 영문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협상을 잘못된 첫 번째 중의 하나지요. 그렇다면 이 수입위생조건 부칙은 본문에 따라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따지고 들어오면 우리 정부가 대항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직도 이 부칙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본문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수입중단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사인 안 된 것,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시 관보 게재 연기하면 아직도 재협상할 수 있다고 국민이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힘을 믿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일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 먼저 양보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 자체가 정부가 굉장히 양보하고 있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줬다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재규 의장 말씀을 듣고, 다음에 류근찬 의장 말씀을 들겠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제가 말씀 시간이 다 되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

이 있어서 하고 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우선 강재규 의장 먼저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답변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앞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식생활과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12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도 SRM, 그러니까 광우병 위험물질이지요. 이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리고 2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살코기만 수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음식문화, 저는 조금 전 아침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먹어 보자는 심정으로 설렁탕을 먹고 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음식문화는 뼈를 고우는 것, 그리고 내장 수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즐겨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음식들을 완전히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먹을까 말까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쇄육, 아까 어떤 고기 부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시지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런 재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 식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것들이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류근찬 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아까 제가 고시 제5조와 관련해서 검역주권과 관련된 규정이 잘못되어 있고 엉터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임태희 의장님은 부칙에 보완하는 규정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정희 의장님도 그 부칙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GATT 제20조와 WTO SPS 협정 이 2가지를 보면 분명합니다. 이 2가지 부칙에 넣은 조항들이 숨어있는 무역장벽으로 이것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이 유효하려면 예컨대 미국의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 고기를 먹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유해롭다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거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어줍니다. 따라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길게 걸리지요. 따라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돌아서 지금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해야지, 그 거증기간을 다 거쳐서 이것을 거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정을 억지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임태희 의장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우선 고시부칙에 들어있는 내용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현존하는 위험이 생기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수입중단조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상의 상황을 전제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에 여쭙고 싶은데 지금 재협상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재협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한·미간의 합의된 이 내용 이상으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능하지 않다면 도대체 이 협상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규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고시에 보면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척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이상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자율규제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고시에 대해서 자체를 불신하시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까 코스타리카 협정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부가 이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련되어서 국민들 불안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도 협상중이다, 다른 나라 협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재협상하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교력을 모두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외교 공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제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 아들었습니다. 촛불문화제가 시작됐던 며칠 후인 5월 6일에 코스타리카와 협정을 통해서 이미 거기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되어 있고, 내장도 회장원위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협상이 체결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것 금지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관보 게재 되기 바로 전날인 25일에야 미국에 그제야 이런 일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협상 제대로 잘 하신 것입니까? 국민들이 믿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잘 한 것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했나 이것이지요. 일본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협상하면서도 결론 지어 주지 않고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미 고시 관보 게재를 두 차례나 연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용하셔야지요. 국민에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 더 못 하겠다, 물어보실 것이 아니고 국민의 힘을 받으셔서 미국과 상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협상의 지렛대입니다. 당장 영문본만 정본으로 되

어 있으니까 한글본은 정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처음에는 번역조차 잘못 하셨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 협상결과 발표하시면서도 ‘무기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소비자 신뢰 회복될 때까지 수입하지 않는다, 반성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문본, 정본을 확인해 보니까 ‘무기한, 기한 없이’ 단어 없습니다. ‘소비자의 신뢰 개선될 때까지’ 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한 협상입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운영상 부의장 답변하시지요.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운영상 : 이정희 의원께서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칠레는 국회 비준까지 거친 관계지요. 자유무역협정을 취했는데 그런데도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협상 문제를 가지고 저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보다는 오히려 다른 측면을 거꾸로 꼬집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너무 속전속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이쯤 됐다, 50회가 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두 달이 넘게 공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가자, 귀찮다, 힘들다, FTA가 기다린다, FTA를 하면 정말 우리에게 마법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쇠고기 협상문제를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노무현 정부는 “쇠고기 문제와 FTA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쇠고기 문제와 FTA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FTA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쇠고기문제와 농업문제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FTA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레첵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하면 후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이번에 QSA제도라고 하는 것이 경과조치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보통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략 1년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FTA 비준되는 시점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 모든 농·수산물들이 자유화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연결된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QSA나 추가협이라고 하는 것이 FTA 체결과정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릴 수도 있다, 있는 것마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하는 척하지 말고, 제발 척하는 척 정부로 존재하지 말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들끓는 국민들의 민심을, 국민들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투표를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엄호성 최고위원의 말씀을 듣고 강 의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 최고위원!
-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추가협상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아까 이정희 의장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마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인정될 때까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조건 문안이 그런 식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문제는 논외로 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했느냐에 대해서 국민은 매우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 된 소는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얼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된 소가 수입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생기면 전 국민이 다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어쨌건 이 부칙조건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 굉장히 국민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쇠고기 파동에 대한 그 이면을 잘 헤아려보면 이것이 단순히 쇠고기 파동이라고 하는 이것만을 가지고 국민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그 전부터 747이나 또는 청계천 이런 등등을 통해서 쪽 흘러온 일련의 과정이, 그리고 또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서 반대파를 숙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쪽 흘러나오고 또 내각이나 청와대진영을 짤 때 '고소영·강부자' 이런 등등이 흘러나오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내연하고 있다가 이것이 '쇠고기'라고 하는 분출구를 통해서 다 터져 나온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번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아까 창조한국당의 의견도 물으셨기 때문에 강 의장께서 그 문제 답변과 더불어 토론하시지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제규** : 임태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조한국당은 재협상 결과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보건권 지키자, 그리고 주권 침해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협상이 어떤 국가와 양 당사자가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또 다시 변경도 가능한 것이고 해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관고

시의 법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보험권, 생명권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일개 장관의 고시, 고시라는 것은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이와 직결되는, 그리고 또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것을 고시만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교정되어야 하는 행정행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 통합민주당의 최인기 정책의장께서 토론해 주시지요.
-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우선 검역주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 말씀드리고, 어제 발효된 고시는 정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고시를 15일에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칙으로 삽입된 내용은 당초 본문에는 30개월령 이상까지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민간자율 규제로 30개월령 미만은 수입하도록 부칙에 규정한 점이라든지, 또 검역증명이 없고 QSA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든지, 그리고 SRM의 범위를 당초에는 2개로 제한했다가 6개로 풀고 SRM 범위가 바뀌었다든지, 이것은 지난번 협상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변경이 됐으면 입법예고기간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우선 어제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또 이것은 고시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을 다시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방지하려면 이제 정부가 재협상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협상을 거둔 효과와 똑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지금 고시의 모범이 된 그 법을 고쳐서 검역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또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치를 국내법으로 하자, 국내법하는데 발효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고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협정을 양국이 합의한 것이고 법률보다는 하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키는데 입법투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엄호성 최고위원 대안이 있으면 한 말씀 더 해 보시지요.
-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저희는 일단 국회를 열어야 되는 데 대해서 강력히 국회등원을 촉구합니다. 국회가 열린다는 그 자체는 국민의 모든 의견을 국회라는 용

광로에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열려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 갖추어진 청와대 진영과 앞으로 새로 갖추어질 내각진영에서 보다 더 국민 각계각층과 접촉 면적을 늘려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진지한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만 이 난국이 해소될 수 있지, 그냥 대통령의 말 한마디, 집권 여당의 책임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상황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개원, 그리고 정부 여당의 국민을 향한 진실한 설득 노력 2개가 병행될 때 이 정권 초기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까지 상호토론을 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류근찬 의장과 임태희 의장이 30분초씩 더 쓰셨습니다. 제가 말미에 짧게나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근찬 의장부터 30초 정도 보충설명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저희도 최인기 의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어제 고시효력을 정지시키는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협상 주장과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정부가 다시 재협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저희는 이미 정리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공표하는 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임태희 의장도 30분 정도 설명하시지요.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엄호성 의장님과 류근찬 의장님이 말씀하신 국회가 빨리 열려서 모든 문제를 토의하자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공감이고 왜 진작 이 토론회 전에 국회가 열리지 못했나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 당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린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됩니다만 이것은 미국 국민, 그리고 미국에 계신 한국국민들이 다 잡고 계신 이 쇠고기와 똑같은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고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양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7개 주요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에 관한 토론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살인적인 고유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고유가를 비롯한 물가안정대책을 일곱 분의 정책위의장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계는 물론이고 지금 서민경제위기까지 폭넓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 가격 인상이라든가 또는 공공요금 인상 압력에 따른 우리 서민생활의 안정이 가장 큰 민생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당들은 어떤 입장을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1분 30초 동안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진보신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상 부의장!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운영상** : 국민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생활이 나오게 된 상황을 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은 이미 작년부 터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물가상승의 현실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가상승을 더 부추기는 정책을 취했던 것입니다.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해서 지나치게 대기업과 부유층들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성장률 중심의 자신의 공약인 747 공약에 너무 집착을 해서 숫자 늘리기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국민적인 파탄을 만들어 오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잠시 물가안정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국민적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고유가 시대에 물가안정을 기조로 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지요. 고성장, 그다음에 고환율정책을 한 것입니다. 역주행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수치, 특히 70년대식의 올드웨이, 옛날 구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특정세력 또는 특정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다수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과거 회기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지금 서민들께서 특히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생활비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당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역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두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얼마 전에 정부와 함께 고유가에 대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정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법규가 개정되어야 하고 또 정부에서 그것이 집행되어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루가 시급한데 이 문제가 제대로 국회에서 토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또한 쇠고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회를 빨리 열어서 지금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손 볼 것이 있으면 손보고 하루라도 급하게 시행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환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은 조작하지 않으면 국제수지가 적자가 나는 가운데서는 환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물가를 위해서 환율을 운영해라 하는 것은 환율을 조작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공개토론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이야기 들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먼저 지금 심각한 물가문제, 또 서민생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서 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이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무디스가 이미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를 올렸던 주 책임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뭔가 교체를 할 듯 하더니 다시 교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민생활 어렵게 한 분에 대해서 먼저 교체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정책의 변화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물가 문제 피해가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에게 의료분야 건강보험보장성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낮추고 이런 의료교육 분야에서 집중지원과 같은 긴급처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납품가를 인상하거나 또는 원자재가와 납품가를 연동하게 하는 적극적인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이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서민생활 안정시키겠다는 말씀은 하시겠지만 정작 돈 나올 곳은 조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좀 먼저 나서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서 내수진작, 중소기업 납품가를 좀 더 많이 주시고 고용확대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국회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리고 경찰 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국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 물가불안에 대한 서민민생안정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의장!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임태희 의장께서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조작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과는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수출드라이버, 그러니까 수출을 주도하는 몇몇 대기업을 위해서 이 고환율정책을 써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나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 고유가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원자재값이나 원유가의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도 있지만 고환율 정책으로 비롯된 그러한 물가상승도 상당히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민주노동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조차도 고환율 정책 중심을 펴고 있는 이러한 강만수 장관이나 최중경 차관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현재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각이 있을 텐데 경제팀을 쇄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할 때 지지하면서 경제 하나만 확실히 살리겠다는 공약을 믿고 선출한 것으로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지금 넉 달됐습니다마는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저성장·저소비·저고용 결과적으로 불경기 속에서의 물가상승,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위험이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 7%가 4%대로 떨어지고 물가가 3~4%를 넘어서서 5%를 넘는다면 물가 오르고 성장률 떨어지면 이 엄청난 서민의 생활에 고통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기업을 수출을 통해서 7%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매달렸기 때문에 결국은 외환당국의 묵인·방조 내지는 간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고환율정책이 유지되어 온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으려면 이런 데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시스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들의 어려움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런 데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정책적으로 충고를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최고위원 입장을 듣겠습니다.

-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임호성** : 이명박 정권의 집권초기에 물가상승 기조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조짐을 보여 왔습니다. 2007년 4/4분기부터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무려 3%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조짐을 보여 왔고, 총수요 압력도 역시 3/4분기·4/4분기의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바람에 결국 2008년도 상반기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환율 역시 4/4분기부터 원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권 초기에 고환율정책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정책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고, 단기적으로는 추경편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그 인하된 돈이 결국 다시 산업현장에 재투자되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또한 유럽의 경우에 고유가대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20% 줄이게 하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작년에 아예 에너지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법도 제정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로서도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서민생활안정대책 듣습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유가문제, 물가문제 정말 서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물가와 관련해서 이 물가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의 실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금 물가 상승이 국제유가, 그다음에 원자재가격 같은 외부적·대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최근에 나온 통계입니다만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석 달 동안 수입물가가 22.7%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 가운데 10.1% 포인트가 환율상승에 의한 것이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 영향을 제거한 수입물가가 12.6%인데 고환율 때문에 10.1% 정도의 물가가 더해졌다는 설명이지요. 결국 이것은 원래 수입물가의 80%가 넘는 엄청난 물가입니다. 엄청난 크기지요. 따라서 이것은 고환율 정책이 가져온 실패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물가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임태희 의장께서 환율조작을 앓고는 환율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성장정책을 차후로 미루고 물가를 잡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잘 됐는데 빨리 환율시장이 개입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환율로 자연스럽게 상승한 부분을 재정으로 흡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팀이 쇄신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불가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정책토론회 주요 정당의 정책의장들과 함께 특히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민생안정, 생활물가안정에 관한 대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상호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1분씩 6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고유가 등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사전추첨에 의해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저는 보충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중장기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 유가대책에서 빨리 이 문제, 국회 열어서 해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다 토론이 필요하고 정말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며 다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환율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지가 적자가 나면 원 환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월, 2월에 보면 평균 약 28억불, 24억불 큰 폭의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해도 대체로 우리나라의 유가가 한 80불에서 100불 수준에서 대개 유지되지 않았느냐 하다가 정부도 대개 그런 각도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이후에 이미 120불, 130불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상한 상황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이번에 추경편성을 포함한 유가대책을 긴급히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우선 서민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을 타결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대체에너지라든가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토론 어느 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운영상 부의장!

○ **진보신당 정책위부위원장 윤영상** : 고환율정책의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증적인 증거들도 있는데 ‘인위적인 환율조작’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임태희 의장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상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팀이 환율시장에 일정하게 개입을 해 왔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환율정책이

잘못됐더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에서 실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교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과거 IMF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라 보니까 시장에서 아주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류근찬 의장 말씀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아까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임태희 의장님, 계속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의 수입원자재와 원유관련 세금을 인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실제로 우리 유류세가 여전히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는 정부가 배럴당 150달러가 되면 아주 집중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170달러 정도 되면 유류세에 손을 대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느린 정책 같이 보입니다. 지금 '81년도 2차 오일쇼크 때 배럴당 유가를 지금 화폐가치로 비교하면 한 67불 정도로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130불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머지않아 3차 오일쇼크가 올 가능성이 많은 상황인데, 150달러가 되어야 에너지절약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170달러가 되면 유류세를 손을 댄다는 것은 한가로운 정책 같다, 따라서 수입원자재, 원유관련 세금 이런 것들을 손을 대서 원유가, 원자재가격이 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에 물가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것이 스스로 흡수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공공요금 일부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요금은 절대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창조한국당 강재규 의장 받으시지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원유가인상이라든지 원자재가 인상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간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차가 8.41배로

벌어졌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추경을 가지고 4조 9,000억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 SOC의 건설에 1조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업도 지금 고환율정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역시 원유가나 원자재가 인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납품하려 해도 납품단가 인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이것을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특히 창조한국당에서는 중소기업, 실제 우리 종업원의 8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에서도 이것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농민, 도시생활인 저는 대학에 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제가 대학이 김해에 있는데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이 교통비가 기름값이 올라서 지금은 버스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서민 대중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바로 지금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를 집권 여당에 바랍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서민생활안정대책 정책토론회, MBC와 KBS, KBS와 MBC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에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의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비교적 중산층 이상은 고통을 견디어 낼만합니다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비·교통비·광열비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지금 유류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간 유류세로 받아들이는 국가총예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구조를 바꿔주는, 예를 들면 휘발유와 경유 당초에 정부가 100:85로 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유수요가 더 많아서 휘발유값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유류세 구조를 다시 바꿔서 100:85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생활대책으로 10조 5,000억원을 들여서 1,400만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고 또 보조를 주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0조 5,000억원은 국가 예산의 5% 정도 되는 대단히 많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3,600만

원 소득자에게 월 5,000원씩 열두 달 나눠서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Populism)이다,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조 5,000억 원이면 지금 전기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4개를 건설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이 없는 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인 에너지 확보에 대한 자주를 올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압박, 지금 서민생활안정대책 듣습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장!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당선 되셨습니다. 경제가 정말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요즘 촛불문화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더니 한국경제가 아니라 미국경제를 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초점은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전 세계에서 떨어졌습니다. 미국경제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우리나라에서만 오직 달러화 가치가 원화가치보다 높았습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대기업의 수출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원자재 수입가가 당연히 올랐지요. 그리고 국제곡물가격이 오르면서 밀가루값도 올랐고 결국 서민생활 부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장면값 500원 줄이겠다고 또 그렇게 서민들만 허리띠를 조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팀, 전면적인 교체가 당장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추경예산 10조원 가지고 우리 서민생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 자체가 아직 4조 5,000억원만 이미 있는 돈이고 나머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입니다. 나중에 세수를 예산해서 주겠다고 먼저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그나마 국민들에게 월 2만원씩 주시겠다 그것 말고도 많은 예산들이 도로를 닦는다,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야기했던 건설경기부양책입니다. 그렇다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교체 없이는 앞으로 추경예산편성 그리고 실행과정에서도 계속 경기부양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말 '747'을 포기하신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의료비·교육비·고용안정비 여기에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용안정비가 실제로 굉장히 낮습니다. OECD 평균 24개국 중에 공공근로서비스지출액이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국민의 고용안정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한국이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실업급여지원비,

또 재취업교육비, 고용관련 지출 늘려야 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박연대 엄호성 최고위원 말씀하시지요.
-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 조짐, 그리고 총 수요압력이 계속 늘어나서 2008년 상반기의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환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조로 첫 번째의 경제정책을 가져갔던 현 경제팀에 대해서는 옹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급한 서민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환율정책은 다시 재고가 되어야 합니다. 고환율정책은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면 환율조작을 통한 저환율로 갈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대로 고환율정책 자체만 포기해 버리면 그대로 환율은 현 달러화 약세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서민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자체는 그 서민들이 많이 접하는 물가의 가격을 다운시키는 데 초점이 놓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개선은 시급히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이정희 의장님께서서는 추경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용내역이 SOC 같은데 투자를 해서 무슨 내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자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단기적인 정부의 재정수단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 수단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감시·감독을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추경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국가관리정책, 조세나 환율 또 그 밖의 추경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입장 좀 말씀해보시지요.
-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윤영상** : 정부에서 10조 5,000억원에 이르는 물가인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상태로 놓고 보니까 1년에 한 6만원에서 24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 데도 실제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물가가 더 폭등하게 됐을 때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산시키면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집중해서 정말로 힘든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하고 중소기업들이나 꼭 필

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서민생활 프렌들리를 외치고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2003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7배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유가급등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어야 될 정유사와 정부가 정유사의 폭리를 방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대략 보니까 재작년, 작년 하면서 2조원, 3조원 이런 식으로 폭리를 획득했는데 2003년도 취하니까 10조원이 넘는 폭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영국에서 '97년도에 도입했던 'Windfall Tax'라고 하는 횡재세, 최근에 유가대책과 관련해서 이태리와 프랑스에서 '로빈후드세'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필요한 재원도 얻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각 당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강제규 의장!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제규** : 저는 단기적·장기적 대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유류세, 원유가가 높아지니까 기름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제조해서 파는 업자가 있고, 또 주유소, 직접 우리가 운전자들에게 보급하는 주유소가 있을 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여하는 정부가 있을 테고,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절에는 각 주체가 조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름값이 올라가면 직접 현장에서 기름을 사는 소비자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주체가 분담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카드수수료 문제, 지금 특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율이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5%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2%로 낮춰준다든지, 또 서민대중들이 어려운 시절에 이용하는 현금이라든지 돈을 빌리는 문제, 이것도 법정이율이 4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10여년 전에는 이것이 25%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서민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연체료, 연체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29%에 달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절에는 확 낮춰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석유라는 것은 유한자원입니다. 언젠가는 바

닥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20~30년 전부터 선진제국에서는 준비를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을 하거나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현 정부에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 류근찬 의장 서민생활안정대책 소개해 주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방송 들어오기 전에 TV뉴스를 보니까 지금 국제원유 시장에서 또 오늘 원유가 오른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하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 뒀서는 물가불안이 계속 가중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내수에도 영향을 주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많아지고 또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고유가 대책을 서둘러서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여태껏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했던 것이 고유가 대책의 핵심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수송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을 줄기 차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1년에 유류세가 걸히는 규모가 한 25조원 정도, 금년에 26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당한 세수 때문에 만약 일률적으로 세를 깎아주면 재정운용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이 유류세를 운용해야만 한다, 원래 탄력세율이 소비도 줄이고 가격 조절기능도 가지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세금 비중이 휘발유가 46%, 경유가 35.7% 정도 되는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OECD 회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유류세, 징수세 편에 의해서 정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해서 이 유류세를 인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류 유통비용을 축소한다든지, 에너지절약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장 민노당의 대책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유류세 인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류세가 지금 인하되어서 실제 유가가 내려가려면 상당히 정책효과가 조금 문제시될 수는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유류세가 지금 교육세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

면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을 줄이려면 무엇인가 다른 쪽에서 이 부분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지금 국제유가 오르는 상황에서 바로 일주일 만에 그 효과가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로 생계수단으로 쓰시는 분들의 세금을 인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세심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줄어드는 세금, 교육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이 유류세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증부세나 법인세 감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1호 법안 대신 것이 증부세 감면 이야기였고, 또 법인세 내리겠다는 것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증부세나 법인세 내리는 것은 일반 서민이라든가 또 자영업자라든가 또 영세한 법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 문제는 전국에 35만개의 법인이 있는데 적자를 봐서 법인세를 안 내는 법인이 그 중에 1/3 가량이나 됩니다. 나머지 2/3가 내는데 그 중에서도 법인세 60%를 순소득의 500억원을 초과하는 324개 기업만 내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를 낮출 경우에 가장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장사 잘 되는 기업들, 세금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도 순이익이 13.9% 정도 된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낮추는 것, 또 증부세 낮추는 쪽으로 관심 가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서민생활에 쓸 수 있는 세금,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 균형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 토론이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들어와서 좀 더 치밀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민주당의 의견을 최인기 의장께서 들려주시지요.
-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유류세 인하 문제는 지난번에 탄력세율 10%를 내렸지요. 그런데 내린만큼 소비자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비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서민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류세 총액을 국가가 동결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배분하고 정부가 지출을 보전해 주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추경문제입니다. 사실은 한나라당에서 주장을 해서 지난 정부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짤 때에는 일단 세수가 더 건히면 국가채무상환하고, 그리고 전쟁이 났다든지 재해가 난 경우에 국한을 하면서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있을 때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제출하려면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은 경기침체가 왔는지, 대량실업이 있는지 그리고 7% 성장률에 달성 못 하니까 이제 4%, 몇

%로 조정하겠다는지 국민에게 입장천명을 하고 사과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조원 규모의 추경내용을 보면 지금 실제 서민생활, 또 농어민에 대한 일부 보전, 비료값, 이런 것 해서 1,500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손해분의 50%를 보전하는, 1조 2,000억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현재 물가와 에너지에 대한 근본대책에 집중을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SOC라든지 또 한전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그보다도 오히려 해외유전개발, 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늘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임 의장께서 한번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경제문제를 풀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칙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정상적인 원칙은 덜 쓰고 또 절약하는 것이 사실은 상책입니다. 그래서 이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세계가 다 겪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가 이것을 초기에 정책 대응수단으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말씀 그대로 고통분담을 위한 추경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류가로 인해서 생활물가가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혹은 세금환급을 통해서 대책을 할 테니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허리띠 졸라매시고 같이 이겨 나가십시오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도 계속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원칙상 국제수지적자 나면 환율은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제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가를 위해서 만약에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 해외에서 쓰는 돈 더 많이 늘어나고 무역수지가 더 나빠져서 지금 현재 환율이 시장에서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초기에 아마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평가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한 것 아니냐 하는 평가는 최근 들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환율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은 경제원칙으로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는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세금환급이 주 내용이고, SOC 건설의 경우에 도로나 공공요금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민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기값 올릴 수 없습니

다, 가스값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위한 SOC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주요정당의 정책대안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친박연대 의견을 듣고 다음 창조한국당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꼭 하나 강조할 것은 유류세 인하는 여전히 고유가 시대를 타개하는 좋은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결국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고, 또 경제정책은 경제관료와 여당이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경제정책시스템을 보면 현재는 모든 권한이 전부 청와대에 다 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서 자원외교를 하라고 임무를 주는 그런 정말 걱정스러운 사태까지 생겨났는데, 저는 이번 이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현안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수석회의를 하면서 결정되는 것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경제부총리가 경제문제에 관한 사령탑으로서 확실한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조정기능을 경제부총리가 장악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경제위기들이 결국은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통한 경제조정기능강화 시스템 확립이 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지금 추경에서부터 유류세, 또 환율의 문제, 경제팀 인사의 문제까지 각 당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 의장!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이명박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건설공화국, 토목 공화국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경부운하건설인데, 이미 패러다임은 '녹색경제' 이렇게 변해 갔습니다. 그래서 '생태주의'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발상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사한 이야기인데, 산업구조가 앞으로 석유 의존에서 대체에너지 의존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만 된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배럴당 140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200불이 될지, 300불이 될지, 앞

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교토의정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당장 2013년부터 여기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를 쓰는 Co₂ 감소를 매년 해 나가야 되는 강제를 받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환경부 강의를 하면서 비디오테이프를 한번 같이 감상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 '97년·'98년도 IMF 시절을 겪었습니다마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부분이 10%, 20%, 30% 이렇게 되면 IMF 몇 배의 충격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서민 대중들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타든지 택스타든지 지하철, 이 시스템을 우리 서민들이 아주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배럴당 10불, 20불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수단으로 채택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시스템, 교통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정당정책토론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안정대책 주요정당의 대책을 듣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의 입장을 들겠습니다.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운영상** : 방금 창조한국당에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 중의 하나가 성과가 나지 않는 단기대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대책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금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과다산업구조를 에너지저감산업으로 교체해 나가고, 다음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시스템의 변화가 이미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관련된 비용을 책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실제 지금 현재의 고유가 상황은 투기적인 요소나 지정학적인 요소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표출된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석유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중에 피크오일이라고 하는, 석유정점을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4~5년 정도 지나게 되면 또 다시 고유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출렁거리는 유가의 현실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미래가 대단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부대

운하가 100년 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육성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경제의 100년 대계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번에 10조원 중에서 대략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2조원 정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불과 3,5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늉만 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열이나 태양열이나 풍력만이 아니라 수소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좀 더 폭넓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장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한나라당에서 정부가 같이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정책의 주요 3가지가 있습니다. 감세, 규제완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이름의 민영화입니다. 감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종부세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세를 하게 되면 실제 법인세 감세만 하더라도 한 8조원에서 9조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럴 예정인데, 지금 10조원을 추경예산 편성해서 우리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굳이 이 돈을 추경예산편성까지 하면서 그것에 버금가는 세금 줄일 필요가 그렇게 시급한가, 서민생활에 오히려 쓰고 교육을 안정화시키고 의료부분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더 많은 세금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세금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분들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분들에게 드릴 돈이 생깁니다. 정부가 이 역할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규제완화 이야기를 보면서 광우병 쇠고기만 전수조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규제를 전수검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 다 없애겠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이고도 도발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입니다. 중소기업의 90%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중소기업으로써는 늘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데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면 무엇인가 중소기업과 거래하다가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다시 그냥 중소기업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이런 하도급받을 선까지 잘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 절대 폐지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허술하지만 더 이상 폐지되면 안 됩니다. 민영화 선진화라는 이름의 것은 공공서비스 굉장히 약화시킬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더군다나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미 FTA는 민영화 시작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 FTA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서민과 중소기업 살려야 됩니다. 대기업 핫라인도 있으시다는데 적극

적으로 무엇인가 내놓으라고 하셔야지요. 고용도 늘리고 정유사 이윤도 줄이고 가셔야 됩니다. 장기발전 전환도 필요합니다. 오늘 원자로 냉각탑 폭발한다고 합니다. 남북간의 경험 진전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로입니다. 더군다나 국제원자재값 오르는 것, 북한 원자재 교류하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선진당 의견 들겠습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끝으로 물가와 관련해서 저희 정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이른바 MB물가라고 해서 52개 품목을 특별히 관리하는 서민생활 관련 품목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통계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9% 올랐는데 이른바 MB물가는 6.7%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품목별 52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느냐 하는 기여율 조사를 보면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오름세가 전체적으로 기름값이라든지 원자재값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52개 품목분석을 보면 전혀 기름값이나 원자재값과 상관없는 납입금 그다음에 학원비가 거의 7%~8%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납입금이 7% 가까이 올랐고 학원비가 6% 넘게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원유가나 원자재값 상승을 틈타서 일부 품목이나 서비스 요금들이 덩달아서 오르는 물가인상심리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물가인상심리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나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생활물가안정대책 특히 서민생활을 위한 각 당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민주당의 최 의장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결국은 고유가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국가재원 배분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작해 달라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제가 일본의 세계적인 타이어회사인 브릿지스톤의 일본공장의 예를 보니까 폐타이어를 연소시켜서 12만kg를 매일 생산해서 전기 1/3의 동력을 충족하고, 또 타이어 열 가하는 것에 동시에 쓰는,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연구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정부는 굉장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현재도 40%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빨리빨리, 국가에너지위원회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

워주시고, 또 석유개발공사에서 이라크 쿠르드에 가서 19만억 배럴을 개발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가 2년분 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장기적인 근본대책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비를 줄이고 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가면 보겠습니다마는 자전거타기 운동, 일본에는 주부들이 백화점을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런 국민운동도 병행해서, 물론 민간운동도 하겠지만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는 다시 올리겠다, 이런 지식경제부장관의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공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하반기에 절대 공공요금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 공공요금도 동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입장을 들겠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지금 이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너무나 서민들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서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책을 추진할 테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을 함께 분담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근본 대책 함께 논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저희 여당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원유를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대책,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문제, 또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3배나 에너지 비효율이 높은 이런 가운데에서는 에너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정책이 경제원리는 지켜가면서 이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큰 방향은 민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세계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FTA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세문제는 여러 가지 최근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여러 세원 확대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많이 걷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세수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세수환경의 변화 때문에 추진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조율·조정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엄호성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엄호성 최고위원 의견 들겠습니다.

○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저는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경제의 흐름이 매우 암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두 거대한 잠든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경제성장을 급속도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자원을 전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인도는 아시다시피 24억명에 해당하는 막대한 인구를 기초로 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의 자원이 전부 이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각 당의 책임 있는 정책 책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해외에 있는 자원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정과제를 하나 설정해서 매년 예산의 일정비율만큼을 반드시 해외자원개발 펀딩화하는 기금으로 쓰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진보신당!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윤영상** : 참 걱정스럽습니다. 환율문제나 규제완화 문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세금감면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현재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물가안정에 집중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임태희 의장님 말씀이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겉으로는 그런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효과를 만들어 내는 데는 실패할 대책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환율정책, 그것은 시장에만 맡겨놓을 것들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건설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고성장정책도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 석유유가가 올랐을 때 항공사들은 빨리빨리 올려주고 화물자동차들이라든지 택시노동자들한테는 대단히 한숨 쉬게 만들었던 것들은 빨리 중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고 있는 정당정책토론회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했던 쇠고기 협상문제, 서민생활안정문제에 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토론에 참여하시면서 미진

했던 이야기, 또는 보충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각 당의 의견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 조정에 의해서 민노당의 이정희 의장부터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들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서리 이정희** : 우리 경제원칙은 헌법에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의 민주화,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 이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경제정책의 기초입니다. 고용안정 그리고 서민생활을 살리는 것,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현재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이야기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힘든 사람 도와줘라, 국가가 그것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국가가 그것하지 않고 재벌만 살리고 그리고 수출기업만 살리고 이렇게 가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제안합니다. 작년에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 무려 2조원이나 국방예산 썼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말합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핵원자로가 오늘 폭발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 평화통일정당으로, 서민경제정당으로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국회 안에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호통을 쳐서라도 따지고 막겠습니다. 국회 밖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건강권 지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입니다. 함께 가십시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 창조한국당 강재규 의장!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강재규** : 작년 연말 대선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죽지도 않은 경제, 너는 죽어서' 이렇게 말로 죽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최면에 걸어서 경제는 살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지만 그러면 경제라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00여일 만에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스트레스만 주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미국의 부시·축산업자만을 위한, 그리고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가 무척 걱정이 됩니다. 부시에게, 축산업자에게 잘 보여서 다음 미국 주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발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을 보시고 서민 Friendly, 국민 Friendly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한국당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최인기 의장 마무리 발언 들겠습니다.
-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 줄속협상으로 국민의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었던 한·

미 쇠고기 협상,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의 명예를 확고히 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위주, 또 소수의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미간에 서두르고 있는 FTA도 결국은 선 대책 후에 비준동의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농촌 현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쇠고기 파동으로 축산업자 다 죽어가고 있고 유류값·비료값·사료값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보전하고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엄호성 최고위원!

○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엄호성**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지 100일이 되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한 탓에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친박연대 역시 공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사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친박연대 소속 조선의원 여덟 분이 쇠고기 사태와 고유가 문제를 비롯한 당면 민생현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민생현장을 탐방하는 ‘민생파고들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친박연대는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지식·정보기반 사회입니다. 따라서 덩치가 큰 것이 이기는 사회가 아니라 덩치는 작아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기는 사회입니다. 저희 친박연대는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더욱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 류근찬 의장!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든지 또 수입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해서 우리가 먹을 때 보다 더 안전한 쇠고기, 안전한 고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주장이었

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측을 좌파, 또 찬성하는 측을 우파로 이분법으로 규정해서 자유선진당으로 하여금 왜 좌파, 좌쪽에 서 있느냐고 보수언론이나 정부가 몰아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몇 분들이 전화를 해서 항의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좌우이념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은 꾸준히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운영상 부의장!**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운영상 :** 저희 진보신당에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보신당의 존재가치를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못미 현상'으로 국민들을 귀찮게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신당은 그 관심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촛불집회 한 가운데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회찬·심상정 대표는 거리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진중권·정태인 선생 등은 진보신당 쉼터TV를 통해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촛불지킴이 변호인단은 이미 많은 거리의 인권지킴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을 계몽하려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대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생태와 평화와 연대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임태희 의장 이야기 들겠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다 토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정당들이 국회를 문 닫아 놓고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빨리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하나하나 토의를 통해서 정리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말을 앞세우기보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지적해 주신 쇠고기 문제에 관한 후속조치, 그리고 고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기 대책들 저희들이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쇠고기로 인해서 국정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국

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쇠고기 협상문제, 그리고 물가안정에 대한 각 당, 특히 7개 주요 정당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모쪼록 좀 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조정과 통합의 정치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엄길청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각 정당의 정책을 들어보시고 비교·평가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KBS와 MBC, MBC와 KBS가 전국에 생중계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오신 분 차례로 소개해 드립니다.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입니다.
-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엄호성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입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입니다.
-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입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임영호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입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안녕하십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진보신당 노중기 정책위의장입니다.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진보신당의 노중기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입니다.
-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오늘 토론자의 좌석배치와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실물경제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전에 학교와 또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사회자가 여러분께 먼저 공통질문을 드리게 되면 1분씩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속에 생산과 소비가 급속히 위축이 되면서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 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고, 또 각종 경기침체지표가 되는 부도업체수가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실물 전반의 상처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 감세라든가 또는 규제완화, 또 신산업육성 등의 논의가 있습니다라는 각 당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분간 시간을 드리고, 순서에 따라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눈물과 한숨에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예견되었지만 정부 여당의 뒷북대응과 정책 엇박자로 오늘의 위기를 자초하였고, 정책결정권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유동성의 추가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정밀한 실현 프로그램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엄중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분리되어 있는 금융정책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2008년만 보더라도 성장률이 분기마다 거의 1%씩 떨어지면서 실물경제가 아주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10월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려울 때 주식 사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고 장담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당장 급한 불만 끄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를 새로 짜야 됩니다. 이제 한국경제의 틀을 새로 짜야 되고 이것은 우리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경제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 어려우시지요? 정권만 바뀌면 경제 하나는 살릴 줄 알았는데 IMF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들 합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먼저 내각부터 장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운영 철학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내년의 예산은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답변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국민 여러분, 갑자기 경제 한파가 불어 닥쳤습니다. 정말로 IMF를 연상케 합니다. 직장인들은 실직을 두려워하고 자영업자들은 문 닫을까 걱정입니다. 중소기업은 돈이 묶여서 야단입니다. 그동안에 경제팀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은 현 경제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획득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초당적인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비상경제내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제되는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건전한 것은 육성하되, 부실한 것은 가려내서 취약부문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목표도 성장과 수출보다는 내수와 고용안정 쪽으로 가야 합니다. 또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는 불요불급한 것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분야의 서비스를 강화시켜 그것이 바로 소비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주가지수가 1,063을 치고 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소비부진, 이 소비부진은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합니다.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은 고용불안, 교육불안, 또 금융불안, 노후불안에 기인합니다. 금융불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식이 급등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식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수록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소통하고 말을 아껴야 합니다. 경

기회복의 시작은 정부의 신뢰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해외에서 신뢰할 때 경기회복이 경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진보신당 노중기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위기의 쓰나미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구조조정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는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양치기 정부가 될 모양입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이런 한가한 경제대안, 대책을 넘어서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단의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에는 특단의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 강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서민중심, 영세 자영업자 중심, 비정규노동자 중심의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구조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최경환 수석조정위원장 답변하시지요.
- **한나라당 수석조정위원장 최경환** : 국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쓰나미로 해서 지금 초비상사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이 내년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다가 이 불안이 실물 쪽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권여당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제살리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이번 정기국회 회기 기간 중에 이를 통과시켜서 빨리 집행에 나서야 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서민과 중소기업 살리기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하루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당정책토론회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각 당의 기초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상호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총량제를 도입해서 모두 6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간 타이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 한번 발언하실 때 2분 내외로 발언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하실 분은 저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남은 시간과 또 발언의 기회를 감안해서 기회

를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상호토론, 자유토론의 순서는 추
침에 의해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한나라당 정조위원장께서 내년 예산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재벌과 또는 특권층, 땅 부자를 위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신 분들,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산층에게 갈 것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안은 저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세예산입니다. 그 감세, 대부분이 중부세 줄이는 것입니다. 일부 비싼 아파트 가지신 분들한테만 이익이 갑니다. 그리고 6,000억원은 이미 환급해 주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시멘트예산입니다. SOC 건설 사업 예산이 수정예산안 10조원 늘은 데서 절반 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시멘트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직 토지보상도 못 되어서 집행률이 0%인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 2배로 투여가 됐습니다. 143억원에서 24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울산·포항 복선전철, 2009년 예산에 100억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600억으로 수정예산안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민원과 문화재 협의와 노선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가는,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한테 가야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가야 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경제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천재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모두 홍수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천재보다는 인재의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씀도 들어보면 지난 2개월간 내년도의 경제성장예측치가 5%에서 그다음에 한 2주 있다가는 4%로,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2%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팀이 이와 같이 예측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선제조치를 하겠다,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선제조치를 합니까? 이러한 것이 저희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외환

보유고가 200달러가 줄어들고, 또 안정펀드 조성 대책을 발표하면 채권시장이 요동을 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금융위기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믿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인적쇄신을 통한 신뢰회복이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도 어렵다는 것이 창조한국당의 입장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민주당이 발언하시겠습니까?

○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내년의 나라살림이 어려우니까 빚을 많이 내서 나라살림을 하는데 한나라당 정부는 나라 빚이 23조원이나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부자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약 6조원 정도 깎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증여세·상속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한 10억원쯤 있어야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상속세·증여세를 내신 분은 돌아가신 분의 0.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좀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해서 나라경제를 살린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깎아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면 물건값이 약 2.7%가 내려가고 4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연간 27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러한 정책, 즉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가가치세를 내려주는 정책이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부부합산 25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EU 27개국이 부가가치세를 1% 깎아주겠다는 결정을 했고, 영국도 17.5%에 달하던 부가세를 2.5% 깎아서 15% 내려주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제안했던 정책을 미국 오바마 정부나 EU나 또는 일본 같은 데가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유독 그렇지 않는 정부가 곧 물러갈 부시 정부와 이명박 정부밖에 없는데 이 점에 관해서 귀를 열고 올바른 정책을 채택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세 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께서 내년도 예산이 시멘트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경제가 아시아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SOC 특히 건설 쪽은 굉장히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번 SOC 예산은 지금 이미 착공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완공을 못한 그런 완공을 위주

로 투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투입되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내리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정기국회가 며칠 남았습니까? 또 이용경 창조한국당에서 말씀하신 경제팀 교체 부분은 지금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가 끝나면 아마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부가가치세 깎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영국 이번에 깎는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가가치세 깎으면 물건값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만원짜리 물건이 부가가치세가 1,000원 아니겠습니까? 300원 깎는다고 그것이 9,700원이 됩니까? 그것은 중간에 다 흡수가 됩니다. 지난번에 유류세 1조 3,000억원 깎았지만 그 효과 2주 밖에 안 갔습니다. 그것은 다 중간 유통과정이나 제조업자한테 흡수되기 때문에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3% 깎으면 무역항세 재정 감소요인이 14조원이 생깁니다. 지금 한나라당 정부에서 계속해서 감세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에 총 11조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효과도 없는 감세를 한꺼번에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지금 한나라당 정조위원장께서 SOC 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추가 예산에서 SOC 부분에 집중적으로 약 6억원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마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고용유발효과 이전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설정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다? 2003년·2004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서 그것은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박정희 시대 이래 토건정부, 건설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것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세에 관해서 이것이 그냥 부자들, 또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이익이 되는 정책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세는 재정수요가 많은 것에 비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화폐를 찍어내면 인플레이가 생길 것이고 또

IMF 때 50%, 25% 금리를 경험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진보신당에서 분석한 대로 지방재정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담은 서민·노동자·영세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계층들에 대해서 더 책임을 요구하는 뜻에서 증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서민들의 경우에는 다름니다마는 부유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같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임영호** :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 서비스에 대한 확충이 대단히 필요한데, 민주당과 한나라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감세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가세를 깎아야 된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20조원 이상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사태로 봐서는 적어도 내년에 다시 한번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재정지출을 요한다고 봅니다. 이미 1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또 저소득층 부분만 일부 손질하고 이번에는 재정지출 쪽으로 더 확대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우선 민주당 박병수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발 서프라이머 모기지 부실사태가 사실 2007년 1월부터 홍콩 상하이뱅크가 위험을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07년 4월에 미국의 두 번째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츄리파이낸셜이 연체율이 13.5%로 급증하면서 대출부실로 영업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07년 8월에는 미국의 10위권인 아메리카 홈 모기지 인베스먼트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이 파급되었는데 유동성 위기가 예측되는 이 시기에 과연 민주당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라당의 최경환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박연대도 이제 6개월 간의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해서 이제는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따져 나가겠습니다. 지난 26일자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친박연대가 7.2%의 지지로 정당지지율 3위로 올라섰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금년 정권이 들어선 이후입니다. 이미 서프라이머 모기지 사태가 현실화되었고, 국내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은행들은 신규 해외차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채무연장이 거절되고, 또 롤오버(Roll over)가 되더라도 기

간이 단기화되고 차입금리가 상승하고 따라서 신용 디폴트와 프리미엄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과연 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오로지 고환율정책에만 매달려서 결국 수출도 줄고, 물가와 환율만 높임으로써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지난 9월에 정부에서 외평기금채 10억원 달러를 뉴욕시장에 팔려고 했는데 이미 이 당시에는 미국이 신용경색,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이미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뉴욕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해외경제동향 파악이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것 아닌가, 차제에 해외 경제 상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서 해외공간 근무자들의 경제교육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친박연대로부터 민주당이 질문을 받으셨는데, 박병석 의장, 답변하시지요.
-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지난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를 2,600억원을 쌓아놓았지요. 그리고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 해서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경환 한나라당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가가치세가 10%가 된 것은 꼭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시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 세금을 자기 매출의 한 20~30% 이상 내지 않던 시절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카드 쓰고 현금영수증 쓰면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그 10%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3% 내리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영국이 2.5%를 내리고 EU 27개국이 일제히 1%를 내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영업자들 450만 명이 1년에 270만원의 세금경감을 받습니다. 음식점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전국의 음식점이 60만개입니다. 3배를 내는 음식점이 40만개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3% 포인트, 30% 깎아주면 한 명씩만이라도 60만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연간 30만명씩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지난달에 97,000개밖에 만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바로 그것이 소비와 연결이 되고 경기활성에 기여가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발언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임영호** : 지금처럼 국민의 단합을 요구할 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수도권과 지방, 아주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0월 30일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하면 연간 16조원이 생산증가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전부 지방에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세부담을 20% 생각한다면 전액 지방으로 배분한다고 해도 3조 2,00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증가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이 무려 12조원, 환경오염, 주거비 이런 것을 따져보면 결국 밑지는 장사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은 거의 황폐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 전에 서산에 있는 산업단지 76개 업체를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전에는 적극적으로 입주한 기업들이 10개 업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에는 거의 검토하는 사항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때가 바로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을 내서 경기활성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빨리 국민의 단합을 위해서도 이것을 정부에서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조정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수석조정위원장 최경환** : 엄호성 친박연대 의장님께서 금년 상반기에 금융위기에 대처해서 어떤 대책을 취했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 금융위기가 이 정도로 심대하리라고는 아마 이 지구상에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그전부터 경고는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강도가 과연 이 정도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진행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나름대로 대책은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우선 10조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이나 감세정책을 상반기에 추진했고, 그리고 부동산 BF 부실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부가세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부가세율 10%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국 말씀하시는데 영국은 지금 부가세율이 17.5%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15%로 내리겠다는 것이고, 유럽연합은 영국의 부가세 인하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이미 공식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 부가세 말씀하셨는데 이미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입공제해서 거의 부가세가 부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국회 세법 심의과정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것들은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합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부가세 30%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 고소득층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간다, 왜냐하면 이미 저소득층

이 주로 쓰는 생필품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면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별적으로 하면 이것은 재정 세수감소에 비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정책이었다면 불과 야당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당 때 하지 왜 지금 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다른 감세보다도 아주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을 국민 여러분이 함께 듣고 계십니다. 논쟁은 주로 감세와 규제완화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이 논쟁의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먼저 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바로 며칠 후에 우리 국회가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그때 도로공사하는데 1조원이 들어갔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또 1조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4조 5,000억 원이 남아있었다면 얼마나 귀하게 썼을까 싶습니다. 국가재정법에도 맞지 않는 정말 긴급한 필요가 없는 데도 쓰인 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책임 있는 교섭단체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할 수 있는지 진짜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는 감세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솔직해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지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쓰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감세해서 세금 줄여놓고 세입은 줄여놓고 나머지는 국가채무 얻어서 빚 얻어서 쓴다, 우리 서민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채무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내려가면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직접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하루 최저임금 하루 4,000원입니다. 그것도 못 받으시는 분이 전체의 12% 노동자입니다. 180만명에 가깝습니다. 이 분들께서는 국가가 먼저 드리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국가가 해야지요.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훨씬 늘려야 됩니다. 건설예산, 말씀하시지만 30%는 아마 땅 주인에게 갈 것입니다. 건설사업 그냥 합니까? 구름 위에 도로 짓지 못합니다. 결국 땅값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나온 일자리들은 내일 또 이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일자리들입니다. 소득창출 효과로 봐서도 교육과 복지에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업이 쓰는 것이 건설업보다 전체의 소득을 키운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와 있

습니다. 수정예산안 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것, 정치공세 아닙니다. 이대로 가시다가는 바로 내년에 2월에, 3월에 또 추경예산안 내놔야 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우리가 먼저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지는 정치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자는 말씀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C 쪽 건설에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러한 것이 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아마 청와대에 경제수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정부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소득창출 효과가 어디가 크냐, 거기에 보면 건설업은 1,950억원이고, 공공행정이나 국방, 사회보장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2,90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 교육 쪽의 투자가 건설 쪽의 투자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정희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취업계수도 건설이 8.7명, 이것에 비해서 서비스 업계에서는 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농축산업·음식숙박업, 이러한 쪽이 오히려 건설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큼니다. 이것의 예를 보면 일본이 건설 쪽에 집중을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건설 쪽에 집중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경험한 것을 좋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GDP 대비 5%~6%의 SOC 투자를 20년간 꾸준히 한 결과 일본정부는 빚더미에 올라갔고 세입의 30%를 국채발행해서 메워야 하는 처지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예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경제위기 예측하기를 아무도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미네르바’라는 논객이 있습니다. 경제분야의 예측을 해서 몇 번 아주 잘 맞추신 그러한 분이 있고, 네티즌 간에 인기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이 비관적인 예측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라는 것은 심리다, 그래서 비관적인 예측을 하면 경제에 해롭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 미네르바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 분이 절필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미네르바의 신원을 파악하기보다는 미네르바보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나, 미네르바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되면 국민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위기해결에 대한 초점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아까 아무도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동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모기지 대출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작년 하반기에 이미 연 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미국발 금융쓰나미가 한국에 직격탄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해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의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경제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시키자는 것입니다. 해 주시리라 믿고, 한나라당에게 전체적인 감세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애당초 내년 예산을 5% 성장률을 전제로 짰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성장률 4%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향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에 국내 전문 연구기관들은 3%로 보고 있고, 해외기관들은 이미 2% 내지는 1% 하반기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연구기관인 KDI에서도 내년도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2분기는 제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상황이 극도로 위축되어서 제대로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4% 전제로 한 수정안을 가지고 과연 내년도 세수결손을 어떻게 막아 감당할 것인지, 그야말로 3% 수정 예산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첫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버락오바마 대통령당선자가 새해 예산안을 Line By Line, Page By Page, 한줄한줄 꼼꼼히 보고 있다, 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앞장서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진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자진 삭감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제 논의가 재정지출 또 추경예산 쪽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발언 하시지요.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역시 감세문제가 현재 정부정책의 방향을 지적해 준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께서 아까 부가세 논의말씀을 하시면서 자칫하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강남이나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이번에 감세로 받는 혜택이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98% 국민들은 그 부동산 감세로 인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세가 아니라 저희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에 다가올 쓰나미 급 위기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아주 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미국의 상위 5%에 대한 대폭적인 증세를 하겠다, 그리고 그 증세자금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이 6.5달러 수준입니다마는 2011년까지 9.5달러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그것도 2%의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감세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서민들,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의 최저임금 인하 수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없이 내년 세수 수치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발언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앞서 엄호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성장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번에 수정예산 낸 것 4%로 예산을 해서 했지만 아마 2%, 아니면 그 이하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내년 경기가 예상보다 더욱 나빠지고 또 경기침체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재점검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특히 경과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이런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가 건설경기활성화입니다. 한 7번 이상 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가 지방에 16만채 내지는 25만채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주택공사와 주택보증보험을 통해서 분양가의 70%~80%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반값 정도나 그 이하로 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때 서민이 아파트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건설비와의 차액분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오늘의 경제위기 갈수록 신음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제1주제 '실물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감세, 또 규제완화, 정부의 재정지출, 예산집행 등에 관해서 각 당의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한 번씩 기회가 남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으로 보서는 제가 2분씩 시간을 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부터 말씀하시지요.
-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감세문제는 이렇습니다. 내년에 나라살림이 어려워서 나라 빚을 23조원이나 지고 국채발행을 18조원이나 하는데 꼭 부자들에게 6조원의 감세를 내년에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초점이고, 예산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 포인트가 더 낮아지면 들어오는 세금이 4조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중부세라든가 부자세금을 깎아주면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가야 될 예산 중에 4조원 정도가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30개인데 지방세금 거둬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단체가 57%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요. 내년 5월에 고려하겠다, 이것이 나라살림을 책임진 한나라당 정부의 문제인가, 사회간접자본 SOC는 이렇습니다. SOC 증액도 일단 필요하지요. 그런데 무려 작년 대비 26.7%를 늘렸는데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 2.5% 늘렸습니다. 11배를 늘렸습니다. 도대체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수입 100만원 이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1,000만원 주면 그것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옳은 정책입니까? 따라서 이번 세금은 그야말로 어려운 계층,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가진 사람이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써야 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제 자유토론 마지막 시간 첫 번째 주제인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임영호 부의장부터 말씀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수출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수 확대, 또 고용안정 여기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실물경제가 아주 가파르게 하향곡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한파가 정말로 피부에 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서 결국은 일자리 감소가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투자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취업자를 막는 악순환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재정지출은 서비스산업을 하나의 중요한 일자리 보고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 정부에서는 규제를 철폐하는데, 특히 수도권 규제철폐, 이것은 제가 볼 때 경기활성화와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에처럼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엉뚱한 데로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쪽으로 해서 경기활성화시킨다,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단합을 저해하는 상당한 국가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재정지출을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또 고용 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지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 이정희 의장께서 한번 나머지 발언해 주시지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실물경제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될지 적극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감세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물경제가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를 저희가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죽어간다고 하지요. 돈 줄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이 자신이 번 이윤을 중소기업에게 조금 더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납품가 오히려 내리라고 하는 판이었습시다. 유가는 오르는데 내리라고 했습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납품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동제를 실시해서 중소기업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경제의 전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12월 1일이면 개성공단이 문이 닫힐 판입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남북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길 중에 중소기업의 희망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남북경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의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84.3%의 기업들이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그동안에 남과 북의 물길을 끊었던 것을 태도를 바꾸시고 하루 빨리 남북경협에 나서고 그래서 정말 실리적으로 또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전망들을 살려 나가셔야 합니다. 금융선진화, 이미 폐퇴한 것이 드러났습시다. 미국식 금융모델로 쫓아가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책전환을 하셔야 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해임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노중기 의장 말씀하시지요.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지금 죽은 대운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다시 SOC 재정의 대폭적인 증가와 더불어서 4대강 유역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여름에 죽었던 대운하를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토를 토지투기의 열풍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재정지출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들과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에 의존하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 이것 한낱 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내년, 그다음 해는 경기가 무척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300만개를 만들겠습니까? 지금은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좋은 사회적 일자리를 서민들에게 만들어서 공급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이 일자리는 또 다른 한편에서 중소기업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지난 10여년간 벌어들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고용지원하는 정부 재정투자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 외에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원하청 관계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하청 관계를 개혁하는 산업정책의 개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최경환 위원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시간제약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엄호성 의장!
-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최근에 드러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고환율정책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자 외환개입 정책을 포기했고, 그래서 결국 수백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허공에 날렸습니다. 공연히 종부세 위헌 관련해서 국회에서 헌재와 접촉했다고 발언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결국 국회 청문회에 서는 그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엇그제 뉴욕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소위 '낮과 망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렸고,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 금리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장의

불신을 샀고 결국 한승수 총리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엇그제는 대통령께서도 주식을 사라는 발언을 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사실과 논평에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집권여당에서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때때로 엇박자를 내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 여당의 정책조율 시스템을 완벽히 함으로써 시장의 불신을 사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다음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장 토론하시지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정부의 경제위기 타개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아까 제가 듣기에 저소득층은 소비로 많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가용자원을 증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세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IMF 사태를 맞았을 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의 114%~140%로 소비지출을 늘린 반면 최상위층은 가처분소득의 60% 쓰던 것을 IMF 때에는 50%로 오히려 줄이고 여기에는 사치품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저축을 늘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상위층은 이렇게 소비를 줄이는 반면에 생계에 급급한 저소득층은 더 이상 줄일 소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소비로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고소득층은 지원을 해 봐야 즉각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즉각적으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실증적인 결과였습니다. 또 세금을 깎아주는데 법인세를 깎아준다,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중소기업들은 대개 법인세를 낼 그러한 이윤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인세를 깎아준다면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주로 깎아준다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진보신당의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다음 기회에 또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최경환 위원장!
- **한나라당 수석조정위원장 최경환** : 제가 6개 정당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마는 시간이 똑같이 배분되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서 답답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경제가 안 좋은데 이렇게 감세까지 해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재정적자를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야당에서 IMF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면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평상시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IMF 직후에 재정적자가 GDP 대비 무려 3.9%

였습니다. 올해 지금 걱정하시는 예산이 GDP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12월 8일 군말없이 예산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내년이 비상한 상황이면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서 집행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 중산·서민·근로자들이 아우성 아닙니까? 하루라도 돈이 내려가서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재정적자 타령, 감세타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것은 처리를 해 주셔야 맞다, 그리고 감세정책은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즐기치게 외쳐왔던 정책입니다. 갑자기 꺼낸 정책이 아닙니다. 그 정책 내걸고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세정책은 야당에서 일단 한번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선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그것을 걸고 집권한 핵심적인 그 부분을 도저히 동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비상한 시기이고, 또 세계 각국이 미국, 지금 GDP 50%를 경기부양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세나 규제완화, 또 재정확충이나 예산편성에 관한 각 당의 의견을 국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또 정치권에 두 번째 주제를 던지겠습니다. 실물경제의 우려가 기업의 자금난, 경영난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근로자들,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 고용불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통질문을 역시 1분씩 답변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고용불안과 실업자 증가문제는 우리 국민 생계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을 안정시켜야 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활기반도 안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에 관한 각 정당의 현실적이고 또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은 무엇인지 1분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부터 발언하시지요.

-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청년실업은 민족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내년에 정부 예산에다가 1조 5,000억원을 더 보태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자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약 5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문제에 관해서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정도를 20만명에게 지원하면 어려운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1조 2,000억원을 한 4년간에 걸쳐서 4조 8,000억원 정도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과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방향이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생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상자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사회적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3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원의장, 고용과 실업에 대한 기본 발언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원의장 임영호** : 내년에는 아무래도 물가상승 속에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급감하는데, 그래서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747 경제공약, 그래서 연 60만개 이상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사실상 어렵게 되지 않으나,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정 간에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동결하면서 해고를 자제하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을 강력하게 수립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기간만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책이든지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실업대책비 1조 5,000억원,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2배, 3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정책위원의장 발언하시지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원의장 이용경** : 그동안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금융위기가 이제는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또 감원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또 창의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의 바람을 막고 또 한데서 떠는 이웃과 체온을 함께 나누며 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함께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제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또는 키코(Kiko)라는 해괴한 파생상품에 몰려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중소기업을 살리고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부총리급을 각료로 임명해야 합니다. 삼절경제로 임시직을 양산하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와 평생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창조한국당의 사람 경제, 진짜 경제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실업대책·고용안정 대책에 관한 각 정

당의 기본 기조발언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의 이야기 듣습니다. 노중기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경제위기의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이 경제위기의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시청역 지하도에 노숙자가 대규모로 노숙하는 사태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이용을 더 확대하고 더 공공연하게 하는 현재의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 계약안을 우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문제인데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비정규직법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10년 전과 같이 부담이 서민과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악몽을 경험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조정위원장 발언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수석조정위원장 최경환** : 지금도 취업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금년 예산보다 무려 35% 일자리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있습니다. 총액이 한 4조 6,000억원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청년인턴제사업을 몇 만명 확대하고,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늘리고, 또 노인일자리 늘리는 이런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강제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대책이나 이런 대책 가지고는 근본적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루속히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고용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실업대책·고용안정 대책 말씀해 주시지요.
-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구조조정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은 고용안정을 위한 필수대책입니다. 대기업 납품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받을 때 현금지급비율을 늘리고 어음만기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인력수요가 많은 건설·문화관광·서비스·복지분야에 고용창출정책을 강화하고 실

업급여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취업 후에 급여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취업준비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저희 친박연대는 경제회생의 열매를 우리 영세 서민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고용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 중심형으로 한국경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작은 대책들이 일시적인 대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의 모델로는 앞으로 고용도 늘릴 수 없고 실물경제도 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납품가 연동제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파생상품을 마음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써 11월 말에 키코(Kiko)에 가입한 487개 수출기업들이 입은 손해가 4조 5,000억원까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서는 중소기업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 민주노동당밖에 없습니다. 사유제한해야 됩니다. 파견,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만에 첫 차별시정조치가 나왔을 만큼 차별시정조치 매우 미흡합니다. 대폭 강화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올 들어 두 번째 하고 있는 정당정책토론회 국민 여러분이 염려하시고 관심이 가장 높으신 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을 들어보고 계십니다. 제1주제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에 이어서 지금 국민 여러분 피부에 와 닿고 있는 문제인 실업문제, 고용안정 문제에 관해서 7개 정당의 기본 기조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간의 상호토론이 있겠습니다. 방식은 전과 같고, 이번에는 총 5분의 총량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1회 발언시간은 2분 내외에서 흐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저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고, 우선 순서에 따라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부의장부터 고용안정·실업대책에 대한 상호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최근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 수도권 지역의 취업자수가 1,177만명인데, 2000년에 비해서 한 180만명 정도 8년간 증가

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업자 수의 81% 정도 차지하는데 그것에 반해 비수도권은 오히려 8년간 훨씬 작은 40만 2,000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이 결국은 고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의 수도권 규제철폐, 이것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 일자리 창출 쏠림현상은 아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본사가 되고 경기지역은 공장이 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소비시장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런 통계를 봐서라도 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말로 철폐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다음 창조한국당 말씀하시겠습니까?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도 큰 회사를 경영해 봤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울 때 제일 유혹을 받는 것이 감원으로서 인력비용을 줄이고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장 안이한 해법이고 창의적이지 못한 해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퇴직을 시키는 것보다 일시 휴직을 시키거나 임시휴업, 또는 직업훈련을 내보내는 방법 등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이러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이런 지원금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일시휴업이나 휴직·직업훈련·인력재배치 등 중소기업의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창조한국당에서는 3조 3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어서 항상 교육을 시키고 평생학습체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그리고 사업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창의적인 해법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용유지지원사업 같은 것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 460억원이 책정된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더 늘려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예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많은 정규직노동자들이 일감을 잃고 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자동차공장, 천안에 있는 자동차공장,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기업에서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10년간,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

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로 만들어놓은 사회안전망은 OECD 국가 27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고용보험가입률 최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률 최저입니다.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비용도 역시 최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내년도 노동정책의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입니다. 복지예산 증가를 많이 했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실제 순증가분은 1% 내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실업수당, 현재 있는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서 제외된 수많은 실업자·저소득층·신규 청년노동자들에 대해서 과감한 정부재정에 기초한 실업수당제도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만 처리하더라도 전체 실업의 위기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의욕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은 이미 모두 실업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의장 발언하시지요.
-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민주당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곳, 혁신도시 열 곳, 기업도시 여섯 곳 등을 지정함으로써 소위 전국토를 투기장화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나라당 최경환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가 결국 대규모의 인력을 흡수하고 따라서 실업대책으로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대주단협약,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새로운 관치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건설업을 희생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라면 왜 우량대기업이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영간섭의 우려를 이유로 가입을 꺼리겠습니까? 앞으로 조선업 등 다른 업종도 구조조정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이런 대주단협약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보다는 각 기업의 부채비율과 자산가치 실사 등을 엄격히 해서 그 적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채권은행이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경제회생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 답변과 발언 같이 하시지요.

-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과거 정부에서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가 예정대로 되었다면 중심축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까지 행복도시에 몇 개 부처를 이전하겠다는 부처 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도 사실상 연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중심적 역할을 못 한다, 예산과 집행을 당초대로 한다면 중심축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3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9988'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99%인데 인력의 88%를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려 해도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연간 2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도와주면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간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모도우미라든가 요양도우미라든가 이런 분야에 돈을 들여서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 9만명 정도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노동력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저희 큰 방향이지요. 특히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85%나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민주당이 정식으로 문제 삼고 거론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위원장 답변과 발언 같이 하시지요.
- **한나라당 수석조정위원장 최경환** : 또 여러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시간제약상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문제에 관해서 임영호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선지방대책·후규제완화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서 투자가 위낙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이익들은 지방으로 전액 돌려줍니다. 그리고 지방재원 보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재도입 등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이용경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증액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대주단협약 같은 경우 솔직히 지금 금융기관 간의 이해상충 관계 때문에 멀쩡한 회사라도 한 회사가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흑자도산하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

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서 관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박병석 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세제지원 쪽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세제세법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다만 정규직 전환이나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뽑을 것을 정규직으로 안 뽑고 비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모럴해저드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의해 가면서 해야 되고, 일자리나 실업·복지대책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얼마든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주 생산적인 담보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대책 또 실업대책에 관한 각 당의 의견 듣고 계십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비정규직이 보통 평균 연간 27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20만명으로 부족합니다. 적어도 연간 30만명 이상은 되어야 그나마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5년 내, 4년 내에는 비정규직 절반은 400만명은 바꾸겠다, 이 정도 생각은 있어야 우리 비정규직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회사들이 비정규직 쓰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가실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의 몫입니다. 비정규직법 여전히 계약하겠다고 하고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보호한다, 모순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법 계약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개정해야 됩니다. 사유제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한나라당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금융사 통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은행에 대한 지원은 이미 가고 있고, 적어도 고용보장을 기업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IMF 어땠습니까? 공적자금 들어갔지만 결국 그만큼 회사 사정 어렵다는 것 아니냐 정리하고 댔습니다. 이 분들 영세 자영업자로 떨어졌습니다. 10년만에 이제 면책자로 떨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제2의 IMF 고통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장을 기업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것, 저는 분명히 정부 여당이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서비스 확충하는 것입

니다. 예산을 바꾸지 않으면 확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바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충분히 늘릴 수 있고 OECD보다 지금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13%대 수준입니다.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대체로 일곱 분이 모두 약 3,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두 번 정도씩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노중기 의장 발언하시지요.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아까 제가 노동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동시간이 연단위로 2,300시간을 넘습니다. 2,3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OECD 국가 27개국 중에 최장의 노동시간입니다. 나머지 26개 국가, OECD 국가는 다 1,0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는 독일의 1,300시간대까지 있습니다. 이 2,000시간대의 노동시간의 부끄러운 이름,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바꾸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일거리는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매개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 대표께서 사회적 일자리를 9만개 정도 창출할 수 있겠다, 9만개 이것으로 턱도 없는 수치입니다. 9만개는 지난번 IMF 외환위기 때 아마 노숙자로 나오셨던 분들만 하더라도 9만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새로운 목적세 도입을 통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기초해서 100만개 사회적 일자리, 보육서비스라든지 장애인 돌봄 노동이라든지 산모 돌봄 노동, 노인 돌봄 노동, 일자리는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정부산하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도 이런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재 당장 필요한 일자리만 90만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다음에 기회를 한번 더 쓰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반드시 이번 경제위기 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임영호 부의장 발언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국내 고용의 한 90% 가까이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중소기업이 지금 신용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주의단계가 한 51.5%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 6% 높아졌는데 점점 어

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정책자금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 3조 2,500억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2조 6,3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은행통하지 않고 직접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납품단가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납품단가의 인하를 종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정부가 깊이 개입을 해서 적절한 납품단가,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납품단가의 원가연동제, 이런 제도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용경 의장, 발언하시지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된다, 소비 촉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는 고용 불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하려면 고용 기회의 확보와 일자리 많이 만듦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보하고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고용지원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한 가지 교대제 전환지원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2004년에 노사정 간에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작년엔 230억원이었던 것이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전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라도 성공적인 좋은 제도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서 한나라당이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이정희 의장 발언하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환하는 자금지원 필요합니다. 법개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기륭전자, 코스콤, 몇 십개가 됩니다. 정말 3년, 4년씩 거리에 나왔아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해결하고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어떤 움직임도 그저 곁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결합시다. 먼저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대제 전환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지금 4조 3교대 문제와 관련되어서 책정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한 해에 6,000명 이 정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용유지 지원금은 피보험자를 고용유지할 경우에 주는 것인데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저는 이것이 매우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정당의 몫은 개별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는 다 채워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정당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산업별 교섭이 가능해지고 이 단체교섭의 효력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에게 비록 자기는 지금 일하지 않더라도 그 노동자 전체에게 노조가 없더라도 확산되게 해서 노동자 전체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나누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아직 ILO권고도 이행 못 하는 수준입니다. ILO가 노조활동 탄압 중단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UN사무총장으로 인권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데도 이렇습니다. 우리 노동부가 아직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정도로 자세전환을 하셔야 되고 우리 정당들은 이런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최경환 위원장 발언하시지요.
- **한나라당 수석조정위원장 최경환** : 정말 일자리 문제는 모두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우리가 일자리가 안 생기느냐, 이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매년 신규 고용시장에 50만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만개 이상도 힘들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동안 투자가 안 되고 또 각종 규제, 이런 것이 있는 한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사회적 일자리 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느냐, 따라서 감세와 규제완화 같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입니다. 또 때법 같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과연 일자리가 한국에 늘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박병석 의장 발언하시지요.

○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고용을 유지하려면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IMF '98년 당시에 김대중 정부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기금에 무려 4조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출연금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가져온 예산을 보면 당초에 200억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5,000억원을 가져왔는데 우리 민주당은 그것을 1조원까지 늘려야 되겠다, 5,000억원을 늘리자는 것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한 5,000억원 정도 더 늘려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분야에 관한 것을 쫓겨날 염려가 없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해 주면 60만개에 달하는 음식점에서 한 명씩만 더 고용을 해도 60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적 감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중적 지원, 그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고루 잘 정책적 배분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의장 발언하시지요.

○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아까 질의드렸던 대주단협약 문제는 새로운 관치라고 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문제가 노동시장에서 핫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이슈입니다. 따라서 여당에서는 보다 긴 호흡으로서 슬기롭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모두연설에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납품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역시 실업급여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공기업이 내년도 신규채용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기업 민영화 등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빨리 확정되지 않아서 신규인력 채용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예치해서 자금난의 숨통을 틔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금융기관의 책임을 너무 과중하게 부과하다 보니까 신규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는, 그래서 금융경색이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반응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대출 책임을 보다 더 다른 각도에서 재규정함으로써 산업시장에서의 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고용안정대책은 결국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인데 왜 정부에서 교육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보는데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이제 한 번씩 발언하실 기회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총량 잔여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그 시간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압축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장!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대기업 규제완화한다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고용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9월 말 현재 유보율이 787%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남아도 투자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폐법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노동현실이 단체행동권, 최소한 나 근로하지 않겠다, 이것이 단체행동권의 최소한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기준에도 엄청나게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용문제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계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이 분들 대형마트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래시장이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IMF의 충격에서 중소기업 영업자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농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 말씀은 “농촌 고려장 당하고 있다. 우리 도시의 비정규직보다 못 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세 이상이 청춘입니다. 이 분들 문제에 대해서 농가부채 탕감하고 소득 보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영호 부의장!

○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법인세 감면한다고 기업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업은 이익이 날 때 경제 여건을 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중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것은 대기업이 아마 땅값 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대기업의 투자 이것은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벽 시장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일용인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경험에 보면 IMF 때 공공근로를 국가에서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것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임금을 줌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어서 내수 진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에 대해서 더 많은 국가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자들 일자리인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추세에 따라서 간병, 보육, 위생 이런 분야에 상당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재정지출을 투자해서 소비진작으로 연계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용경 의장 발언하시지요.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청년 실업이 큰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대개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비정규직에 자기의 장래를 거는데 마음이 내켜하지 않습니다.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턴제 같은 것은 6개월 정도의 인턴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것이 재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악순환으로 끝나기 때문에 고용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끝나서 청년 실업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더 어려움을 겪는데 이 일자리 창출은 하나의 고용기회 확대로서 고용 유연성을 넓히는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은 “미국은 모두가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말을 하지만 미국의 비정규직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인식을 하고,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고용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것이 소비로 연결이 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고용대책과 실업대책에 관하여 계속 각 당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노중기 진보신당 의장 말씀하시지요.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는 지금 양치기 정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747의 300만개 일자리 창출, 이것을 시장과 대기업 투자에만 맡기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몇 년 동안 투자계획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은 어디에서 창출될 것입니까? 비정규노동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간제의 기간제한도 풀려고 할 뿐만 아니라 파견노동 또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추진하는데 공기업 노동자들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조정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과연 300만개 일자리, 고용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나라당과 현재 이명박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야당들께서도 여러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까라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법 계약 막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막아야 됩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현재 시장주의 정책 야당들이 힘을 합해서 막고 경제 정책의 기초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는 민주당 박병석 의장!
-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청년 실업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부모들에게 얹혀서 살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보면 이것은 재앙적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두 달 전에 추경예산에서 한나라당과 싸워서 2,500억원에 달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서는 1조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중산층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주거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선거 때는 교육만족 2배, 사교육비 절감 2분의 1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교육세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폐지의 이유는 예산의 경직성과 세법 체계의 단순화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자유자재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 평균이 교육세 5.7%인데 우리 4.7%입니다. 교육세 폐지하게 되면 공기업 위축되고 그리고 사교육비 더 늘어납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4분기의 사교육 부담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가계 총 소득의 9%가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교육세 폐지를 단호히 반대하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1조원으로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부의장!
- **자유선진당 정책위원장의장 임영호** : 지방정부도 내수진작,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위헌 판결로 지자체로 내려가는 1조원 이상의 돈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가뜰이나 지방은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교부세 적자분 이상으로 지방의 재원을 확충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방정부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 또 상공인, 서민경제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 **한나라당 수석조정위원장 최경환** : 한나라당 정부가 복지예산을 자꾸 축소시킨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 무려 10.3% 이상이 증액되어 있고, 지난 정권들이 백화점식으로 복지를 나열하는데 솔직히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나라당 정부는 복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복지가 안 가는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종합복지대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지역은 아파트, 대도시 이런 지역입니다. 지방이나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어려운 계층이 결국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영업자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1,000억원 이상 반영해서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자영업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20~30대가 조기에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복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육입니다. 보육예산을 이번에 소득이 하위 50%까지, 지금은 차상위까지 해 줘니다마는 50%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병석 의장님 등록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나라당과 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나라당도 적극적입니다.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한테는 전액, 지금까지는 2학년까지만 등록금을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4학년까지 확대하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자율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복지를 확대하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골고루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임영호 부의장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압축적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임영호** : 한나라당은 재벌에 대한 총 출자에 대한 규제철폐, 또 금산분리 공약 이런 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벌의 투명성, 시장의 정상적 기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일자리 창출과 관계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저희 당은 반대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그러면 엄호성 의장 시간 보시고 발언해 주시지요.
-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아까도 쭉 경제성장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아마 2% 전후로 고착될 것 같은데 전문연구기관에 의하면 2% 성장률을 상정할 경우에는 고용증가가 제로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카드 대란 때에 경제성장률 3.1%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약 50만명의 젊은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을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칭 청년 인턴십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그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이 실업의 아픔을 느끼지 않고 바로 일정한 인턴십 과정을 거치면 경제가 조금 나아졌을 때 바로 기업이나 자기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1주제 실물경제 활성화 문제, 또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문제 상호토론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미흡하신 이야기, 또 미진했던 설명이 있으시면 국민들에게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보시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부터 마무리 발언 국민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절도 겨울입니다. 점점 더 추워질 것입니다. 겨울이 오는데 조금 있으면 봄이 올 테니까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앞으로 봄이 올 테니 지금 주식을 사면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솔직해야지 신뢰가 회복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을 편가르는 식의 처방은 안 됩니다. 부자감세가 이 겨울을 나는 처방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화합할 때는 힘 없는 자가 손을 내미는 것보다는 힘 있는 자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힘 없는 자보고 손을 먼저 내밀라고 하는 것은 항복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나라 화합에 앞장을 서셔야 합니다. 함께 체온을 나누며 이 겨울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물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이 생각하는 사람중심, 진짜 경제가 바로 그러한 경제해법의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 노중기 정책위의장 마무리 발언입니다.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국민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닙니다. 증권사 직원이 해야 할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사회적 대재앙에 대처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위기는 10년 전의 IMF 위기보다 더 커다란 쓰나미급 위기입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현재 정부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때 재벌과 강부자가 혜택을 볼 감세정책 등 한가한 처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엇그제는 4대강 개발이라고 해서 죽은 대운하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자본에게 돈을 몰아주고 부동산투기를 다시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까? 저는 현재 이명박 정부정책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중심, 재벌중심, 대기업중심, 고소득층 중심의 낡은 성장주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커다란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진보신당은 우리가 닦친 거대한 위기에 피해를 집중적으로 당하게 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법 계약을 철회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조정위원장 마무리 발언입니다.

○ **한나라당 수석조정위원장 최경환** :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우선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또 비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해서 곧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에게도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낼 묘안을 찾아야 됩니다. 또 세계 다른 나라도 여야 관계 다 싸울 때 싸웠지만 지금은 다 그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가 경제위기 극복 예산 지출하겠다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GDP의 무려 절반

수준까지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 초부터 집행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위기 극복에 대단히 차질을 빚게 됩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잘 수렴하고, 야당 의견 잘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용대책,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토론되고 있는 정당정책토론회 지금 마무리발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이 국민 여러분의 근심걱정을 얼마나 덜어드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책대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제는 심리이고 믿음이라는 처방을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정책결정권자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민심이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과감하게 기용해야 합니다. 엇그제 경기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나라당 경선의 양금을 털어야 한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자신을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혹평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꺼 앉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이 새삼 돋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용과 화합, 통합의 따뜻한 흐름이 경제회생의 윤희유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마무리발언 들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하신 분들 중에 36% 이위가 경제적 동기에서 그랬다고 하십니다.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국가가 할 일,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조화와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라,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가능합니다.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합니다. 농가부채 탕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국가가 정부가 우리

어려우신 분들,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분들 도와드리겠다 마음만 먹으면 예산 바껴서 할 수 있습니다. 법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부 특권층을 위한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장합니다. 이래서는 우리 서민들 살 수 없습니다. 이 경제위기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의견을 모아 가면서 틀을 다시 짚시다. 그 속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함께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진보정당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겨울을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민주노동당과 바로 여러분의 정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마무리발언해 주시지요.

○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들 하십니다.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11년 전에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극복할 수 있다는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기를 맞아서 우리 MB 정부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10억원 이상이나 내는 상속세를 꼭 감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국민분열적 감세정책은 취소하시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감청을 허용하는 법, 정치사찰 가능성이 있는 법, 이런 반민주 악법은 왜 이 시점에서 들고 나오십니까?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각을 개편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겠습니다. 1,000억불 정부 지급보증 때 단 이틀 만에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지할 것은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저지할 것은 분명히 저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마지막으로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마무리발언하시지요.

○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경제난은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살았는데 왜 누더기 가게부를 써야 합니까? 건실한 우리 기업이 왜 흑자도산을 해야 합니까?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이 같은 고통의 사실을 빨리 끊고 가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힘을 합해서 가게와 기업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국민통합과 상생, 그리고 초당파적인 일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방 죽이기 정책의 완결판인 수도권규제 철폐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종부세 대상의 97%가 수도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꼭 이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학교수)** : 금융위기가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게와 개인의 고통으로 오고 있는 이즈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물경제 활성화와 또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각 당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방향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녹취록



제1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제2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비초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제1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첫 번째 진행을 맡은 송지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는 4월 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구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는 총 세 번 실시되며, 오늘 토론회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MBC와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 초청된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 직전선거에서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율 5% 이상의 정당입니다. 그러면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후보자를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입니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입니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안녕하세요.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입니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입니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입니다.
-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섯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토론은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방안, 한.미FTA 국회비준 그리고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문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심

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제는 사전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진행방식은 각 후보자가 먼저 기조연설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법발언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회자가 적극 제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1분씩입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부터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깨끗한 정치환경을 마련하고 견제와 균형이 발휘되고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부터 보아온 고소영과 강부자로 대변되는 부자내각, 그리고 특정 집단만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사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큰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나라당은 지금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회권력까지 몰아준다면 우리 정치는 그야말로 일당독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국정을 파탄으로 몰았던 통합민주당이 견제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와 인권, 법치 그리고 따뜻한 경제를 기치로 내건 저희 자유선진당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김석수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국현 후보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문국현 후보가 대표로 있는 정당이 바로 저희 창조한국당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정당 투표하실 때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이번에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경부대운하 저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당을 중소기업당 또는 중소기업인의 당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유일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는 경부대운하 저지는 저희 당이 사람, 경제, 환경을 살리는 당이기 때문에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돌봐주지 않아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바

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근로자입니다. 잘 살펴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한국당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계속해서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의 기초연설을 들겠습니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안보는 산소이고, 경제는 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잘 돌려면 산소가 잘 공급되어야 하는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경제가 탈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보니까 북한이 개성에서 사람을 내보내고,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잿더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한나라당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반도 정세를 잘 유지하고 또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반도의 안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는 서민의 안정을 위한 폭넓은 토론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1분간 기초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21세기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화로 나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 않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로 정권을 출범시켰고 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경제를 되살려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치적 통합 그리고 교육의 백년대계, 한나라당의 안보와 평화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정권의 이양 가정에서, 그리고 국정의 정상화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의욕을 보이는 가정에서 다소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실수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권처럼 국민과의 신뢰를 배반하고 아마추어리즘으로 국정을 농단하면서 무능하게 낡은 이념이나 정치적 계산에 치우쳐서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과 실용에 기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여당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의 기초연설 들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상아탑이 우골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골탑이 아니라 학생들이 피를 팔고 인체실

힘 대상이 되어서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료, 주거, 지금 민영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이런 요소들이 전부 민영화되어서 우리의 공공성이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조건인 복지체계가 전반적인 후퇴를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은 지금 총선을 영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형님공천, 불복탈당, 급조정당,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정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세우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섯 분의 기초연설을 먼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규칙을 잠시 설명 드리면 모든 후보자에게 1분씩 여섯 번의 발언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1분이 짧다고 생각 되시면 한번에 최대 2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번의 발언기회를 쓰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무대를 보시면 각 후보자의 성명과 잔여 발언횟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적혀 있으니 확인을 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회자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람직한 남북 관계 정립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철수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은 남북관계가 또다시 불확실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와 상호주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각 정당의 남북 관계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첨순에 의해서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대결 구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화해협력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남한도 살고 북한도 사는 상생구도로 가야 합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서로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발상자체가 지금 평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상대 버릇을 고치고, 내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싸움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집사람을, 또 내 남편을 이겨서 뭐 하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 큰 싸움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칼로 물베기가 됩니다. 지금 정부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도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라고 하는 제삼자에 너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

움이 지금 고부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막아야 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통합민주당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지금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될 주인은 우리 한국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한미관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포괄적인 전략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관계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간에 경제협력도 하고 이것을 거쳐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이러한 포괄적인 전략을 가지고 하고, 이 문제는 6자회담에서 관련된 나라들 간에 합의가 되어서 해 온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주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상대방의 예견성을 주고 일관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에 대한 위협을 낮춤으로서 서로 협력이 되고 안보가 강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안보를 잘 단단히 하면서 경제를 발전해 나가는 것이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부가 들어와서 인수기관을 거치면서 지금 3개월이 넘어갔는데 그동안 관련국들과 다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바꾸어서 '핵을 먼저 포기해라, 그러면 다른 것 하겠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와 합의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화함으로 해서 안보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을 막으니까 예견성이 떨어지고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외국에 있는 CEO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춤거리게 됩니다. 저는 반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바람직한 남북 관계의 정립방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중 후보가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 민주노동당은 현재 국면을 매우 위험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남과 북, 혹은 북과 미가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게임입니다만 자동차 두 대가 마주 달려서 비겁자가 피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포기해야만 지원해 주겠다는 식의 일관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북아전략 문제에서 전체적

인 동북아 평화의 문제나 안보체계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단순히 남북의 문제라든가 퍼주기를 했다는가, 좁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런 국면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유선진당 견해부터 듣고 한나라당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지금 원칙과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정권에 '그놈의 헌법'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대북관계의 원칙과 기준은 우리 헌법적인 가치와 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퍼주기라든지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이 끌려 다니는 그런 대북정책이 아니라 정말 발전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햇볕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전략적인 상호주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 북한을 끌어들이 수 있고, 북한이 투명하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먼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혜적 상호공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만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긴장의 요인이 되는 위협요소를 제거해서 북반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이룬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절대 대결구도가 아니고 포용정책의 원류도 원래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포용과 상호주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1998년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상호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노벨상 수상에 집착한 나머지 상호주의를 왜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한이 위협을 할 때마다 전쟁이라도 하란 말이나?"라는 발언으로 결국 우리 한반도를 북한의 인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안의 상황을 보면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의 현재 진행형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확대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안보에 위협을 받으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합참의장의 발언도 그렇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북한이 소형 핵무

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왔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상대가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화해협력만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대북포용정책이겠습니까.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와해되느냐의 공론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마치 한나라당이 대결구도를 편다는 식의 그러한 왜곡된 주장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순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북한을 정상적인 이론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2분을 다 쓰셨습니다. 반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지금 한나라당 후보께서 한나라당은 결코 대결구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부대운하 저지와 똑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한나라당이 내놓고, 국민의 평가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송민순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6자회담들 내에서 핵 포기하고 북미수교와 같은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먼저 핵을 포기해야만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 부시 행정부가 압박정책을 펴려다가 실패한 것을 지금 부시행정부는 포기하고 대화정책을 돌아서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압박정책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관계는 분명하게 잡아 주시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 일련의 과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대북포용정책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핵 포기를 먼저 해야 개성공단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김태영 함참의장의 예방적 선제공격 발언은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연장 표결에서 우리나라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PSI, MD 참여가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북이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는 포용정책을 하겠다, 포기만 하면 우리가 지원도 하고 다 해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핵 포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석수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시 행정부조차도 포

기한 정책입니다. 6년 동안 교훈을 얻고 이제는 대화로 나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관계의 문제는 미국이 동북아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한·중관계, 한·일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단편적 사안들이 별 것 아닌데 왜 이것을 가지고 문제로 삼느냐고 대응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큰 남북 관계에 쌓아온 축적된 성과들을 어떻게 이어 받아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의 핵심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2분을 쓰셨습니다.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조금 전에 정옥임 후보께서 대북포용정책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만 요즘 북한은 미사일도 쏘고, 한국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다시피 하고, 그런가 하면 연일 수위를 높여서 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권은 전혀 무대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대응이 대북포용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송민순 후보도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3주 전에 적십자사 마크가 뚜렷한 쌀 포대가 북한 군에게 인도되는 사진이 크게 언론에 실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그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통합민주당은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인수위 의원으로 활동하셨던 정옥임 후보가 속해 계시는 한나라당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송민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지금 여러 후보들이 상호주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개성공단 같은 것만큼 상호주의가 잘 집약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남과 북이 서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이고 또 개성이라는 지역이 평양의 안보축상에 있는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을 평화와 협력의 지대로 바꿔놓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핵 문제도 해결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경제협력도 잘 해 나가자고 하면 될 것을 '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누구를 위한 조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전쟁 인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잘 협력하고 남북간 대화를 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과 미

사일은 지난 10년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핵, 미사일 문제가 붙어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관리하고, 우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틀을 짜서 협력해서 관리의 틀 속에 놓고 있습니
다. 이런 가운데 발전해 가면서 문제를 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떼어서 해
결하면 해결하지 않겠다는 게으른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
고 우리가 대북정책을 해 나가고, 합참의장 발언 같은 것도 그런 가상의 상황에 대해
서는 안보 당국자는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안보의 핵심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먼저 핵이 북한과 미국관계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주
적인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핵 문제는 북미관계라는 언어도단
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일방
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6자공조체제이며, 미국과 주변국과의 협조체제
하에서 북한 핵 문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선제공격에 대한 주장은 북한의 주장
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국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공개된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당이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시는데 인도주의라든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처럼 적극
적인 정당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이라는 것
은 무조건적으로 퍼준다든지, 일방적으로 유화로 나가는 것이 포용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대북포용정책, 그리고 궁극적으
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대응이 아
니냐?'라는 반박을 하셨는데 때로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무대응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한
외교정책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이 철저히 상호주의로 움직인
다고 말씀하시는데 철저한 상호주의와 협력해서 움직이는 개성공단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의해서 직원들이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과연 상호주의입니까? 그리고 북한상황을 잘 관
리했다고 하시는데 기분만 나쁘면 잣더미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한국 총선
에 대해서 대운하 이야기까지 꺼내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현 상황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나라당은 대결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단지 의연
한 자세로 원칙과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포용, 규칙을 지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
회에 정상적인 이론이 되도록 국제공조를 철저히 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타당성 있는 정책을 구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투명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쌀이 북한 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 군에게 흘러간 것에 대해서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통합민주당이나 그 당시에 인수위원회 활동을 했던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왜 국민에게 솔직하게 그 과정과 그에 대한 사과와, 실정에 책임을 지는 이런 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토론을 나와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질문과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신다든지, 시간 제약상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수 있도록 좀더 큰 틀에서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6자회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모두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특별기금을 마련하도록 우리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든지, 또는 경제협력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북한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의료지원을 국경없는 의사회라든지, 다른 NGO, WHO, UN 산하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함께 동원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정당성을 가지지 못 했던 정치인들이 또는 정당에서 북한의 최고 고위권력자와 악수 한번 하는 것으로 국내 문제로서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현 정권이나 지난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바른 눈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정옥임 후보는 질문을 잘 기억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한국당의 김석수 후보가 발언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방안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저는 북한도 자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되는 것은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다시피 지금 이명박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정부 간에, 정권 간에 어떤 일종의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때를 만났다는 방식으로 작심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또 우리 요원을 철수 시키고, NLL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대단히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 번영을 대단히 해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쪽에서도 자제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입
니다만 강경대책이 실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경하게 나가서 상대 버릇을 고치겠
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용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북포용정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
는 이명박 정부가 대단히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합참의
장이 국회 발언에서 비록 답변용이라고 하지만 국회발언은 속기록에 남고 역사에 남습니
다. 그래서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제 타격발언을 해서 북한을 자극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외교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결국 이명박 정권이 아
마추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단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남과
북 정권이 5년 내내 기싸움 하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사
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수교 일보직전까지 갔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클린턴 행정부 임기가 끝나서 하지 못했고, 결국 부시 행정부 들어서서 6년 동안
북미 대결구도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똑 같은 실수
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화정착기조로 가야 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 우리나라 레드콤플렉스가 대단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
습니다. 북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위축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남북
관계의 문제나 북핵 문제는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미문제 해
결을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이냐의 문제에 관점을 가져야
지,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미국 동북아의 어떤 군사적 전략에 도움
을 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입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넘버3에 나오는 송강호처럼 무조건 내리친다고 되
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문제들, 인도적 지원의 문제와 북핵의 문제들은 정책의 목표가
다 다른 것입니다. 남북 화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별개로 떼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찾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그러면 이제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가 여러 분들의 문제제기에 대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선 1분 동안 답변을 하고, 1분은 나중에

쓰기로 하겠습니다. 식량이 북한 군에게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강경대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지난 정부의 어떤 중복주의 내지는 굴종정책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진보신당에서도 중복주의를 비판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합참의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당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레드콤플렉스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지금 레드콤플렉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통일의 파트너를 만드느냐,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느냐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지금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정책을 같이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하겠다고 아니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겠느냐의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까지 퍼주었던 현금, 현물, 현곡식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국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밀실정치에서 이루어진 것을 또한 그에 대한 견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퍼부어진 것들이 어떻게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한나라당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유통검증체계를 국제적인 공조 하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UNDP, UN발전기획단, WHO,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없는 의사회 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우리 한국만이 들어간다면 북한이 절대 받지 않을 것이고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하고자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저희 창조한국당의 남북관계, 대북관계 정책은 이렇습니다. 일단 한미공조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미국에다 넘겨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밀착, 예측

또는 어떤 중미주의적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6자회담 틀에서 이루어졌던 핵폐기 문제와 북미수교, 긴장완화 조치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역시 1분을 남겨두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 이명박 정부가 좋아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문제는 핵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 경협이 문제가 동시에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연계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과 교역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동의라든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이런 것들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압박해 나가고, 우리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가겠다는 주장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물류의 흐름들을 차단시켜 내는 이런 부작용을 유발해서 오히려 실용주의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북주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모두 다 한번씩의 기회가 남으셨고, 송민순 후보만 두 번 남으셨습니다.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2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 쓰셔도 좋습니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논평할 것이 너무 많아서 1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2분으로 논평하면 안 되겠습니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대북정책에 있어서 퍼주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은 아주 처참한 상태로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두만강 입구에는 아사자들의, 얼어붙은 시체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국경지역에는 어린 남학생들이 꽃제비를 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은 돈 몇 푼에 몸을 팔아야 하는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현상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과연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펴왔다고 할 수 있는지, 특히 송민순 후보께서는 지난 정권에서 외교안보 통일 분야의 책임자로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이런 북한의 인권문제, 특히 탈북자를 위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몽골과 같은 탈북자들의 경로에 있는 나라들과 국제적인 공조를 하고자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어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가 마지막에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후보는 1분이 남으셨고, 송민순 후보는 2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지금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나라의 인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 많은 접촉과 교류를 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의 경우에도 많이 봤습니다.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대동독 정책으로 했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접촉을 많이 하는데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내고 하면 접촉이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식량지원도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식량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식량을 주지 않으면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은 북한의 주도권은 군이 아닙니다. 무고한 북한주민들이 우리는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자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신고 때문에 상당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회담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분위기가 악화되어서 6자회담 진전에 상당한 차질이 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결적인 상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우리가 큰 집을 지키는 입장에서 폭이 넓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그러면 박선영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후보가 1분씩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방안이었습니다만 각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기조를 정착시켜야 되지만 경제협력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개성

공단사업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을 철회해야 되고, 심천에다 홍콩방식의 경제특구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주라든지 남포, 원산 등에 경제특구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대북화해정책이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교류와 협력 부분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강경파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정 반대로 강경대결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대단히 심각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지금 새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이나 핵 문제 상황으로 그대로 가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우리는 자리에 없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합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청구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언권을 가지고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안보는 위협인식을 줄여야 됩니다. 위협인식을 줄여야 안보가 개선되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용을 하려면 그러한 위협인식을 줄이는데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통합민주당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포괄적으로 이끌어가서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개선해서 그것이 우리 경제에 산소와 피를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한미동맹이라든지 주변국 관계는 철저히 국가이익에 기초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커지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포용정책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북한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것은 국민적 동의,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특히 무엇보다도 비핵화의 진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라는 정치쟁점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시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헬싱키 프로세스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원할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병행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지금

부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경대책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시는데 정상적인 포용정책과 강경대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 민주노동당이 마치 중북당인 것처럼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북의 인권문제를 비롯해서 할말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공동기구를 만들어서 남북의 인권을 증진시켜 나가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라크를 침략할 때도 대량 살상무기와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침략했습니다. 이라크 특별법 만들었습니다. 이란, 쿠바 전부 그렇습니다. 자기와 적대적인 국가를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침략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인권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남북이 협력해서 우리도 인권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인권문제, 남북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방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미FTA의 국회비준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협상돌입 14개월 만에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지금 우리 측과 미국 측 모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에 따른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찬성여론이 있는 반면, 미국 경제로의 예속을 우려하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FTA 국회비준 찬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첨순에 의해서 이번 토론은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FTA 문제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미FTA는 우리의 경제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또 우리의 경제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틀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다른 나라에 앞서서 우리가 선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경제능력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협상내용도 50대 50으로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타결되어 있는 협상내용의 문제보다도 그것으로 생기는 국내에서의 취약분야를 어떻게 보존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피해를 받는데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민주당은 국회에서 국내보존대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FTA를 통과시켜서 우리의 경제영역을 확대하느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저희 한나라당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환경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 환경에 따라 국내 경제구조에 체질 개선도 불가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동북아 FTA의 허브로 만들어서 선진화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70%나 됩니다. 미국이 20% 정도 되는데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생산이 10년간 80조원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가격인하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농수산업이라든지 제약업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질개선을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느냐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비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FTA를 발판으로 해서 일본, EU, 중국, 브라질, 러시아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 비준 문제가 우리의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회비준을 통해서 미국의 비준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을 너무 알뜰하게 쓰셨습니다. 1분이 조금 지나가면 2분을 쓰시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 우리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해 왔습니다. 한.미FTA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공정성에 있습니다. 미국이 충실한 반면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이번 국회비준도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적 격동에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나 힐러리 후보가 모두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중에 한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우리가 먼저 화투 패를 까 보이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 결정 과정을 지켜 가면서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가 경쟁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고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저희 자유선진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 하에서 한.미FTA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통합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과 입장을 공조하고 있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한.미FTA가 지금 상태로 추진이 된다면 농어촌, 의약업계, 방송, 기타 서비스 업계는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또는 산업의 기반 구조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경제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선진당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비준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국력을 상승시키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는 우리가 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해서 비준할 수밖에 없는 조약이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약부분에 대한 정부대책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6, 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독재정권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회성 뺨질의 어떤 보상으로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과 어촌이 피폐화되고 황폐화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을 보상에 주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패를 까서 어떤 협상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1분이 지나가면 바로 2분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가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통합민주당이 무조건 비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함께 국내보존대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 대책, 장기적 대책을 농촌이나 다른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서 피해를 막고 발전시키느냐는 것을 하나의 보따리로 묶어서 같이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기업이나 농촌의

소득안정, 농촌으로의 투자유도를 염두에 두고, 지난 번 정부 때 123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었고 단기적인 투자도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비준이 야기를 합니다만 이미 협상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비준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고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해서 약점이 잡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미국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은 구조조치와 함께 한 묶음으로 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 지금 한나라당의 입장을 보면 농업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만 대응방안이 3, 40대 농업인력 확보라든지 마케팅 인력 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카길이나 선키스트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카길이나 선키스트가 가능했던 것은 농업의 규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자면 한국 사회의 농업자체는 중소농이 대부분인데 중소농을 다 죽이고 대기업 농을 키우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보여 지는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농업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FTA 기반을 닦아놓은 당인데 조건부 찬성으로 나온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통합민주당 내에 상당히 많은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한.미FTA를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후보들을 고스란히 받아 안아서 공천을 주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나 조건부 찬성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무역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주노동당도 무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무역이나, 우리 국민들을 위한 호혜와 상생이 전제된 무역이나, 또 우리 국민과 국민 경제를 살리는 무역이나의 문제입니다만 한.미FTA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여다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자유무역협정인데 왜 이것을 굳이 우리가 나서서 먼저 비준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당에 문제제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지금 송민순 후보께서 지난 정권하에서 123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여러 부처가 중복해서 투자하면서 작은 마을에 100억원이 함께 지원되었던 예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처간의 이해관계도 조정되지 않았고, 이해 집단의 의견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협상부터 해 놓고 국민 설득은 나중에 하는, 국민을 대단히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으로 그동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FTA 문제를 보아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미무역적자가 연간 1,640만불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권을 잡았던 통합민주당은 이 수치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라도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한나라당, 통합민주당과 저희 창조한국당이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업 부분을 단순하게 보상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방식입니다만 지금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국가를 주로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관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민순 후보께서 123조원을 투융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박선영 후보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일회성으로 돈을 농촌에다 퍼 나르기만 하고 농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한.미FTA를 체결하고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국운이 융성하면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자마자 농업진흥청, 다시 말하면 농업의 세계화, 농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될 농업진흥청을 민영화하겠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을 살려서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수출 대기업, 또는 대재벌 중심의 어떤 경제를 살려 내고 수출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어민, 자영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책기조를 5년 동안 가져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라서 한.미FTA를 저희도 애초에는 찬성했습니다만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미비하게 되면 저희는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미FTA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FTA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특히 FTA의 체결, 구현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논쟁이 아니라 구

체적인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FTA 협상을 체결하면서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조선업 시장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쌀 10만톤에 해당하는, 5,000만불에 해당하는 쌀 시장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FTA라는 것은 양국간 이익의 균형에 기초해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노동번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손해 볼 것을 알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을 했다는 발언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런 업종이 자동차, 전자, 섬유에 집중되기 때문에 농수산업, 제약업, 또 방송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하느냐에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장기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미 다양한 중장기 대책이 나왔고 또 농업 분야에 대해서 우르과이라운드 이래로 사실 정치적 목적, 특히 농업에 기반을 두신 정치인들께서 많은 주장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한나라당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불보전을 하느냐,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수산업 분야라든지 제약업 분야라든지 농업환경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이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분을 다 쓰셨습니다. 여러 분께서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송민순 후보가 많은 질문을 받으셔서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지금종 후보, 박선영 후보로 이어가겠습니다.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통합민주당에서 지난 번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대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우리 농업에 있어서 다른 유사한 피해 분야에 있어서 구조적인 개선, 구조적인 조정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대책에 더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각 당에서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수십 번의 공청회와 국회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협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구조조정에 있어서 어떻게 농촌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촌에서 여러 가지 병원이나 후생, 복지들을 잘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느냐에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있는데 국내적인 것만 보지

말고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미국과 FTA를 했을 때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세계 경제를 해쳐나가고, 지금 미국과 FTA를 했기 때문에 EU와 FTA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와 FTA를 하느냐, 안 하느냐고 할 때는 협상 팀에서 충분히 국내적인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핵심은 국내적인 보전대책, 국내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민주당은 이러한 국내적 지혜를 모으는데 모든 힘을 다 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 보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농업입니다. 지금 삼성경제연구소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떡거리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지금 곡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농업 문제, 식량 문제는 안보 문제와 바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카길 같은 대규모 식량회사로부터 수입이 되어서 식량을 먹기 시작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농업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농업으로 말씀드리면 다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통해서 문화산업으로의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통해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나라당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후보가 FTA 추진을 잘 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칭찬을 해서 신기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FTA를 제가 방송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의 이야기입니다. 호주나 이런 사례들을 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방송과 영화 등 문화산업은 무조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FTA 문제는 미국과의 경제적 연계의 문제입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알겠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가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정욱임 후보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구체적인 논쟁을 하자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중지를 모아보자는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 유권

자들은 한나라당의 정책을 대운하 정책 외에는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책이 있는데 왜 몰라주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하고 국민들이 여권의 정책을 모른다고 하면 홍보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농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존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관련법을 개정해서 재해보험의 경우 농어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관련법도 개정해서 농어민들도 R&D 연구개발비를 보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저희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박선영 후보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답변이 나오면 제가 질문도 하고 그에 대한 토론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우선 지원방법에 대해서 규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허용하는 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피해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단기적으로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해 주고 강화해 주는 노력과 병행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피해보존직불제라든지, 폐업지원제라든지 기본적으로 농어촌에 있어서 경쟁력강화, 체질개선을 위해서 수입산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쇠고기 시장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력 추적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전업농을 위한 농가단위소득안정제라든지 또 한계농지거래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농어촌에 엑스포라든지 농어촌의 독특한 뉴타운을 건설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노무현 정부를 칭찬했다고 했는데 잘 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 한 것은 비판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미국에게 그렇게 이익이 된다면 올 대선에서 클린턴, 오바마와 같은 민주당 후보들이 왜 재협상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최적의 고지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중에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방송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아마 시장이 개방되면 연간 26억 9,000만원 정도 소득의 감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체질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갑자기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운하야말로 245개 지역구에 지역 일꾼을 뽑는데 다른 정당들이 표 얻겠다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너무 농어촌 문제로만 흐르니까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지적재산권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40%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의 내용 중에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적재산권 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터인데 특히 일시적인 복제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결해 주었습니다. 일시적 복제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메모리에다 잠시 보관해 두는 것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법을 위반한 전과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지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서는 장단기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혜도 모으자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농어민과 제약업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뺨을 맞아도 자기가 자원해서 뺨을 맞으면 덜 아픕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냥 뺨을 후려치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만 지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FTA 의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FTA를 조건부로 찬성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대책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전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사자들을 모두 빼 버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알아서 잘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들판에다 내팽개치

고 국회와 정부청사에서 다 주물럭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어서 한.미FTA로 인해서 피해 받는 기업이라든지 근로자, 농어민 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와 정치권이 모여서 협약기구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단기, 중장기 대책이 정말 일회성 땀질용 보상인지 아니면 정말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보상인지를 당사자들이 판단하고 또 당사자들을 설득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미FTA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국회비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계속 사회불안의 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한.미FTA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분은 한 번씩 1분의 기회를 가지고 계시고,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가 2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협상은 서로 균형 있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국내보존대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보존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당장 피해를 입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분히 모아서 균형 있는 대책을 만든다는 것이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고 앞으로 더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단기대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동안 대책 나온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투융자 123조원뿐만 아니라 취약분야에서 체질개선 12조원, 경쟁력강화 7조원, 피해보존직불 1조 2,000억원과 같은 장단기적 대책, 그리고 체질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대책을 같이 모아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드느냐에 지혜를 모아야지, 지금 협상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거꾸로 다시 돌려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동시에 이러한 FTA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FTA는 피해보상대책과 FTA 비준을 한보따리에 묶어서 국회에서 비준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지난 정권에서 한.미FTA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이번 정권에서는 견제세력을 자처하시는 통합민주당에서 한.미FTA의 문제를 굉장히 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한.미FTA가 실행되면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로 농어촌의 문제와 의약품, 방송 등 서비스 분야가 거론되었습시다만 실제적으로 사법부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조 개방을 위해서 로스쿨제도를 지난 정권에서 도입했습니다만 로스쿨 제도가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이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통과시키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본안심사, 심지어 헌법소송까지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 지적재산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버티고 있는 산업구조를 보면 군산복합체 아닙니까. 군수산업 문제와 금융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문화 쪽에 대단히 강세를 보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이런 조건에서 이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미국이 재정적자, 무역적자, 쌍둥이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꺾임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 꺾을 말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의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 반드시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마지막 1분 반론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FTA가 구체화되면 생활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과거 정부, 지금 한나라당이 FTA를 지지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제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미국의 어떤 문화의 압도적인 우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제화, 세계화가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남의 지적재산을 함부로 복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창의적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제약 업계 같은 경우에는 제약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 같습니다. 특히 FTA와 관련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과의 대화라든지 정책대응 같은 것은 참으로 중요한 대목인 만큼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끝으로 1분 발언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중지를 모으신다고 자꾸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합니다. 제가 수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에 농업부문의 생산감소액 예상치를 당초 7,000억원이라고 발표했었는데 2007년 말에 발표할 때에는 이보다 2,000억원이 작은 6,698억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환율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 예상액이 줄어든 것만큼 높아져도 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운 데 이런 수치를 내놓고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투명성을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여론을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몰아붙이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정치에 도전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입국입니다.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점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더라도 재벌중심의 어떤 수출 국가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온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국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관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농어업 이런 부분들도 수출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취약부분을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됩니다. 말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중소제약 업체가 어떻게 세계적인 제약업체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말로만의 경쟁력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피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미FTA 국회비준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으로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문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2007년 국내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수준이나 지역, 계층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교육의 위상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각당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은 추첨순에 의해서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서울특별시 의회 교육 분과위에서 학원 24시간 개방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표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서울시 의회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 증가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공교육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정책이나 행태도 차단하겠다,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교육공약의 세 가지 전제라고 한다면 사교육비 불안을 악화시키거나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실용적 방안으로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이 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 만족은 두 배로 하되 사교육비는 반으로 줄이는 정책공약을 구현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중 후보** : 먼저 궁금한 것이 서울시 의회의 잘못된 결정을 한나라당에서 거절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의회에 통과시킨 압도적인 다수의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중앙당과 지역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교육의 자율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은 매우 좋은 의미인데 자율성이라고 하는 말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율성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도대체 교육 자율화를 해서 누가 덕을 보느냐, 서민은 피해자입니다. 교육 자율화를 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사학재단과 부자들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를 많이 만들면 사교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열입니다. 그래서 자율화로 가는 것은 시장에게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그러면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제가 모두발언 때 저희 자유선진당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경제적인 능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교육비에 투영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견제 세력을 하겠다고 하는 통합민주당이고, 그것에 일조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야 지방도 살고 교육도 삽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전국단위 학습의 교과만 관리하고 장기적인 인력수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알겠습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한나라당에서 공교육을 이야기하니까 무엇이냐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민영화하고, 걸핏하면 민간이 잘 되어야 된다, 또는 대기업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한나라당이 공교육을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와 닿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자율화 정책은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율화가 아닙니다. 바로 사학재단의 영업의 자유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교육을 시장 만능주의에 맡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설립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진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생각입니까?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될 이런 교육에서 조차 시장만능주의로 접근하자, 그래서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사교육비가 더욱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침을 이명박 정부가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교육정책도 그렇고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교육부는 처음부터 영어교육도 그렇고 일관성을 흐트려서 국민들한테 혼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제도가 효과적이라고 하고, OECD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필란드와 한국이 항상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육은 작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합민주당에서는 지금 되어 있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그대로 잘 보완, 발전시키면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재능에 맞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사전에 검증하자는 입장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한나라당이 집권한지 2개월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뿌리깊은 교육의 문제를 마치 한나라당이 다 잘못된 것 같이 매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참 회한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의회를 물어보시면서 한나라당이 만든 정책이었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한나라당이 다원화되어 있고, 한나라당 내에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원화되어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자율화가 무엇이냐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평준화가 과연 우리나라 공교육을 제대로 발전시켰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3불정책이라는 것을 표방했습니다. 고교등급제라든지 본고사, 기여입학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불정책 실시 후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제가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립학교는 국립학교답게 공공성을 제대로 갖추고,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답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다운 것이 바로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기존의 영어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서 국제화에 걸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 내자는 차원에서의 영어 공교육 강화입니다. 지금 사교육비가 20조원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방예산에 맞먹고, 교육예산과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50조원이 넘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 전 세계 100위에 들어가는 대학이 몇 개나 됩니까? 효율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잘 못 사는 집에 똑똑한 어린 자제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지혜를 듣기 원합니다. 다음은 어느 분께서 말씀을 이어가시겠습니까?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인수위를 받으면서부터 영어교육 문제

를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과 논리를 일으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든, 불어든, 다른 나라 말이든 간에 언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 논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영어 몰입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혼선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나 하면 자기 사고, 자기 판단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공교육에서 교육시켜도 얼마든지 국제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영어를 미국 사람, 영국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켜서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자기 자녀들이 국제무대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어떻게 하면 키우는가를 오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지금 송민순 후보께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학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심입니다. 21세기 교육은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유치원 교육, 영아 교육 그다음에는 평생교육까지 근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연계되어야 하는데 유치원 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어떤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육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교육이 빌 '공'자 공교육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지난 실정을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해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해찬 세대라고 해서 교육개혁 한다고 과거 10년 동안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장 많이 불행해 하는 세대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교육은 정권의 야욕에 눈이 멀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홍보효과로 쓰면 안 됩니다.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통합민주당만이 아니라 한나라당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영어 몰입교육, 개념도 모호하고 그 발언이 있자마자 전국의 사교육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실명제를 해서 그와 같은 정책을 잘못 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공직에 머물 수 없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자유선진당의 바람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 평준화가 기업을 망쳤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지

금 평준화를 실시한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평준화를 통해서 오히려 교육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연방제 형식의 지방자치까지도 자유선진당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은 철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육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자아실현의 개념도 있는 것이고, 인간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교육은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교육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류대를 가야 되고, 일류대를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대학 서열체계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어떤 해법으로 풀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특목고, 자사고를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서열화를 낳게 되고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과외비를 들이고, 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서열, 대학입시제도를 어떻게 깰 것이냐,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유기적으로 봐야지, 교육 내적인 문제로 좁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지금 한나라당은 미국식 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국공립학교는 가기 싫어하는 학교,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학교가 미국이고, 사립학교는 돈 많은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시스템인데 바로 이런 미국 방식의 교육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등록금도 한해에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한해에 수천 만원씩 등록금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교육, 특히 공교육과 관련해서는 유럽방식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육까지도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자고 과격한 주장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방향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3불정책으로 사교육비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3불정책을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폭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더욱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저희 창조한국당은 교육에 산을 GDP의 7%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해야 사교육비로 빠져나가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여야 가구마다 쓸 수 있는 돈이 남아서 소비에 지출할 수 있게 되고 내수시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경제에도 좋고, 교육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식으로 양극화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 교육공약의 기본 전제는 사교육비를 늘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식 자유주의,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교육에 있어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는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교육을 받을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제사정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장학제도 라든지, 지금 자립형 사립학교만 이야기를 하신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숙형 공립학교를 중소도시, 낙후된 도시, 지방에 먼저 150개 육성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학교는 재단의 건학이념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이스터교라는 것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화가 아니라 다양화, 창의성,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어 공교육과 관련해서 인수위 때 그런 몰입식 교육 문제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진위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고 정치 쟁점화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원수의 나라의 언어를 배우겠다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 기왕 영어 교육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EBS 영어 전용방송이라든지, 영어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특히 영어 원어민 교사를 농어촌에 먼저 배치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자율화시켜서 창조성, 다양성을 누리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공약의 기본내용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지금 우리 학교교육을 보면 상당부분 학생들이 인성이나 지성보다 시험을 어떻게 잘 치는가를 배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보면 교육방식이 많이 다르다, 시험치는 기술을 배우는 것 같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시험제도와 상관이 있는데 학교에서 모든 것을 성적순으로 잘라서 좋은 대학에 가고, 못 가고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선진국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서 몇 등을 하고, 점수를 어떻게 받았느냐보다는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무슨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사회활동을 위해서 또는 전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잠재적 능력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를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내신 성적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잘 발전시켜서 학생들에게 시험치는 기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인성, 지성을 키워서 대학에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더 열심히 해서 지적인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에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제도를 학업 성취도, 능력의 성취도를 측정해 보면 국제적 평가에서 한국이 필란드와 같이 늘 상위에 올라가는데 그러한 장점이 있는 만큼 그 장점을 살리면서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그냥 없애서 새로 바꾸자, 검증되지 않은 것을 바꾸는 것은 조심하자, 오히려 학부모들과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 저는 요즘 학생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고, 사람이 사는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21세기 산업은 창조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굴뚝산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조적 산업에 맞는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교육체계, 교육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 교과 과정도 대폭 바뀌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감성적 능력이라든가, 몸의 능력이라든가, 창의적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교육내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입시제도는 철저히 바꾸지 않으면 서열체계라든가 사교육비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입시제도를 철폐시키는 것을 정기적으로, 고졸업자자격시험만 보고 혹은 내신을 통해서 어느 학교라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반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무상교육의 문제로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을 대학까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만 재정문제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갈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집중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사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등록금 상한제를 내놓으니까 다른 당도...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남은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서 창의성, 수월성 등 좋은 단어들을 나열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이 없을까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교육세가 195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세가 그동안 목적세로 있다가 지금은 영구세로 되었는데 목적이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얼마가 거두어져서 어떻게 쓰였는지 유권자 여러분에게 공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공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신명이 나와야 하고, 신명나는 교사가 가르칠 때 학생들의 창의성이 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선진당에서는 OECD 수준에 맞는 교사 대 학생 수준의 비율을 유지할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연결해서 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세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목적세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데 전용하거나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야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교육세가 그렇게 쓰였다면, 그리고 국회에서 견제세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재정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교사들이 신명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첫째, 일당 교사들에게 행정적인 업무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방분권이 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사들이 급변하는 21세기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세로 상당부분을 교사 재교육, 학위 받는 것, 해외연수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적인 정책을 법률과 연결시켜서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저희 창조한국당의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기회균등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재정문제때문에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무상교육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또 그럴 만한 국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민들이 가장 살기 어렵습니다만 특히 40대, 50대 가장 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까지 당장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불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본고사라든지 또는 고교등급제라든지 기여입학제가 부활하고, 허용해서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어들겠습니까? 오히려 더 폭등합니다. 지금까지 3불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교육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대신 학력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국가학력평가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상향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인재가 전부 서울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 대학교에 지역별 인재를 의무적으로 입학시키는 기회균등선발제를 이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지방대학교발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20개 대학 정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공동학위제 같은 경우도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가 2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활용하시겠습니까?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자는데 제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강화해서 귀족교육을 만들어내는 정책에는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교육비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가 7배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처음부터 차등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공교육을 강

화해야 하는데 공교육에 있어서 정부가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고, 이 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무엇인가 될 것처럼 아주 조급한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질 있는 교사를 더 양성해야 되고, 과목 등 차곡차곡 바뀌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갑자기 바뀌어서 줄속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교육제도를 급복하게 바꾸는 것은 정말로 국가적인 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교육을 하는데 자기 정신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에 등록금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등록금 후불제, 즉 저렴한 이자를 가지고 등록금 용자를 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못 받는 경우는 막습니다. 우리가 이자율이 상당히 높는데 이자율을 현실화해서 등록금 후불제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교육문제에 관해서 1분씩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의 전제로 사교육비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잠재적 능력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학입학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제 같은 것을 고려하고 있고, 영어 공교육에 있어서 세계화되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인 우리말을 잘 해야 되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교육부터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무상교육정책 공약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 공약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교육복지, 교육공약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으십니다. 미래 소득과 연계된 학자금 대출제도가 한나라당의 등록금에 대한 공약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 한나라당과 민주당 비판 좀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2008년도에 학자금 용자 이자보전예산 1,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자금저리용

자제도 폐지했습니다. 민주당은 등록금 인상 방조했습니다. 사학재단 눈치 봤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법안심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정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들이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 상한제 도입하겠다, 후불제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락가락 한 태도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민주노동당은 2006년 11월에 등록금상한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록금 문제를 민주노동당이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지금 과거의 여권과 한나라당이 무상교육이라든지 기회균등이라는 현란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국회 마지막 날 폐회하기 3분을 남겨놓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담합을 해서 로스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일반 대학도 1년에 등록금이 1,000만원 시대입니다. 로스쿨은 그것의 세 배 정도의 등록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기회균등이고, 무상교육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 또는 10년 거치 15년 상환의 저리대출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학자금 대여는 다음 학기에 바로 갚아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제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자유선진당에서 창조한국당의 대학등록금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12대 주요공약 중의 하나로 대학등록금을 10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씀을 내놓고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돈 갚을 수 있는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10년을 거쳐서 상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저는 공자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님이 “천하를 얻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좀 제대로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공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자유주의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 정권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리 발언 하실 수 있는 1분씩의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 :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견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 두 당은 안정, 혹은 견제론을 주장했습니다. 보수정치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에 이제는 다시 속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안정론은 재벌 1%만을 위한 안정입니다. 서민경제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정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집권 30일이 마치 3년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게 100억원 이상 준다고 해서 견제 되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의 견제세력을 키워주십시오. 저희 그동안 잘못된 점 많습니다. 진보는 분열했습니다.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지지해 주십시오. 20석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 : 지금까지 한.미FTA, 교육문제, 대북 관련된 토론에서 보셨습니까만 한나라당은 실용주의라는 모호한 용어만 사용할 뿐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을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만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똑 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21세기 선진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부, 일당독재를 바람직하게 견제할 수 있고, 올바르게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기호 3번 저희 자유선진당 뿐입니다.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이념 경쟁이 없는, 국정을 파탄내지 않는 믿음직한 정통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걱정 없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유선진당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는 지역주의정당과 계급투쟁정당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전체 살림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자기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나 이념이라고 하는 좁은 틀로 나라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투표는 정책정당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가 지역주의 대결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모전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정책대결을 할 만한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

심, 진짜 경제 하려고 하는 문국현 후보가 대표로 있는 창조한국당입니다. 대운하 저지에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살려서 나라 경제 살리려고 하는 저희 창조한국당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국현 후보가 대표로 있는 창조한국당입니다. 국회로 보내서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서 정책대결 국회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 :** 국민 여러분! 통합민주당은 우리 국가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관련된 모든 나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는 반드시 국내 대책을 확실히 묶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제도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운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국과 같은 좁은 반도국가에서 종단운하를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자동차가 잘 가려고 하면 오른쪽 타이어, 왼쪽 타이어 모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균형을 갖추는 그러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 :** 한나라당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운을 되살리고 민생을 속속들이 챙기겠습니다. 창조적 실용주의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 사회의 중요 역할자가 되는 것이 한나라당에 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견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전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집단들이 새로 이름만 바꾼 채 견제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또 한나라당을 뺀떠나온 모 정당의 인사가 지역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일꾼을 뽑고 중앙정치의 일꾼을 뽑는 자리에서 대운하 반대를 논하면서 대운하로 정치 쟁점화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쟁점을 결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대운하는 총선 이후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일입니

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겸손하게 18대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오는 4월 9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정당을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다섯 분의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두 번째 시간은 내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그 첫 번째 토론회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2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마지막 시간 사회를 맡은 송지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 복지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초청된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선거에서 유효투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그리고 여론조사결과 정당지지율 5인 이상의 정당입니다. 그러면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후보자를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먼저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입니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입니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안녕하세요.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입니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반갑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입니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입니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토론은 물가안정 대책과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의제는 사전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방식은 각 후보자가 먼저 기조연설을 하고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 해 주시고, 만일 위

법발언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회자가 적극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조연설로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입니다. 먼저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부터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여러분! 외환위기 생각하기도 싫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귀에 익숙했던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우려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위적인 환율 띄우기, 금리개입에 대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물가폭등은 던져두고 성장지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와 강만수 장관이 흑시라도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에 빌미를 주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가 외환위기 당시에 담당차관이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통합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나라당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특히 서민 빈곤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당이 집권 했더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한나라당은 경제 안정과 더불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 빈곤층, 중소기업인을 위한 좋은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보셨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여소야대 하에서는 제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계속해서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3번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구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인 물가안정, 비정규직, 국민연금 문제는 중소기업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3년 동안 300만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직을 맡아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살아나야 안정된 재원을 마련하고, 물가안정이나 비정규직 같은 문제도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께서 저를 중소기업직능대표로 영입한 것은 바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호 3번 자유선진당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계속해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주 서울시청 앞에서 대학생들 7,000여 명이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등록금 1,000만원 내려고 피까지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등록금 150만원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 일은 1만 4,000명의 전경 보내고, 백골단 체포조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거지가 와도 적선은 못 해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정치적, 민주적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떼거리법이니,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하니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독재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 힘 있는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견제세력 그리고 진짜야당, 실력 있고 책임 있는 진보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이 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서민을 지키겠습니다. 젊은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중심, 진짜 경제, 문국현과 함께 하는 기호 5번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용경입니다. 민생파탄, 환경재앙을 불러오는 경부대운하를 반드시 저지하기 위하여 저희 창조한국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서서 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지요?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안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께 창조한국당은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해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정이나, 견제이나가 아니고 어떻게 국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릴까 걱정하는 사람 중심, 진짜 경제를 이루어낼 정책정당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을 기억하시고, 이번 정당투표에 꼭 소중한 한 표를 던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먼저 다섯 분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규칙은 후보자들께서 1분씩 여섯 번의 발언기회를 갖게 됩니다. 1분의 발언이 짧다고 생각되시면 2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두 번을 발언하신 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2분 발언시에는 일단 발언시작 후 50초 정도에 사회자

에게 신호를 보내 주시고,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도중에 사회자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무대를 보시면 각 후보자의 성명과 잔여발언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최근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물가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부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가잡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각 당의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순에 의해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부터 발언시작 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안녕하십니까.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되면 서민 빈곤층의 실질소득이 내려가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과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과 경제 활성화 대책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오른 외부적 요인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수입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다든지, 농수산물 가격이 인상된다든지, 달러 환율인상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해서 수입 물가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인하하고 또 비축물자를 방출하고 환율인상억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재지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있고,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52개 생필품에 대해서 물가가 지나치게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한나라당에서 물가안정을 시키려고 환율인상억제대책을 쓰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환율인상억제대책을 쓰고 계시다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무디스라는 신용평가기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을 올려서 물가를 폭등시키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유류세 10% 낮췄다고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니까 일주일 만에 오히려 값이 더 올랐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52개 품목을 잡으셔서 하셨는데 그 중에 44개 품목이 이미 올랐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이라는 것이 믿을 수도 없고 이미 실패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적인 정책에 집중해서는 실제로 물가안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좀더 길게 보고 실제 서민에게 물가안정을 할 수 있는 재벌들의 공간을 여는 일을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장면 값 값겠다고 해서는 물가안정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우선 저는 강만수 경제팀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지금 한나라당 나 후보께서는 외부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외부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제가 기초발언에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 내 정책 당국자들이 서로 의견이 갈려서 대단히 혼란스럽게 했고,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가를 많이 오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경제를 중심으로 표를 얻은 정부입니다. 당연히 물가오름세를 예측했어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 대책도 대단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940원대에서 한 달 만에 1,030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지금 자장면 값도 500원씩이나 올랐고, 1,000원짜리 김밥을 볼 수 없게 된 실정입니다. 아까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물가안정의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대처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다른 당의 대표들께서도 혼란된 정부의 자세를 질책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제가 더 하고 싶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규제완화들이 과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가안정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경쟁을 강화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서 재벌들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물가대책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첫째는 국민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을 우선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인내할 수 있는데 우선 단기처방 52개 품목을 집중관리품목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정책이 우선 문제이고, 물가에 미치는 모든 원인이 수입 원자재에 문제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경유 값이 휘발유 값과 맞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휘발유 값이 올라가면 승용차를 안 타면 되지만 경유라는 것은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필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저희 한나라당은 물가폭등의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님께서 이미 실패했다고 합시다만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환율이 인상됨으로 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환율이 너무 급등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환율은 외환시장의 원리에서 해결되는 것이 좋지만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조금 풀어서 개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도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달려 환율이나 외국에서 원유가격이 오르니까 할 수 없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았으면 더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같은 것은 단기적인 억제책으로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서민 빈곤층이 워낙 힘들니까 정부가 단기적으로, 교육지책으로 일단 52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물가가 내려가는 첩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강만수 경제팀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만 지금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대책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낮췄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가를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총선이 끝나고 나면 금리인하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를 끊임없이 한국은행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만수 장관 경제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수보다는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는 성장률 추구, 성장지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서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환율 정책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하는데 무디스, SMP 같은 곳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경제팀이 일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앞에서 관치금융타파 주장하고 장·차관은 작전세력 운운하면서 시장 개입을 해서 환율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솔직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값이 내년 상반기까지 오른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나라당의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필품 품목은 당장 내리지 않았다고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단기대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단기효과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성과를 보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제안합니다. 세가지만 확실히 잡아도 체감물가상승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잡아야 됩니다. 통신비 잡아야 됩니다. 기름값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민주노동당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자장면집 허리 졸라매게 하지 말고, 이미 돈 많이 번 정유사들 세금 좀 깎아주겠다고 하지 마시고, 돈 많이 모아놓은 산업재벌대기업, 정유사들의 공간 열게 하면 됩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풀니까? 자장면 값 500원 내리는 것보다 통신비 20% 한 달에 5,000원 내리는 것이 국민 경제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통신사는 공공제인 전파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국민이 팔아주고 키워주니까 성장했습니다. 국민 덕에 돈 번 기업입니다. 흥년에 공간 좀 푸는 것 못할 일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도 다 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대기업부터 먼저 양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등록금인하 문제, 지금 학생들이 150만원 만들자고 합니다. 국가가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하고, 젊은이들 생활 나아지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생활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정유사, 유류세 인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정유사는 이미 2004년에 단 70일 동안 담합해서 국민에게 끼친 손해가 2,50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는 가격인하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대기업한테 공간 열게 하십시오. 어려운 일 아닙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가 먼저 발언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아까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실 때 아직도 성장이나, 안정이나를

고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가안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선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외부적인 사안이 개선되었을 때 성장을 하셔야지,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성장위주의 수출을 빌미로 해서 성장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환율을 높게 잡아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제품이 싸다고 팔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삼성, LG의 휴대폰이나 냉장고, 혹은 TV들이 팔리는 것은 외국에서도 명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팔리는 것입니다. 환율을 조정해서 성장하겠다는 발상을 버렸으면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모든 공산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유입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원료의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원료를 사다가 제품을 만드는데 대기업에서는 원유가 올라가면 금방 원가에 반영시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을 사다 쓰는 제조업체들은 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가게의 원재료를 사다 쓰는데, 심지어 정부조달물자까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납품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인 처방을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단기적인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우선 과거 참여정부에게 한나라당은 세금폭탄을 퍼부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대비 6.2%가 올라갔습니다. 중산층 서민에게 세금폭탄이 아니라 물가폭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에게 했던 세금 폭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한 52개 품목이 특히 3월에 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결국 뒷북 행정사례로 보입니다. 다음에 입시학원이나 학원비에 5%, 3%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우선 영어 광풍이 아니라 영어 토네이도를 끌어다 3월에 이미 영어 해외연수 신청이 마감되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재정경제부, 공무원, 이명박 대통령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일단 뺄치방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네 분이 다 공격하시니까 제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강만수 장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경제정책은 강만수 장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만수 장관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했는데 저희 한나라당은 무조건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물론 성장잠재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절대 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 정부지출을 늘린다든지 금리를 대폭 낮춘다든지 해서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환율 정책을 쓴다고 했는데 저희는 고환율 정책은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 초에 환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한 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오르고 있고, 너무 급등하니까 어느 정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폭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부가 일부러 물가를 올리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할당관세를 낮춘다든지, 비축물자를 푼다든지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율 인상 억제도 노력하고 있고,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사재기 단속은 많이 하고 있고, 공공요금 동결도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등록금, 유류 값 인하하라고 하고 있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시장원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지금 대답에 대해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아까 시장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요인이 있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대기업들은 보통 이러한 물가의 요인을 중소기업에다 전가시키고, 하청업자에다 전가시켜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도 석유 값이 오르고 비료값이 오르면 이러한 부담을 떠안는

사람들은 주로 농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시장 관리가 대기업 위주의 시장 관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외부요인을 탓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좀더 농촌을 위한 시책을 가져 나와야 이러한 극복을 국민 전체가 화합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한나라당에서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의 문제이지, 인위적이 아닌가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 환율도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살릴 것이냐, 아니면 서민을 위해서 살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초점을 서민에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가안정 대책이든 무엇이든 효과가 있지, 지금 상황으로 가서는 전시행정일 뿐이지 사실상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입니다. 먼저 장기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곡물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경제성장 시킨다고 주장했던 한·미FTA를 하면 원자재 값 앞으로 더 오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제 곡물 값 올라가면 쌀도 못 지킵니다. 지금 밀가루를 주식으로 아르헨티나 등에서 폭동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수증진 해야 됩니다. 지금 지나치게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고용안정이 필요합니다. 서민이 먹고 살려면 일자리가 불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자리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영업도 삽니다. 대기업이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대기업은 꼭 닫아놓고 자기 것 지키려고 하면서 서민들 먹고 살게 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야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정부예산은 아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들겠습니다. 작년 국제 무기도입은 우리나라가 2위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산출한 자료입니다. 아직도 남북 대결이 완화상태로 가고 있고 북미평화협정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대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아껴야 됩니다. 방위비 부담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학생 등록금에 써야 됩니다. 서민들 고용안정에 써야 되고 물가안정에 써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야만 서민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오로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끝까지 갈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원자재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할 때 원자재 값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도와 중국이 급복적인 경제성장을 하면서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해외자원을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요즘은 곡물가까지 인상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28%의 자급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농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기업농을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넓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가서 농지를 확보해서 기업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려서 농지를 확보해서 곡물정책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등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12개국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인적자원을 잘 길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금 문제는 우리가 인적자원을 함양시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등록금을 용자처리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갚게 하는 방법으로 순환시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가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공공요금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과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정부가 어느 선에서 결정하느냐의 문제는 재정정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억제만 주려고 하면 정부가 재정지원 해야 하므로 부처가 증가해서 건전재정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 조짐이 보이니까 요즘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동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공요금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탄력요금제 실시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기업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관련 공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영실적에서 인센티브 결정기준을 영업이익률을 중심으로 했다면 영업이익률보다는 원가 절감을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

다.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공공요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도 KT에서 사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KT가 민영화되기 전에는 경영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윤창출을 얼마나 했느냐, 이익률이 얼마이냐, 그것은 경영평가에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이익창출에 더 중점을 둔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갈등요인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영희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는 확실한 잣대를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의 효율성, 특히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공 등 이런 국영기업의 경영평가에서는 이익창출에 압력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러한 국영기업의 인사에 낙하산 인사를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물가에 있어서 저희가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일생동안 자기네 봉급을 가지고 집을 살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주택 공급율은 107%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가주택 보급률은 60% 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촉발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강북, 강남을 통틀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서민 경제에 미치는 물가가 인상된 요인을 보면 조금 전에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으로는 물류비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유는 주로 산업현장에서 쓰게 되는데 경유 값이 휘발유 값과 맞먹게 되었으니 당연히 유통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생필품이나 제조업체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유사들이 유례없는 이익이 났다면 그러한 것을 정부에서 점검하고, 경유 값이 오르는 원인이 해외에서 오르니까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유를 수입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무엇인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을 줄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외 원자재를 확보해서 원자재 가격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처방으로서 관세도 인하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LPG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들이 쓰고 있는 차를 보면 LPG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안정적인 측면에서 전면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는 기회를 다 쓰셨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FTA를 추진할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외국에서 식량을 사다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쌀값이 오르고 우리 주 식품가격이 오르면서 저희 국민들은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소의 먹거리, 최소한의 안전판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FTA를 찬성하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으면 저희가 그 대책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보호해야 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는 2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한 가지 통계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6.8%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2%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사실 1974년 1차 석유파동 때, '80년대 2차 석유파동 때, '98년도 외환위기 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과 중산층의 당, 통합민주당의 물가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물가 문제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율을 적정수준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빠른 물가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통화정책을 통한 적정 유동성 관리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또 유통구조와 개인 서비스 산업규제를 완화해서 유통마진을 축소하고 경쟁을 촉진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국가차원의 장기적 식량, 원유, 원자재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분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유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생활을 압박하는 주요 생활비 안정을 위해서 지금 시급한 것이 전·월세 등록제를 도입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을 5%로 제한하도록 입법화 하겠습니다. 또 휴대폰 요금에서 가입비와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또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여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여당이 학년기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학년기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법을 제정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가 마지막 1분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서민은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이 이제 공간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통신비, 기름값 내리고 하청기업에게 이윤 나눠줘서 일자리 늘리게 해야 됩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이 같이 이윤을 나눌 수 있는 원·하청 이윤공유제를 민주노동당이 만들겠습니다. 한.미FTA가 계속 가면 농촌만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공공서비스도 무너집니다. 도시 서민의 삶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미FTA를 끝까지 막겠습니다. 정부도 무기 사는데 드는 돈 줄여서 대학등록금 낮추고, 사회복지제정 늘리는데 써야 됩니다. 한.미FTA를 막아서 농민을 지키고 도시서민 지킨 것이 민주노동당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수를 키우고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으로 새롭고 튼튼한 경제성장 동력 기반을 만들 정당도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서민 살림 지키겠습니다. 서민이 먹고 살 권리 지키겠습니다. 서민과 함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원가 상승요인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많이 전가시킨다고 하는데 저희 한나라당이 도급법을 고쳐서 지나친 전과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대학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민 빈곤층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장학금 제도를 많이 확충하고 국가보조금 제도 같은 것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빈곤대책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에서 보셨다시피 서민 빈곤층을 위한다고 했지만 서민 빈곤층이 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경제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회 안정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미FTA가 물가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

습니다. FTA를 하면 관세가 낮아져서 물가가 낮춰지는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오늘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첫 번째 주제인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여러 당에서 염려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심각한 우리 사회의 현안입니다만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제도 변화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대우와 임금은 정규직에 비하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순에 의해서 이번 순서는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우선 비정규직이 형성된 과정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IMF가 왔을 때 우리는 국가, 기업, 근로자가 다 생존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서로가 고통을 참고 지나왔습니다. IMF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언어자체가 없었고 임시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임시직이 하나의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2001년에 26%였던 것이 2006년에는 35.5%로 늘어나고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850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납니까? 여기에는 사용자측에서 선호하니까 IMF를 극복하고 나서도 비정규직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선 임금이 싸다, 둘째 노동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제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고통을 참고 지나 왔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2006년도에 비고용자,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생각하고 있는 제1의 과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79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자의 55.55%를 넘고 있습니다. 똑 같이 일해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63.5%밖에 안 됩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 줄이고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돈 좀 아끼려고 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근로의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고용원칙, 상시고용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견과 기간제 고용으로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 차

별이 심각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을 비례후보 2번으로 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국회에 보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아마 비정규직 문제는 누구나 다 축소하는 것과 차별해소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별을 없앨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같은 임금을 받고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8만원 받으면 비정규직도 8시간 일하면 8만원 받고, 또 4시간 일한 근로자는 4만원 받으면 공정임금원칙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인권조합이나 인권단체 등 제삼자가 차별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바꿔야 됩니다. 2006년도 비정규직보호법에 비정규직이 차별을 호소하는 것 중 차별시정청구권을 본인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주 단체와 한나라당이 끝까지 고집한 결과인데 결국 비정규직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결국 해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본인 또는 본인을 대리하는 노조나 인권단체들이 차별신청 청구권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교육을 시켜 왔더니 취직도 하지 못하고, 그나마 8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자식이나 남편이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이 8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4%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 문국현과 함께 하는 창조한국당은 850만 명의 비정규직을 반으로 축소하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면 같은 봉급을 받아야 된다는 평범한 진리는 저희 창조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어떤 일자리가 2년 동안 유지되었다면 그 일자리는 2년이 지나고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하나의 숫자로 보는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량해고, 대량고용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노동계와 기업계가 모두 반대한 대량해고 사태를 몰고 온 비정규직법을 이 자리에 서 있는 한나라당과 그 당시에 우리 당이 통과시켜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을 시행한 후 비정규직이 더 양산된 사태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으로 개정해서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문국현과 함께 하는 창조한국당은 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저희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있고, 고용불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생산단가가 높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문제가 많고, 오히려 실업을 양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규직 전환보다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가 비정규직보호법 책임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사실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을 2년 정도로 길게 해서 2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사내 하청으로 돌린다든지, 도급형식으로 굉장히 편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규모나 이런 것이 꼭지점을 돌아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6년도부터 비정규직 증가추세가 정체가되었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인 감소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법 정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

장 우려됩니다. 그래서 차별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직이 줄어드는 대신 용역과 도급파견 같은 것들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집단적인 외주 하청화의 경우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해서 용역이나 도급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습니다. 또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접고용 전반에 대해서 노동부가 통합 관리해야 되고 노동위원회에게 조사권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서 퇴직금, 상여금에서의 소외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해야지, 혹시라도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강력하게 막아내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먼저 한나라당에서 국제 경쟁력때문에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IMF를 거치면서 비용을 줄인다고 고용 줄이고, 신규 채용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아서 사내 유보금이 10대 그룹만 해도 788%라는 것이 평균 통계입니다. 대기업 국가는 아직 충분합니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하청 이윤공유제 해서 중소기업에 좀더 돈을 많이 주면 중소기업도 여전히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충분한 공간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경제성장만 하겠다고, 국제경제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서민들은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의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왜 통과 시키셨습니까? 지금 시행 1년도 못 되었습니다. 양산되고 있고 차별시정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면 왜 통과 시키셨습니까?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바꿀 것입니까? 바꾼다면 근본부터 바꿉시다. 지금 민주당에서 차별시정청구권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차별시정청구권은 물론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 자체가 중간착취라는 것입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협상해 봐도 안 되니까 사용자와 진전이 없어서 노동위원회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노동위원회가 다른 사용자와 해라, 이 사용자는 적법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행정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사용자 맞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것입니다. 코스콤 비

정규직 노조 천막 철거 했습니다. 몰아냈습니다. 이라고도 어떻게 비정규직 보호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법개정 이야기 합시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 문제의 지적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 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가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보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비정규직 자체를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문국현과 함께 하는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정규직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보다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88%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체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희 창조한국당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해서 사람으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을 높이고, 세계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의 상품이 해외에서 더 잘 팔리게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아까 한나라당에서는 생산가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동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참으로 단순한 접근방법이라고 봅니다.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분배 중심에서 인적자원개발중심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노력 개발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국현과 함께 하는 창조한국당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문국현 대표는 유한킴벌리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쓰는 3조 3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었습니다. IMF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을 하나도 해고시키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과 휴식의 기회를 줌으로써 IMF를 멋지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을 하고, 휴식을 줌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하고 또한 휴식을 통해서 산재를 줄여나갔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직화 되어 가는 과정은 전환목표제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충격의 완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에 보면 금년 이내에 300인 이하 작업장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5인 이상까지 적용되는

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유한킴벌리 4조 2교대는 참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6.25 사변 부산 피난 시절 때 좌변식 변기를 원조물자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불편해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좌변기 위에 올라가서 쪼그리고 볼일을 보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한킴벌리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 제도는 참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휴식을 주어서 생산력을 늘림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이런 제도로 가기에는 이르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오늘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만 조금 전에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가 생산성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민노당에서 왜 대기업들이 공간을 풀지 않느냐,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동안 왜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축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기업 정서라든지 또는 민노당이 지지하는 민주노총들의 불법폭력 파업 같은 것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들이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높은 규제도 물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을 통과시켰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이 통과에 동의한 것은 참여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실 한나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느냐입니다. 저희는 기업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하라고 할 수 있

습니까? 비정규직을 쓰는 데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정규직화 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란 이런 것입니다.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할 때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의 5% 정도를 세액공제 해 주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른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한나라당이 추진할 것들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지금 여러 후보가 손을 드셨습니다. 먼저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지금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사회의 신분처럼 구조화 되어 버렸지만 솔직히 인정합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관치, 정경유착, 불법경영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았지만 취약계층의 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 했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가 법으로만 다 해결 될 수 없고, 동반노력이 절실하다니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 은행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안정화 하니까 직원들의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해당 기업들의 부담이겠지만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범적인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사회적으로 지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반노력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등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한나라당에서 노사관계가 불안해서 기업이 투자를 못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기업이 투자하면 지금 상황에서 바로 고용이 늘어납니까? 바로 서민 생활이 좋아집니까? 기업이 투자해도 지금 그 투자이익은 대주주가 가져갑니다. 외국 자본이 가져갑니다. 우리 물자가 차면 뭔가 흘러내려야 옆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빨대로 다 빨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투자 늘린다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용을 먼저 늘려야 됩니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 풀어서 중소기업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용 늘려야 됩니다. 비정규직 바뀌야 됩니다. 정부도 공공부문부

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이 따라오고 민간기업이 따라 옵니다. 노사관계 때문에 투자 못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제 주체를 몰아세워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비정규직 전환기금 만들겠다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입니다. 전환기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환기금을 대기업한테도 거둬들일 것입니다. 중소기업한테도 거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전화하시면 지원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중소기업은 손해 보지 않고 중소기업은 조금 더 편하게 전환기금을 사용해서 정규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률개정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차별시정 조항을 넣어도 근로자가 보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비정규직해고촉진법이고 차별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간제법은 사유를 분명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출산, 계절노동처럼 일시적인 필요가 분명한 때에만 기간제를 허용하도록 사유제한을 해야 일자리가 안정됩니다. 파견법은 아예 없애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것이 바로 파견법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파견업체가 잘라 먹습니다. 일자리는 사용자 말 한마디이면 날아갑니다. 파견제 폐지해야 합니다. 직접고용으로 바꾸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헌)**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가 답변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노사 관계가 불안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정규직화를 민노당이 들어서면 다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기업을 경영해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경영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추진은 저희 한나라당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적용 대상 확대도 저희 한나라당이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차별청구권 시정 보호대책도 저희 한나라당이 한노총과의 타협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아까 저희가 유한킴벌리에 3조 3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꾼 사례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4조 2교대로 바꾸어서 2교대는 계속 근무하고, 한 조는 휴식을 취하고, 한 조는 계속해서 학습을 받는 이러한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학습을 받음으로 인해서 직무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또 한 조는 계속 쉬므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이윤을 올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CEO들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흐르듯이 열심히 일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의 시대에서는 어떠한 아이디어로 어떠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의 이러한 전형적인, 창조적인 이러한 근무형태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하고 해고를 하지 않아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대운하입니다. 건설현장에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운하를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근로 여건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면 다 해결됩니다. 정규직도 모자라는 판에 자리가 모자라면 누가 비정규직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탄생한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보면 전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 3금분리의 문제라든가 전부 대기업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대기업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도 정규직화 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한몫에 하면 충격적인 완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전환제도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파견근로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만 없애도 8.5%의 임금상승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현실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정규직화 문제는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하고, 지금현재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만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쳐다만 보고 있

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고사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1997년도부터 5년간 IMF 때 일자리 창출한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약 2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대기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유한킴벌리 사례를 드셨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대부분의 대기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이지만 전체적인 기업에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7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에는 인력스카우트가 대단 했습니다. 그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번 이야기하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비정규직들이 차별받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과정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추진한다든지 근로자의 차별시정청구권을 적극 보호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한나라당이 반드시 할 것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1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후보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에게 몰아주기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를 무력화시킨다든지, 금산법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취업자 증가폭이 최근에 21만 명 내외에 그쳤습니다.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애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확대입법 계획을 공헌했습니다. 3월 13일 노동부 업무보고 당시에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또 일부 업종에 한정하고 있는 파견허용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입법을 18대 국

회초반에 해치우겠다는 입장인데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불안해 질 것입니다. 역시 사회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업친화정책이 견제되지 않을 경우 안정화되어 가던 노동시장이 더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통합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토론이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겸 1분간 마지막 발언 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민주노동당에는 기업 경영한 사람이 없습니까? 노동자는 기업 경영 모릅니까? 언제나 반대만 합니까? 기업 망하라고 합니까? 누구보다 일자리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입니다. 편견이십니다. 일하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지지 얻지 못합니다. 한나라당의 진정성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간위탁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먼저 바꾸십시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한테 끌고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두 번째 코스콤, 이랜드, 길용전자 비정규직 사업장 2년, 3년씩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성 믿겠습니다. 비정규직 법안 개정안 1호를 법안으로 내겠습니다. 기간제 사유제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법 폐지안 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하겠습니다. 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직접 단판 짓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번에는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가 답변 겸 마무리 1분 발언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민노당만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도 노동자들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노당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몇 분이 대기업만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기업 규제완화는 두 가지뿐입니다. 출총제 완화, 금산분리완화입니다. 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 시키

자는 것이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급법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번 비정규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보다는 조금 더 안심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후보들께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경제, 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끝으로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이 어떤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국민연금이 이른바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당국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4년에 연도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은 많습디만 실제로 연금제 개편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이해 그룹간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순에 의해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더 내고, 돈 없는 사람은 좀 덜 내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입니다. 장애인, 어르신이라도 기본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로부터 받는 임금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갈론이 나오고 있지만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고갈되지 않도록 5년마다 추계해서 다시 연금재정을 안정화 시키도록 국민연금법이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2003년에 시작했고 올해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보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드리도록 기초노령연금 제정했습니다만 지금 8만원 수준입니다. 용돈도 한참 용돈 수준입니다. 25만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입니다. 지급대상도 역시 80%로 늘려야겠습니다. 사각지대도 없어야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어느 당이 반론하시겠습니까?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끔찍한 범죄나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가 시장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두운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반생활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든지, 혹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연금 고갈 문제는 우리나라가 노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성의 출산율이 1 정도로 아주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작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해법이라고 나온 것이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답답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꿈을 가져야 해법이 보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낮은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가가 보육책임을 지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튼튼한 행복한 사회, 집값 마련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서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의 연금해법의 접근방법이 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 문제는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사회 보장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설계할 적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덜 내고 많이 받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47년에 고갈된다고 해서 작년에 다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아까 민노당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만 5년마다 보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각시켜야 될 문제가 노인 장기요양 문제입니다. 셋방 사는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 한 분이 치매에 걸리면 한 분은 붙어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부모 병간호 하는 것도 오래 되면 효녀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부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에 한해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그러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사회보장제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난한 분들을 도와주는 공적부조제도가 있고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아원, 양로원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88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 당시에 잘못 고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안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장황하게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국민연금재정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와 사각지대 해소 문제입니다. 재정 안정성 문제는 심각했는데 작년에 법을 고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고갈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의 약 70%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80%로 늘리더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문제, 장애인 문제도 저희 한나라당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어쨌든 작게 내고 많이 받는 태생적 적자구조가 연금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이라는 연금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기금운영체제에도 문제가 있고, 2060년 이후에는 기금고갈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은 사실상 절반의 성공일뿐입니다. 왜냐 하면 9% 수준의 보험료를 동결했고, 급여를 낮춰서 2028년까지는 40%로 인하하게 됩니다. 그 이상 더 낮추면 안 됩니다. 지금 여전히 기금운용체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 60%에게 8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자는 것을 이야기하면 전체 틀을 바꾸기보다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가 금년에 시작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혁원칙은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가입자의 이해와 처지에 맞춰서 계층별 맞춤형 연금제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의 안정화 문제를 위해서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최저 1등급에서는 22만원, 최고는 45등급에 360만원, 이렇게 상한선의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2년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비례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 연봉자도 사실 36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줄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노령연금이 앞으로 2028년까지 소득의 10%를 올리는 것이 목표치인데 이것을 18대 회기 중에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 10% 수준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저는 국민연금에서 가장 유지해야 될 기본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국민연금이 제대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절반은 자기소득에 비례해서 받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전체 소득평균에 따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면 조금 더 내는 셈이 됩니다. 조금 덜 받고, 반대의 경우는 역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균등지수의 역할입니다만 균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낸 보험료에 비해서 비례해서 받는다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국민연금의 사회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개정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연금이 시작된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원래 연금이라는 것은 40년을 기본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연금은 이미 100년 되었습니다. 아직 연금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기 어려우신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드리고 있지만 너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빨리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지 법률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1년에 0.5%씩 올릴 것인지를 정하고 25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되는 분들이 2,4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1,100만 명 정도는 보험료를 못 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이 있어서 연금보험료 낸 분들끼리만 소득 재분배하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양극화가 노후까지 심해지는 것입니다. 젊어서 돈 좀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지만 노인이 되시고, 어르신 되시고 은퇴하실 때 되면 계급장 떼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가 기초노령연금 확대문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것, 연금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가 답변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원래 국가재정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조세라든지 공적부조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은 원래 낸 만큼 받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금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내는 것은 소득의 9%를 내지만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받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분간 재정건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서 상층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3층구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현재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3층구조로 간다고 하면 기초연금 깔고 소득비례연금 가고, 개인연금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이 되는 데는 찬성하지만 국민연금을 낸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도 나이 드시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비례연금만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소득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되고, 그 보험료가 지금은 균등하게 가고 있지만 그것 자체를 누진방법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이 논의를 이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기초연금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비례연금은 어느 정도 지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국가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한나라당은 굉장히 소득 재분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 재산세, 상속, 증여세 모두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 50% 이상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50% 이상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로 하여금 더 내게 하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부자들이 도둑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조세제도나 사회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말씀하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다음에 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에서도 연금가입자의 기여도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금보험을 내는 사람들 자체 중에서도 체납율이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 연금 가입자 기여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창조적이지 못한 해결방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적립금이 약 220조원 정도 되는데 연이율이 7%를 밑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일랜드, 스웨덴 등 선진국들에서는 14%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밖에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연금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 5번 창조한국당에서는 이를 위해서 기금운영위원회를 국민 기구화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관치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됩니다. 아까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창조한국당의 방침은 8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2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재 40%에서 60% 정도로 올리게 되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대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비리, 다단계 하청의 부조리를 척결하게 되면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자금이 50

조원, 여기에는 건설현장의 예측결과 세재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헌)**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이용경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의합니다. 220조원이나 되는 기금운영을 투명성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서 선진국의 14% 정도로 올려야 되고,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 의해서 경영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것을 지금은 같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민노당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다시 점검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헌)**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급여를 줄이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고, 가입하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국가재정으로 지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경제발전을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 노년세대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해서 기초노령연금의 전환이 전제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을 당장 시행하려면 매년 10조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서 법인세 인하, 대기업 감쇄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대선 식의 많은 공약을 주장했지만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정확한 재원마련 대책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 (방송인 송지헌)**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우선 기초연금은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5%이고 8~9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에 의하면 2008년도까지 10%로 올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만원의 두 배이면 20만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영희 후보께서 재원은 많이 있는데 감쇄정책을 오히려 취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쇄정책을 취하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재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까만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저서 공단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 정부가 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저는 국민연금 운용문제에서 독립성 문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정부나 증권이 떨어진다든지 할 때 기금을 넣어서 증권을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머니 돈, 쌈지 돈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기금운영체계에서 기금투자성과관리, 준법감시 등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23일 인수위에서 재경부차관이 발언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투입 후 펀드발생시 한국은행이 자산운영사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운용체계를 훼손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신용불량자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니다만 130만원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불자를 해결할 것이며, 결국은 국민연금을 채무탕감에 쓴다면 고갈을 앞두고 국민의 불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연기금 운용의 계획에 대해서는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성, 효율성은 수위가 7%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같이 14%로 수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의를 하자면 이 제도는 다충보장제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초연금은 모든 분에게 해당이 되고, 소득비례연금은 일정한 부분에 비례해서 자기가 받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에 보태주는 제도가 어떠냐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결국 정답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미룰 수도 없는 문제가 국민연금 개선입니다. 다음은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

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국민연금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사회의 안정망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장경제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과정에서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승자 독식에서 오는 사회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의 운용이 더욱 더 중요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발상이 나오는 가운데 연기금을 다른 데 전용해서 사회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생동안 벌어서 노후생활에 안정을 찾고자 하는 기금을 함부로 전용하는 정부의 접근방법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원래 어르신들의 80%까지 기초연금 드리자고 했습니다. 지금 법안은 60%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원래 2018년에 10%까지 드리는 법안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연도별 증가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가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대로만 하면 2017년까지 계속 8만원 드리다가 2018년에 10% 드러도 법 위반이 아닌 상태입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재원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는데 지자체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노령연금 드려야 된다고 다른 지원금 없애줍니다. 결국 조삼모사인 것입니다. 재원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연금을 더 내시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십니다만 이렇게 가면 오히려 거둬들이는 돈보다 들이는 돈이 더 큼니다. 왜냐 하면 연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1을 내면 5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직장 가입자들의 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더 거둬들이더라도 연금의 상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고, 실제 보험연금재정이 더 안정되게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기금운영문제입니다. 기금운영 이전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거의 결정해서 가는 방식으로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이 단체가 안정화되면 가입자 단체, 가입자 단체가 추진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기금자체도 굉장히 거액입니다만 주머니 돈, 쌈지 돈 안 됩니다. 그리고 고수익, 고위험 안 됩니다. 안정된 곳에 사회책임투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만

드는데 직접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첫째, 잘못 설계되어 있는 기금은 앞으로 고갈되기 전에 개정해야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후손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다층보장 제도로서 기초연금과 소득에 비례해서 기금을 운영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우선 오늘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특수직 연금 개혁 방안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의 자체를 꺼내는 자체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선거철에 힘듭니다. 우선 부분적인 것이지만 가입자가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을 탈퇴하거나 할 때 반복되는 경우 시기가 다 차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수급자 편입을 위해서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저부담 고급여의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제도들도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대 국회 내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사실 공무원 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재정추계 등을 고려해서 빠른시일 내에 합리적인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논의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 규제개혁을 이유로 해서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의 공공성 파괴, 식품안전보다는 산업에 치중하는 정책방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복지를 성장의 장애물로 취급하는 인식들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정되고 균형 잡힌 복지정책이 곧 경쟁력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복지정책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 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복지지출 배분이 사실 OECD 평균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복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을 확대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나라

당 나성린 후보가 마무리 말씀 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민노당 이정희 후보께서 기초연금확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법에서 보면 국민연금 전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현재 60%에서 70%까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 80%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론화를 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70%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과 80%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을 나중에 곱곱이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제한을 풀려고 합니다. 민영화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주식투자 비율도 높이는 식으로 제한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으신 분들이 이용경 후보, 김용구 후보, 나성린 후보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먼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아까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에서 유한킴벌리의 사례는 다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대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한킴벌리뿐만이 아니고 포스코에서도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유한킴벌리에 와서 배우고 지금은 포스코에서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다 통틀어서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꿈 가지면 이런 해법이 보임으로 인해 전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지금 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사각지대 해소 문제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65세 이상 70%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받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돌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중증장애인 문제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을 가진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은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에 부모들이 가입할 때는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잘 연결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노인의 중증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노인의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서민일 경우 서민이 부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책임져서 해결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민연금을 같이 개선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께서 열심히 토론에 임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토론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발언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1분 30초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 중심, 진짜 경제,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창조한국당은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존 정치에 식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꿈을 가져야 해법이 보입니다. 창조한국당은 꿈을 가진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은 지역이나 이념논쟁에 의존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창조적인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고,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민 경제를 위한 정책정당으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파탄과 환경 재앙에 따르는 경부대운하에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막대한 자원을 국민의 삶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은 사람이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문국현과 함께 하는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을 믿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투표에서는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을 꼭 찍어주십시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 국민 여러분! 이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보도 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노사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손님이 없냐는 택시기사도 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경제성장의 기대심리가 높아져 주가는 3,000까지 올라가고, 임기 내 5,000도 가능하다는 이명박 후보의 무지갯빛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지금 국민들의 한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고,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경제를 살리는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힘 있는 야당이 되어서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과 기를 모아주십시오. 기호 1번 통합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한나라당 나성린 후보** :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특히 서민 빈곤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은 저희 한나라당이 그러한 꿈을 실천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가졌음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올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연말에 가서 우리 경쟁 상대국들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희 한나라당이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출생세 폐지나 금산분리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대기업 투자활성화는 누구한테 이득이 되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서민 빈곤층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효과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저희 한나라당이 계획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저희 한나라당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9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 국민 여러분! 지금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

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는 대기업에 거의 해당되는 규제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절망감으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중소기업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뚝뚝하게 경쟁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개발을 무엇으로 합니까? 먹고 살고, 남는 자금이 있어야 기술개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60%가 대기업의 하청업체입니다. 임금이 올랐다고 임금을 전가시키고, 해외 원자재 값이 올랐다고 원자재 값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면 결국 어떻게 중소기업이 먹고 살면서 기술개발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기업 총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지가 맞지 않으면 팔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다린다는 자체가 결국은 폐업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정을 모릅니다. IMF 때 일자리 창출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약 2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만 대기업은 60만개가 줄었습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마무리 말씀 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 국민 여러분께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1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289명의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원칙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편에 서서 150만원 등록금,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 비준거부, 비정규직법 계약거부,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통합민주당과 다릅니다. 차별 대기업 공간 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기 사오지 말고, 주한미군 주둔비 대지 말고, 등록금 지원하고 연금지원 해야 한다고 속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 끝까지 막아낸 강기갑 의원의 투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본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의 독주 막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1% 특권층과 차별 대기업 말고 서민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10석보다 민주노동당 20석이 더 강합니다. 확실하게 한나라당 독주 막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서민을 지키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입니다.
- **사회 (방송인 송지현)** : 오늘 토론회가 정당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4월 9일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

립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 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세 차례의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초청 후보자토론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제5항 규정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구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MBC와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후보들을 좌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먼저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입니다.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입니다.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 반갑습니다. 한국사회당 오준호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민당 류승구 후보입니다.
- 시민당 류승구 후보 : 안녕하십니까. 시민당 10번 류승구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입니다.
-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 반갑습니다. 기호 13번 진보신당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기독교당 김명규 후보입니다.
- 기독교당 김명규 후보 :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기독교당 김명규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입니다.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 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입니다.
-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 안녕하십니까. 박형방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입니다.
-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 안녕하십니까. 기호 11번 신미래당 김호일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입니다.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 반갑습니다. 기호 14번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오늘 토론회 진행방식은 각 후보자의 기초연설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이어서 맺음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의제선정은 사전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일반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의제는 총 6가지이며, 각 의제별로 사회자의 질문에 1분 30초씩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만약 발언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또한 후보들께서는 제시된 토론주제의 범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에 이르는 발언은 절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주제를 벗어나거나 또는 위법에 이르는 발언이 있을 때에는 발언도중에라도 중지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 여러분의 기초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부터 기초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0년간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치유해 주겠다는 참된 인도주의를 표방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화할 정당, 실향민들과 탈북하여 동남아를 헤매고 있는 우리 동포 문제를 말 벗고 나서서 해결할 정당은 국민실향안보당 뿐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 서신거래와 고향자 고향방문 허용,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조속한 상환을 해결하겠습니다. 탈북자,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무력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을 우선시하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협력시대를 열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의 기초연설을 듣겠습니다.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젊은 정당, 한국사회당 오준호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금민 후보를 출마시켜 이명박 시대에 맞서는 진보대안, 새로운 진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장을 위한 성장을 넘어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운하를 파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경제가 아니라

창의성과 지식기반 경제로 가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에서 국가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서민 중심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천박한 시장주의를 넘어 생명이 중심이 되는 초록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호 15번 한국사회당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시민당 류승구 후보의 기초연설입니다.

○ **시민당 류승구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0번 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류승구 인사드립니다. 시민당은 공익우선, 안보우선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행정법, 선거법 등의 법체계를 민심, 민생, 민권이라는 국민적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삼민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육법전서의 절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권력과 자본에 의지한 공무원, 기업, 전문가들에 의한 작당주의를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작금의 국내, 국외적으로 산적한 경제적 위기론에 입각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창건 정부, 군사독재정부, 문민정부로 대변되는 정권들의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고대역사와 세계적인 전통문화 말살정책, 그리고 3차 작당주의로 비롯된 잘못된 법체계를 고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활용해 주십시오.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기초연설 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3번 진보신당 비례대표 김석준입니다. 요즘 저희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보신당은 데모만 하는 정당, 민주노총당, 친북정당이라고 비판받아 왔던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서 새롭게 만든 진보정당입니다. 저희 진보신당에는 제17대 국회에서 가장 일 잘 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 받았던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비정규직에 앞장서서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망가뜨릴 대운하 사업을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신당 기호 13번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기독교의 김명규 후보 기초연설 해 주십시오.

○ **기독교 김명규 후보**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안양의 두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 전 프로야구 선수가 돈 때문에 네 가족을 죽인 사건, 그리고 4년 전 유영철이는 부녀자 21명을 무참히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양주 소비량 1위, 인터넷 음란접속률 1위, 그리고 어린이 유괴사건만도 연 8,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당은 어느 정당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국가 정체성 혼란, 사회적 병폐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총체적 타락을 바로 잡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며 기독교 사랑 실천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가 1분간 기초연설 해 주십시오.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친박연대 대변인 송영선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530만표라는 역사적인 표차로 압승하여 탄생된 정부입니다. 그것은 좌우파정권, 10년 종식,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들의 진정 어린 바람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불과 한 달 만에 지지율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근면성, CEO로서의 결단성과 추진력 때문에 국민들은 표를 던졌는데 정작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뢰가 깨어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께서 4,700만 국민 앞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외 동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동반자와의 약속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동반자와의 깨어진 약속을 저희들은 바로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가 기초연설 할 차례입니다.
-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철주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외되고 방치된 전국의 1,000만 명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기호 12번 직능연합당 인사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자본과 권력의 상징인 대기업의 대변자가 있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법과 제도의 상징적인 중소기업의 대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이웃인 중개업소, 식당업소, 이·미용, 피부관리, 소규모 학원, PC방 등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변인은 진정 없었습니다. 직능연합당의 정당한 목적은 바로 이 분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정당만큼은 꼭 직능연합당을 찍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의 기초연설입니다.
-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영국의 노동당, 보수당은 2, 3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당은 사흘이 멀다 하고 당이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도 총을 맞고 서거하였고, 우리나라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도 총을 맞고 서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은 오바마, 힐러리가 대선 경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화당은 사라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은 특성 인물중심의 지역감정이나 부추기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흘이 멀다 하고 당이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이제 OECD 가입국, 세계교역 11위 국가답게 우리도 정책정당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래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이 기대를 거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합니다. 신미래당이 바로 정책정당의 실현을 열기 위해서 창당되었습니다. 기호 11번 신미래당 정당투표 부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의 기초연설을 들겠습니다.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 반갑습니다. 기호 14번 평화통일가정당 비례대표 손대오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제대로 된 부모가 안 계시면 자식들은 고아 같은 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나라에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어야 국민이 행복한 것입니다. 정치가 바로 나라의 부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국 60년에 이르도록 대한민국은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는 정치인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참된 부모가 가정의 살림과 모든 자식들을 제대로 보살피듯이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살림살이와 전 국민들을 골고루 보살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감정과 당파 힘으로 편 가르기 권력투쟁 정치만을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신생정당으로서 245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평화통일가정당은 참된 부모의 심정으로 나라를 골고루 보살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9개 정당 후보들의 기초연설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개성공단 남북경협 사무소 직원 철수라든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은 남북관계가 또 다시 불확실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와 상호주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의 입장이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 한동안 남북간 긴장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분단 60년, 이제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의 무기들을 거두어서 교육과 복지의 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한국사회당은 평화번영 정책의 지속과 발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한 평화협정체결을 상호 일괄타결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남북 어디에도 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 대 국가의 관점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종전선언을 거쳐 6자회담국이 보증하는 남북한 한반도 평화체제평화협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핵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상호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북한은 물론 역내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시민당 류승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당 류승구 후보** : 기호 10번 시민당과 저는 북핵 사건이 발생한 2006년 인천 보궐선거에서 득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직 법적으로는 종결되지 않은 6.25 전쟁을 종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평화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우방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6자회담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핵 문제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서로 상호신뢰 관계 속에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방의 책임자로서, 국군의 지위자로서 국가와 국토를 지키려고 하는 그 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외무부장관이 외국에 나가서 6자회담의 합의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과 남한의 불필요한 냉전적인 또 다른 대결적인 문제가 더욱 큰 문제로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알아서 시급히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진보신당의 김석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 남북간 상호주의는 북한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일 때만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얼핏 보면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주의는 지난 10년간 남북화해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남북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그리고 철도와 도로연결사업 등은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인도주의 사업에 대해서도 소위 정치와 연계시켜 상호주의적인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와 연계시킬 경우 더 이상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의약품 그리고 비료 등과 같은 것은 북한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핵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미국에게 있지만 핵무기 개발이라는 대응수단을 선택한 북한 지도부도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진보신당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하기 위한 남북인권대화를 제안하면서 남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도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방안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당의 김명규 후보 차례입니다.
- **기독교당 김명규 후보** :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기지 선제공격 발언으로 북한은 개성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가 추방되고, 서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방한계선 문제를 거론하므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어 국민들이 과연 남북문제가 잘 풀릴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당은 북한을 지원할 때 독일방식을 원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독 정부가 서독에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때 스포츠 교류를 하고 문화, 예술, 통신, 방송, 무역 등 주고받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에 1조 7,500억원을 주고 정치범 3만 3,755명을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도 이러한 방법을 원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데려오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차후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종교단체를 통한 현물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여기에 기독교당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대북포용정책과 상호주의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DJ 정부, 노무현 정권에서 해 온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포용이라는 것은 ‘engagement’입니다. 서로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약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약혼은 결혼하면 모든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지고 동시에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호주의적이고 대등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10년 동안 해 온 대북관계는 한번도 상호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상호주의에 가까운 업적이 바로 개성공단 사업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본주의를 배우게 해 줄 수 있는 시험장이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개방하도록 끌어내는 좋은 시험대였습니다. 지금까지 8조원이 넘는 남북경협은 일방적인 제공이었습니다. 그런 경제적 제공이 오늘날 김정일의 콧대를 높이고, 핵무기 개발까지 자초했습니다. 지금 친박연대가 주장하는 대북정책은 2가지 원칙입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용정책 그리고 비핵화 통일 모두를 6자간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 상호주의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남북이 서로가 필요할 부분을 돕고 돕는 것입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제공하고, 북한은 자원개발과 노동인력 등을 제공하면서 자유와 시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무역과 외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우리가 동시에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주는 쪽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진 자의 여유와 동시에 무역의 출발선입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의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현실주의적 실용주의라고 하지만 조금은 여유 있는 정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10년간 포용정책과 맥을 같이 했던 햇볕정책은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그동안 북한이 이행하지 못했던 북핵문제, 인권문제 분야를 좀더 가시화할 수 있도록 구상하면서 비핵 개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포용주의와 상호주의 사이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즉각 응징하면서 지속적인 평화통일은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각 정당의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 국민 여러분! 국토가 분단되는 아픔 속에서 얼마나 통일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좌파정권은 북한의 인민과 북

한 동포의 생활상을 외면한 채 김정일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햇볕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위협 속에서 우리의 안보가 급격히 위협 받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생각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생각하고 상호주의를 조화시키는 정책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 역시 금년 신년사에서 경제개방과 북한 인민의 생활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격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 10월 26일 김영일 내각총리를 베트남에 시찰 차 보냈습니다. 이제 북한도 개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에게 개방을 촉구하면서 우리민족이 통일된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겨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 평화통일가정당은 대북정책으로 상호주의와 햇볕정책을 서로 보완관계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북한 당국자의 책임성과 우리 쪽의 인도주의적 협력을 보완단계로 조화시키는 입장입니다. 남북관계는 중단기적으로는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로서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를 한반도 전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통일은 이념이 본질의 문제이고, 체제는 그에 부수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국정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시켜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국민의 사상 이념적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각계의 전문가와 권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통일 대비전담기구를 가동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여 통일 이후에 불필요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실향안보당의 이애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 :**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며칠간 북한은 개성공단 상주인력을 철수시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피바다를 넘어 잿더미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 출신으로서 10살 때부터 수용소

생활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쌀과 비료를 매년 평균 70만톤 씩 지원하면서 얻은 것이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 실항가족 100여 명 만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1인당 평균 1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인권은 전혀 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도 북한의 벼랑 끝 외교로 현재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이 나눠 먹기식 전략전술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핵 문제와 연계해 안보의 강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실항민들의 정당한 기호 7번 국민실항안보당이 남북관계의 정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먼저 9개 정당의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FTA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2007년 4월 2일 협상 돌입 14개월 만에 한.미FTA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협상결과를 놓고 우리 측과 미국 측 모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에 따른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찬성여론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미국 경제로의 예속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FTA 국회 비준 찬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민당 류승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시민당 류승구 후보 :** 시민당은 2006년 서울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양 중심, 석유경제, 세계경제 위기를 설파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것은 일본 정부였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는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기구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저희로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외의 경제적 약자로 지목되는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분들이 보유한 첨단기술인 농업기술 또는 어민기술을 정부가 사들여서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량자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FTA 조류로서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국가로서 지지해야만 하며, 따라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므로 일부 정당이 이익을 제기해서 농어민을 선동하는 것은 자제시켜야 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가 한.미FTA 국회비준 찬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 한.미FTA는 민생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반대합니다. 체결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것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한.미FTA가 발효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약 0.28%, 약 1조 2,000억원의 성장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액수는 훨씬 큼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약 12조원에 가까운 서민부담이 증가합니다. 약품 값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재정이 악화되어서 의료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광우병 등 물질들이 수입되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정리해고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투기자본들의 유동이 늘어나서 금융시장도 불안해집니다. 또 정부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려고 해도 투자자 국가소송 때문에 경제 주권마저 침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국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따져 봐도 불리한 점밖에 없는 한.미FTA를 폐지하고 대신 저희들은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제안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당의 김명규 후보가 한.미FTA 국회비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독교당 김명규 후보 :** 한.미FTA는 빠르게 동의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FTA를 반대하여 일본보다도 50년간 뒤떨어진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미국도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FTA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새 국회에 넘기지 말고 현 국회가 총선 뒤에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이고, 그중에서 2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섬유 등을 팔기 위해서는 농산물, 의약품, 금융서비스 부문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EU, 중국, 브라질, 일본 등의 나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과 의약품, 금융, 지적재산권, 방송, 통신 등 취약 부문의 국내보존대책은 적극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희 기독교당은 FTA 때문에 수출로 덕을 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기업에 보존해 주

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미FTA 국회 비준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 원칙적으로 한.미FTA 국회 비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장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에도 바운더리를 깨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한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본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약 6%의 GDP 증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FTA 이행기간과 연계해서 볼 때 약 10년 정도를 상정할 때 연 평균 0.06~0.07%의 추가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반대급부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동시에 시급하고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의 토론자들도 말씀하셨지만 농축산 분야 등에서는 상당히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쌀의 경우에는 품질 고급화를 위한 연구지원, 또 유통혁신을 통한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이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FTA는 우리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유권자들께서는 각 정당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신지를 비교하면서 잘 듣고 계실 것입니다. 한.미FTA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의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 저희 직능연합당은 FTA를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개혁개방으로 한.미FTA는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근대 역사에서 실제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일본에 침략을 당하는 결정적인 수모를 가졌습니다. 반대의 이유도 일부는 있겠지만 정략적이 아닌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중국, 일본, 기타 등 다른 국가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국회 비준과 동시에 국내 취약산업 보호방안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벌중심의 경제주체가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함께 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특화산업도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보호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특히 한.미FTA가 1876년 강화도 불평등조약처럼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조약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국제적인 계약관계를 충

분히 숙지하고 국제법이라든가 국제통상에 관한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계속해서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 신미래당의 한.미FTA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무역전쟁이라는 무한경쟁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상호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작년에 한.미FTA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농축산 농가에서 외국의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 피해가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 코트라가 발표한 한.칠레FTA 발효 4년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이 칠레에서 수입한 포도, 와인, 육류 등 농축산물이 9만 2,325달러로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0.86%에 그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별로 안 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농축산 농가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무공해 농산물을 재배하고, 특수농법을 장려하는 국가적인 지원을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한미무역협정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에 신미래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키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평화통일가정당의 손대오 후보는 한.미FTA 국회 비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입니다.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 평화통일가정당은 한.미FTA 국회 비준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제17대 국회가 그 마지막 소임으로 비준동의안을 사실 처리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정쟁하느라고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4월 총선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1월 미 대선 이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하는 것도 압박용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과 수출의 길을 넓게 열어 가는 길이 한국의 살길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을 되도록 많은 나라와 체결해야 그 길은 넓어질 것입니다. 각국의 관세장벽을 넘어 우리 제품이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강해지고 또 관세가 없어지는 수출품을 국내에서 소비하게 됨으로써 물가안정과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시장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성장의 추동력을 한층 크게 만들 것입니다. 취약부문인 농수산, 의약업 등의 피해 보완책과

경쟁력 강화도 백방으로 준비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국민실향안보당에서는 한.미FTA 국회 비준에 대해 찬성이 신지 반성이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 :** 국가 간의 FTA 체결은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특히 세계 제1위의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야가 수차례 한.미FTA 체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의 반대표를 의식해서 국회 비준을 미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FTA부터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칠레FTA도 당초 걱정과는 달리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0.86%에 지나지 않고 또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의 단일품목에 칠레시장 점유율은 7.2~7.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시장규모나 교육 측면에서 어떤 FTA보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FTA가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FTA도 개방정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전반적 보호수준이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농축산업의 보호대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국민실향안보당에서는 제2의 농촌부흥운동을 통한 농어촌 신제품 운동전개와 첨단산업과 농업을 접목한 네덜란드 방식의 유리집 태양전지 발전온실 도입, 농축산물의 이력관리제도의 도입, 목걸이 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국사회당의 오준호 후보가 1분 30초 간 답변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 한국사회당은 모든 개방이나 무역협정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그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위험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미FTA는 국가 주권을 침해할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외국의 독점자본이 한국의 환경정책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정부를 소송 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육이나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과 미국화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든 '식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꼬집은 영화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미국식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또한 FTA로 인한 국내 산업, 국민들의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에 대한 진정한 합의나 동의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저희 한국사회당은 앞으로의 무역에서도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무역형태를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미FTA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9개 정당의 한.미FTA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 교육입니다. 모든 국민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만큼 관심들이 높으시고 또 해법도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각 당에서는 어떤 교육관과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국내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가예산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교육 지출의 심각성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수준이나 지역, 계층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교육 위상 등이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 지난 10년간 교육의 자율화가 하나하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교육의 자율화는 학생이나 교사를 위한 자율화가 아니라 학교나 교육당국을 위한 자율화였습니다. 등록금이 자율화되면서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열렸고, 입시가 자율화되면서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은 아이들만 유리해 졌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이 자율화되면서 일제고사만 부활되었고, 학교 운영이 자율화되면서 진성고 경우처럼 학생 인권침해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진행된 교육의 자율화는 잘 사는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제대로 교육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벌을 중시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에서는 학벌을 철폐하고 대학을 평준화하지 않고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보신당에서는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학벌사회를 끝내겠습니다. 국·공립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평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부터 시작해서 입시를 철폐하겠습니다. 학급당 아동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겠습니다. 진보신당은 대도시에 살건 소도시에 살건, 잘 사는 집이든 잘 못사는 집 아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교육받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기독교당 김명규 후보의 답변을 들겠습니다.

- **기독교당 김명규 후보** : 새 정부가 교육 자율화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잘 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교재단도 중·고등학생 선발권의 자율화도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갔더니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데모였습니다. 가난한 농촌과 불우학생들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은 지금까지 단기고리에서 장기저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기독교당에서는 5-3-4-4학제 교육제도 시행안을 제안합니다. 요즘은 유치원 교육을 거의 받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이고, 그 대신 고등학교 과정 4년차 1학기에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므로 대학 진학시에 자기 전공에 대한 사전검증의 기회도 되고, 인턴사원 실습 시 기업의 적성에 맞는 학생은 취업을 선택하므로 실업률 감소효과도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당의 5-3-4-4학제를 제안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사교육비가 20조원, 2007년 국방비가 24조원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사교육비가 국방비와 맞먹는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친박연대의 첫 번째 교육정책은 사교육 중심의 교육이 공교육으로 다시 옮겨올 수 있도록 공교육 환경개선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수교사가 사립학원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에게 처우개선을 해 주지 않고는 그분들을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수준에 준하는 연구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겠고, 둘째로는 학생시절에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 때 받은 학비대출금을 취직해서 갚아나가고 이 돈은 소득 공제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도 몇 년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년지대계입니다. 따라서 교육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부모가 함께 바람직한 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국민참여 입시제도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결과물을 정책에 연결시키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교육문제에 관해서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 직능연합당에서는 먼저 초·중·고등학교는 공교육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우선은 무엇보다도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공교육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

제적인 도움도 되겠지만 특히 우리 모든 자녀에게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쌓는데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능연합당은 장기적인 교육목표로 3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 동반과 실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며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내부 시설과 운동장 시설 등이 최고급이 되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주민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전념하시도록 충분한 보수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30년, 100년을 이어가서 우리 교육을 집행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자율화와 등록금 무이자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만 자율화는 다시 말하고 일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무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학생과 학부모는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교육 문제에 대해서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교육비 부담 때문에 겁이 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지경인데 나라 장래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낳기만 하고 국가가 교육을 시키는 정책을 저희들은 주창합니다. 태어나서 만 3세까지는 국비로 탁아소를 운영하고, 만 4~5세는 유치원을 국비로 운영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4조원의 예산을 전부 전용해서 이런 데에 쓰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고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졸업을 제한하면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과외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는 물리학과나 화학과 시험을 볼 때 수학, 물리, 화학 3개의 과목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능고사를 통해 전 과목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입시지옥에 몰아넣습니다. 우리 고3학생도 자기 학과에 해당하는 과목만 공부하고 일찍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특기생활, 취미생활을 하는 대학의 문호를 더 개방하면 등록금 1,000만원 시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학도 학생들을 많이 입학시켜서 등록금을 해결해 나간다면 교육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가 답변해 주십시오.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 지금처럼 고교평준화를 일률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 기회균등은 보장되는 것 같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이 떨어져서 이미 평가된 대로 하향평준화가

되고 맙니다. 공교육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형편없어지고, 모든 학부모가 사교육에 매달려서 조기유학, 기러기 가족들이 늘어나고 가정생활이 불행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균등과 자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책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학교 등을 다양하게 설립하도록 하되 입학자격은 전 계층의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기회균등 보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입제도에서 학생 선발기준을 학업성적 순으로만 하지 말고 인성, 봉사활동, 교우관계, 동아리 활동,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입체적, 총체적 선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교육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입제도는 공교육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행정업무를 대폭 감소하는 대책을 세워서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는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 :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및 저소득자, 장애인, 탈북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간, 계층간 맞춤형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대학의 특성을 살려 공교육과의 협업체를 만들어 실무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와 공조해서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은 국·공립대학을 뺀 모든 대학을 선진국처럼 입학정원을 제외한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전면 자율화시켜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산하협력을 통한 기업체의 공동연구지원으로 현재 78%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낮추고, 이를 위해 기여입학 및 졸업제도도 산업수요에 따라 전공별, 부분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의존도가 줄어들 경우에 대학의 연구분야의 실적을 특별히 관리하고 이를 산업화, 상용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검토해서 연구성과가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되어 민생경제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모든 교육정책을 자율과 실용적 연구, 개발과 산업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할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혹시 청소년 자녀에게 “너 책 볼 시간에 공부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청소년기에 많은 책을

읽고 꿈을 키워야 할 나이에 그 책을 덮고 해야 되는 공부라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공부라는 말입니까? 입시를 위한 교육, 학벌을 위한 교육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당은 교육의 자율성은 입시를 폐지하고 학벌사회를 해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자격시험을 통해서 대학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공립대를 통해서 단일 국·공립대를 만듦으로써 대학평준화를 이루고 학벌사회를 해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양한 자율성, 다양한 교육적 실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인문학, 철학, 시민의식, 생태주의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기회균등이란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높은 등록금의 자립형사립고를 만들고, 장학금을 몇 푼 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공교육에 대한 예산투자가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상한선을 도입해야 합니다. 법대, 의대와 같은 특정학과에는 저소득층이나 지역의 균형적인 선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교육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당의 류승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당 류승구 후보** : 저희 시민당은 초·중·고·대학 교육의 모든 것을 무상 교육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일반 학부모들께서 어렵게 마련하신 수입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는 나중에 사회복지보형제도 문제에 대해 다룰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대학등록금 철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꾸만 그 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그런 말을 못 하게끔 하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비가 비싸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몰라주고 정부가 나서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연구하는 과제는 사교육과 공교육을 완전히 뒤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학부모들께서 보내시는 학원을 학교로 만들고, 지금의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청회를 열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

금 시각이 2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하고 또 수입물가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부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일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 물가 잡기에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각 당이 갖고 계신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독교의 김명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기독교 김명규 후보** : 원유, 식량, 국제 원자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원유가격 상승은 생산은 늘어나지 않고, 경제성장이 높은 중국과 인도 등의 대량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유가, 국제 원자재, 식량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수출상품 원가 인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 역점을 두었습니다. 가스공사연구소에 석·박사 100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바다 해저에 약 8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이 있으며,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쯤에는 원유가격이 150달러 정도 가리라고 봅니다. 그때에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므로 정부가 적극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52개 생필품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유통구조개선 수급조절을 하고,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 서민물가안정을 기해야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는 물가안정대책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 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월 현재 물가가 약 3.6%입니다. OECD 평균 2.5%, EU 2.3%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물가상승입니다만 사실 서민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라면이나 자장면 등 서민 필수품이 10%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됩니다. 작은 정부라고 했지만 필요한 부서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박연대에서 정부는 에너지청, 아니면 자원확보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식량 전쟁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저희 당에서는 국제에너지자원 의원연맹을 결성해서 각국의 해

외 권역별 에너지 벨트를 구성하는 지역에 의원들이 적극적인 외교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물가안정 문제는 묘책들을 많이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 고유가, 원자재, 공공요금, 기초생활품은 많은 후보님들이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능연합당에서는 물가안정과 부동산에 대한 투명거래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아래 취임 이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족쇄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풀어서 취득세 1% 이내, 양도세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30% 이내, 대신 쓰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을 축으로 해서 국가는 실거래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격이 조작되는 쌍방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거용과 분양권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확인제도를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됨으로 인해서 가격은 최종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파생되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일거리가 지속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의 근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신미래당의 김호일 후보 설명해 주십시오.
-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 물가의 안정은 사회 안정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요즘 물가가 계속 올라서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주부들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 작년보다 배추가 2배나 올랐다, 작년보다 여러 가지 물건 값이 올라갔다 하면 남편이 직장에 가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사간에 투쟁이 벌어집니다.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주식, 부식, 생활용품 등 기초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를 특별히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미래당은 경제부처에 기초생활품물가관리청을 신설해서 공급과잉이 되었을 때에는 국가가 미리 구매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작황이 안 좋아서 물가폭등이 우려될 때에는 사전에 수입조치를 해서 수급의 균형을 이루어서 가격을 안정시켜 나간다는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설 명절이라든지 수요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리 수급을 조절하는 대책을 장·단기적으로 세우고, 각 정부부처간에 유대적인 조절을 해 나간다면 생활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 국민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작년 6월 미국 CNN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생활비가 모스크바, 런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4위가 도쿄, 5위가 홍콩입니다만 서울 생활비는 뉴욕보다 22% 더 비싸다고 합니다. 10년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반대로 들렸습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최근 52개 품목 가격을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가계 안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다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비용인 원인은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고비용의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때문입니다. 이러한 5대 고비용 항목을 해결하지 않고는 물가안정대책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이 5가지 고비용 항목이 가정경제를 주름지게 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세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거비 안정대책과 통신비, 교통비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쉽게 앓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실향안보당 이에란 후보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국민실향안보당 이에란 후보** :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최근의 3고현상인 고유가, 고환율, 고원자재가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과잉 유동성이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급랭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첫째로 시장 지향적 물가조절 수단인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억제, 환율 변화에 취약한 수입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정책을 실시해서 물가안정을 꾀하겠습니다. 둘째로 불필요한 물가상승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체계의 단순화, 물리 부분의 유류지원금 확대, 정유사 및 주유소 판매가격 타당성 검토의 제도화, 국가 에너지 절감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유도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중·저소득층 실질 구매의 확충과 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해서 소득세제의 물가연동제 정책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항상 민생경제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계속해서 물가안정대책의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사회당의 오준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 국민 여러분! 치솟는 물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현재 물가급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유, 밀가루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육, 주거, 의료 등 공공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로 장기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구환경을 위해서라도 석유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유 회사들의 담합 속에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에너지 공공성을 위한 특별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에 에너지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누진요금, 차등요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 생필품에 관련해서는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로컬푸드나 지역사회의 먹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의료, 주거에 대해서는 물가를 급등시키는 시장주의정책을 초래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한국사회당이 서민물가를 잡아가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헌)** : 시민당의 류승구 후보 이어가 주십시오.
- **시민당 류승구 후보** : 기호 10번 시민당입니다. 물가 문제는 정부가 각종 세금을 올려서 국민을 부담스럽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작년 참여정부 때 양도세금, 종합재산세금, 종합부동산세금, 재개발이익환수금, 기반시설부담금, 사회보장보험금 등 국민들이 지출해야 될 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낭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가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국회가 막아야 되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뿔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막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공공자본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폐지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라고 자랑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없애겠다고 했던 분이 지금은 어땁니까? 바꿀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당이 해냅니다. 시민당이 2006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헌)** : 끝으로 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대책이 필요합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성장보다 민생안정과 위기관리에 주력해야 합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관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수도나 가스, 전기, 교통 같은 공공요금부터 통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인하를 위해서 정유회사 중에 한 군대를 공기업화해서 가격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중기대책으로는 교육, 의료, 보육, 주택과 같은 서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격도 낮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대량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제공하면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학등록금 걱정 없는 공공교육정책을 확립하고, 무상의료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보육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가구1주택을 법제화하고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곡물과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30%도 안 되는 자급도를 50%까지 법제화해서 높여야 하고, 에너지 의존율도 50% 수준으로 떨어트리도록 대체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감사합니다. 각 주제별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9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께서 1분 30초씩 답변을 잘 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엄수,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의 중에 다른 당의 의견이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인정과 격려를 하시면서 오늘 토론의 나머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문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제도 변화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와 임금, 처우문제, 정규직에 비하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또 대처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각 정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시간 1분 30초입니다.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잘 해결하면 사실 다른 문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확실히 경제대통령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약 550만명으로 추산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약 840만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55%가 비정규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도 나름대로 진통을 겪고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골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2년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의무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이행하면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법 해석에 의하면 2년 내에 해

고해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경우, 예를 들면 이랜드 사태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2년 경과 후에 직접고용의무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2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기간을 천편일률적으로 2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분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논의해 왔습니다. 일자리 감소, 노사갈등의 심화, 반대로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와 인력 운용에 대한 경기성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능연합당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세웠습니다. 첫째, 직업군의 개발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입니다. 기존에 일자리 제공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대학에 새로운 직능인의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업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직업군의 창출을 법과 제도의 규제 속에서 엄격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직업군이란 한 예로서 대체의학을 검증된 분야별로 국가의 제도권에 수용한다든가 해서 관광서비스 산업 분야 및 이런 분야를 세분화시켜서 선진 미래형 일자리 직업군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군의 입법화가 추진이 될 것 같으면 그동안 많은 비정규직의 다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우리가 흔히 하는 외주와 인력의 아웃소싱까지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 비정규직이 갑자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게 된 것은 IMF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자리를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급격히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선업계를 비롯한 호황을 누리는 업체는 퇴직을 했던 사람마저도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복직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제를 빨리 회생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때까지 당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기호 11번 신미래당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자체를 임시직이라고 바꾸어 부르도록 하고, 우

수한 임시직 사원에게는 재계약을 보장해 주고 임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서 임시직이라도 충분히 생활이 보장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또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의 답변순서입니다.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 앞서서 후보님들이 좋은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게도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기현상은 바로 보호제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외주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더욱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최종 5심까지 가는데 3년 내지 5년까지 걸리게 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는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전환율에 따르는 세제상,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여서 정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양보하면서 다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 :** 비정규직 문제는 경영자와 노동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 측과 노동계의 상이한 주장과 의견이 자꾸 대립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민생경제 활로구축이라는 대명제 아래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 다소 양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경영자는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외부 영입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지양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며 불법파견을 줄여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단체협약권이라도 우선 가지고 임금제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를 명문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주체의 기본단위인 가계의 경제를 우선시 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우리의 민생경제는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산업 및 근로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저희 국민실향안보당은 맨 주먹으로 고향을 등지고 월남해서 경제를 잃은 실향민의 근면, 성실함을 알려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노동 문제를 타협과 타협으로 이끌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답변 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 비정규직 여러분, 88만원 세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 첫 직장을 시작해야 되는 청년들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하루 14시간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870만명의 비정규직 문제는 건강한 노동인권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 제도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합법화, 합리화 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판단의 선택을 고용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직군을 바꾸어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청업체로 책임을 돌리지 않고 원청이 노동조건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사회, 기업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복지, 교육, 청소년 지원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사회적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시민당 류승구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당 류승구 후보** : 기호 10번 시민당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다른 당과는 시각이 다릅니다.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의 노동자적 부르조아운동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다 보니까 빵 한 조각을 10명이 나눠가질 걸, 빵 한 조각을 2~3명이 먹고, 나머지 7명은 갖다 내버린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입니다.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참여정부까지 독재정부시절, 개발독재시절, 이런 민주투쟁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하는 노조에게 대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노동자적 부르조아운동을 타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국민들이 서로서로 양보하고, 노동자가 서로서로 양보하고, 지금 현 노동단체의 부르조아적운동을 청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진보신당의 김석준 후보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 현재 860만명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입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한 비정규보호법안의 핵심은 기간제 사용에 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기간만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이 지나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선전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랜드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도 되기 전에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비정규직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신당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비정규법안을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에 차별시정을 위한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최저 임금을 165만원선으로 인상해서 저임금 노동시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노사정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을 위해서 60만원의 실업수당을 제공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잘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당의 김명규 후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독교당 김명규 후보** :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기업 정규직들이 지금처럼 높은 임금인상을 고집하며 투쟁 일변도의 공격적 노조활동을 벌인다고 하면 기업들은 추가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그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입장이 서로 다른 해결방식으로 협상을 했습니다만 어렵게 합의를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당에서는 덴마크의 비정규직 정책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덴마크 정책은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실업급여, 강력한 고용지원이라고 보는데 정부, 경영자, 양 노조 정규직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당에서는 최저임금제를 개혁하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개 주제 중에서 5가지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국민연금이 이른바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됐음에도 관련 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44년도에 연도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부터 1분 30초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화 가능성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부담 고급여의 설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령화의 저출산은 물론이고, 부담대비 평균 수입비가 2배를 넘는 구조상의 문제로 차후 후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기업의 부담도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기업의 퇴직금 분야가 추가되어서 보험료가 2배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과약도 필요합니다. 현재 납세의무자 중에서 50% 가까이 되는 사람이 과세미달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의 소득축소 신고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더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리문제 같습니다. 이 분야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국민연금 문제에 관해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 국민연금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는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통합함으로써 비교적 기금적립이 양호했던 직장보험마저 부실하게 만든 원인도 있고, 또 연금개시 이전에 기금을 국가가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한 데서 이런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부담은 적게 하고, 수의 폭을 높게 잡은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오늘날 국민연금을 어렵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노후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야말로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웨덴을 주시하는 이유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보장제도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범적인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본 받고 좋은 방안을 애초에 강구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고 이렇게 부실하게 제도를 만들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정말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한국인만큼 높은 나라가 드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평화통일가정당에서 국민연금 개선방안으로서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출산율을 현재 상태인 1.26%에서 더욱 높여 나가서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펴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1명을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병역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사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는 망국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정치권이 가장 크게 심각한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면 출산율증가운동과 맞물려 우리 세대 이후도 국민연금에는 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외의 연금운영도 더욱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의 답변해 주십시오.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연금개혁공약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과거처럼 정부가 정치적,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기금을 끌어다 쓰는 일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연금개혁의 기본방향을 기금고갈 시기 연장 및 안정적 기금재원 확보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납세자 공로 노령연금 제도의 신설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연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금 중 5%를 납세자의 공로 노후보장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납세자의 적립 정도에 상응하는 비율로 적용해서 납세공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앞에서 말한 납세공로 노령연금이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소득세 납세실적이 미약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국가가 매년 부가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납세공로 노령기금으로 적립해서 일반 공로 노령연금자에게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도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의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 국민연금은 가난한 사람은 못 내서 문제가 되고, 부자들은 내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당은 국민연금을 계층적 연대, 세대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험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에게는 누진적인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소득층 납부 체납자를 전담적으로 맡는 전담반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고용주와 가입자가 5대 5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고용주가 60%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민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생필품에 가까운 공공제 가격이 인상한다면 연금이 아무 쓸모가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의료, 주거비에 대한 시장주의적인 접근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독거노인 자신들이 벌고 있는 생활비의 6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보편적 복지의 강화를 통해서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취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시민당 류승구 후보입니다.
- **시민당 류승구 후보** : 정당기호 10번 시민당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정당과 다릅니다. 일반 기업체 노동자들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들은 평생동안 정년퇴직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공무원 연금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연금이 불평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만들었는데 이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은 허리가 휘도록 수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자기 수입에서 50%, 60%까지 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저는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험 외에는 나머지 보험은 다 해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보험에 지출되는 돈을 가지고 사회간접보험을 많이 잃게 됩니다. 짬질방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려면 몇 억 원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5,000원만 내고 갈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그런 보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액의 돈을 국민에게 지출하게끔 해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아닙니다. 특히 기업체, 공무원 조직에서 평생 동안 고액의 월급을 받고 죽어서도 고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 국민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현재 개선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여성들과 같이 정작 이 도움을 받아야 될 계층들이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최근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급여율도 낮고 대상도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보신당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상한선도 문제가 됩니다. 연 5,000만원 버는 사람이나 50억원 버는 사람이나 보험료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누진제를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2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국민이 참여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기독교 김명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 **기독교 김명규 후보** : 기독교 8번 김명규입니다. 국가 장래적으로 볼 때 고용증대와 출산장려로 운영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46년에서 2060년까지 기금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장래연금수급에 대한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7년 말 현재 적립기금은 약 22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07년에 35조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여제도 개선에 있어서 급여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므로 시대에 맞도록 급여제도의 세부사항을 변화시켜서 고객만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여러 민원사항은 해소되었지만 급여제도개선을 위한 조직을 상시화 시켜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 저는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금제도에도 경영과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독점 연금제도에서 민간 참여형 경쟁체제로 연금제도를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토론에서 기독교 김명규 후보자님께서 무한경쟁시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살아남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기존에 운영해 오던 것과 달리 연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동시에 정부가 독점해 오던 연금제도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해서 함께 운영하는 경쟁 시스템을 마련할 때만이 국민이 감시도 하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것으로서 오늘 준비한 주제별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개 정당에서 나오신 후보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거의 1시간 45분여 토론을 이어오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에게 맺음 말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분이 그 동안 토론 중에 못하신 말씀, 또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은 1분씩입니다. 먼저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부터 맺음말 1분을 시작하겠습니다.
- **신미래당 김호일 후보** :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IMF 이후 양산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을 금융 정상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혈통주의와 근친혼을 허용한 민법을 다시 고치겠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침술이나 사혈 등 우리 고유한 의술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버스 면허를 개인면허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서 택시기사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미래당은 기초생활품 물가관리청을 신설해서 기초생활품의 물가안정을 통해서 사회를 안정화하고, 부모는 낳기만 하고 국가가 교육을 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 복지를 이루겠습니다. 11번 신미래당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 : 유권자 여러분! 이번 총선에도 기성 정치판에만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나서서 우리 정계에 맑은 물이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기성 정당들의 감언이설에만 붙들리지 마시고 눈을 들어 멀리 우리나라의 앞날과 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통일가정당이 그 해답입니다. 정신적 가치는 뒤로 하고 물질에만 매몰되어 '돈' '돈', '경제' '경제'하는 사이에

우리의 부모, 부부, 형제, 자식들이 빠들어지고 제자리를 못 지키는 병든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도 우리 모두의 베이스캠프인 가정이 바로서야 그 일이 가능해 집니다. 평화통일, 세계 1등 국가도 가정이 바로 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14번 평화통일가정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처음에 너무 떨려서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탈북한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탈북자에게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실향안보당은 당리당락에 제한 없이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교육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고통 받는 북한 동포의 인권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실용적 남북경협시대를 이끌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제적 공조와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도주의 정당, 실향민과 이산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당인 기호 7번 국민실향안보당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땀말 1분 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당 오준호 후보 :** 국민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도 자기 아빠를 가리켜 독수리 아빠,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혹은 참새 아빠라고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부자 아빠가 아니고 독수리 아빠가 아니어서 어깨가 축 쳐진 그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아빠들의 책임이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펀드를 하기 위해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아리가 주식투자 동아리라고 합니다. 국가 사회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 오로지 돈 버는 기계로 무한경쟁사회에 뛰어들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물려주시겠습니까? 한국사회당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복지사회,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사는 초록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서민중심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싸우겠습니다. 기호 15번 한국사회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시민당 류승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당 류승구 후보 :** 기호 10번 시민당입니다.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의 가치를 드

높이겠습니다. 종친회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을 완전히 철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개폐센터를 만들어서 작당지역, 작당조직에 의한 잘못된 법률을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위기가 도래되었는데 이것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 경제 공황비상 대책기구를 설치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부익부빈익빈 각종 연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국민개방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부동산세 등 국민들에게 각종 부담이 되는 세금을 완전히 철폐하도록 정부와 싸우겠습니다. 기호 10번 시민당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시오. 고맙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어서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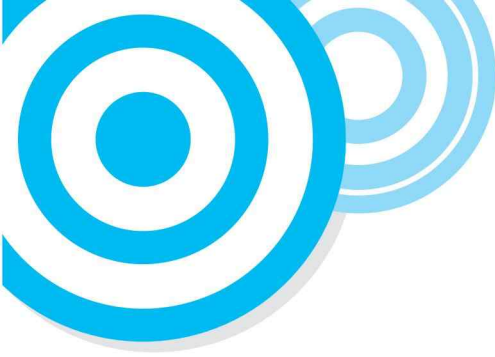
○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오직 1%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입니다. 이런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누가 진정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겨내겠습니까. 낡은 진보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알짜배기 대부분이 진보신당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횡포에 맞서서 진보신당이 실력으로 맞서겠습니다. 노회찬, 심상정과 함께 하는 기호 13번 진보신당이 국민 여러분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적어도 교육비 걱정, 의료비 걱정, 주거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살만한 세상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로운 진보, 실력 있는 진보, 기호 13번 진보신당을 밀어주시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다음은 기독교당 김명규 후보 맺음말씀 해 주십시오.

○ **기독교당 김명규 후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계와 독립운동, 정부수립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뿐아니라 대북지원에서도 소망교회는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교를 지어주었고, 순복음교회는 심장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4월 9일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과 기독교인들의 지지로 국회에 진출하면 비생산적이고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 정치 문화를 바로 잡고 사회개혁과 정치 혁명에 소음과 빛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희 기독교당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 섬김과 화합의 정치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금번 기독교당이 공천한 후보가 많이 당선되도록 기호 8번 기독교당의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9개 정당 대표들의 마무리 말씀을 1분씩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친박연대 송영선 후보** : 친박연대는 선진한국을 만들겠습니다. 원칙과 공정함 그리고 정직함이 통하는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입니다. 친박연대가 추구하는 선진화는 경제 선진화만이 아니라 정신과 문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의 선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욕감에 따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6번입니다. 욕감에 따르는 친박연대, 여러분들의 욕감에 따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끝으로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 **직능연합당 박형방 후보** : 마지막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기호 12번 직능연합당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의 1세대 창업주는 모두 소상공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언제든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총선만큼은 우리 스스로를 당당히 내세워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즐거운 축제의 날에 투표장으로 꼭 나가십시오. 정당의 투표는 반드시 기호 12번 직능연합당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남이 아닌 우리의 이웃입니다. 국민께서도 귀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방송인 송지현)** :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 토론회가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을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미래는 유권자이신 바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지하게 오늘 토론에 임하여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오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그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정당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공 직 선 거 법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8.4>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⑪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⑬「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⑭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부 칙 <2004.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3 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10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정 당 법

-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 (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 (협조요구) 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설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토론위원회 11인
2.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 9인
3. 구·시·군토론위원회 9인

②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③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당해 행정

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제5조 (직무)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개정 2005.8.4>)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이하 "정당추천위원"이

라 한다)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이하 이 조에서 "추천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추천단체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거나 제10조에 규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상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상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 ② 상임위원은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

제11조 (위원의 대우)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상임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 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 토론회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 가목에 따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회의소집) ①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 (위원회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소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론의 주제 및 질문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문위원등)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방송토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주제·질문 선정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5.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④토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 및 구·시·군토론팀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위원회의에 관한 사무
4.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5.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7. 기타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제20조 (시·도토론팀위원회 사무국) ①시·도토론팀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②시·도토론팀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팀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 (구·시·군토론팀위원회 간사) ①구·시·군토론팀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토론위원회를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이 겸임한다.

②간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 (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한다.

가. 당해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당해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 (대담·토론회) ①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당해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 ⑤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 ⑥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 ⑦각급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제24조 (합동방송연설회) ①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기타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③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 (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당해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26조 (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 (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당해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 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고지방송·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 (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들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들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

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 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 (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 (계약직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 (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 (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211호, 2004.3.1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토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토론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73호,2007.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96호,2008.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 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05·9. 23>

1. 「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이하 “대담·토론회”라 한다.) <개정 2005·9. 23>
2. 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공직선거정책토론회”라 한다.) <개정 2005·9. 23>
3.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정당정책토론회”라 한다.) <개정 2005·9. 23>

제3조(협조요구 등) 토론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규칙 제18조(자문위원 등)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 23>

제 2 장 대담·토론회

제4조(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토론위원회가 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중계방송사에 통지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등록신청시나 후보자등록신청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는 그 중계방송일시를 말하며, 제1항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자·시간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담·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를 중계방송일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대담·토론회의 개최장소는 중계방송사의 시설 또는 텔레비전방송에 적합한 장소로 정한다.

④ 삭 제 <2005·9. 23>

제5조(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정)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국회에서 통보받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당해 선거의 선거록 <개정 2005·9. 23>
3. 언론기관(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을 말한다)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와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당해 언론기관에서 통보받은 당해기간의 여론조사결과

제6조(사회자의 선정) ①대담·토론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마다 사회자 1인을 둔다. 이 경우 동일인을 다시 사회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토론회위원회는 대담·토론회(대통령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최일전 20일까지 위원마다 3인 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의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개최일전 10일까지 대담·토론회의 사회자로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중 1인을 사회자로 정한다. <개정 2005·9. 23>

③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대담·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에 대하여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후보자등록전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후보자로부터 가장 많은 찬성을 받은 자의 순(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찬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 23>

④ 삭 제 <2005·9. 23>

제7조(질문자의 선정)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자 이외에 대담·토론회의 주제별로 약간 명의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질문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인원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로 본다.

제8조(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①대담·토론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의 성격과 참석 후보자수를 고려하여 대담·토론회의 형식·시간배정 등에 관한 진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대담·토론회의 형식은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에 질문·답변하는 형식 기타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포함한다.

④ 삭 제 <2005·9. 23>

⑤ 삭 제 <2005·9. 23>

⑥ 삭 제 <2005·9. 23>

제9조(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①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이하 “의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제분야<개정 2005·9. 23>
2. 학력·경력·직업·사회활동 전력 등 개인의 행적(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정책·공약의 내용 및 실현가능성 여부

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기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에 요청하여 대담·토론회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수집을 병행할 수 있다.

③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책·공약사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9. 23>

④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마다 주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⑤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의 주제를 선정하여 하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 23>
- ⑥토론위원회는 주제 선정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3배수 이상의 질문사항을 작성하였다가 대담·토론회의 개최일 전일에 질문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 대한 공통질문사항과 개별질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 23>
- ⑦제6항의 질문사항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작성된 질문사항은 선정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봉할 수 없으며, 선정된 질문사항은 사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봉할 수 없다. <개정 2005·9. 23>
- ⑧대담·토론회의 진행 중에 사회자는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접수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⑨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사항의 작성 또는 선정에 관여한 자와 사회자는 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 23>
- 제10조(대담·토론회의 공표 등)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 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진행방식 및 주제 등 대담·토론회의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되, 그 공표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 ②토론위원회는 제1항의 공표에 불구하고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이 정하여진 때부터 직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한다.
1. 신문·방송광고
 2. 중계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자막방송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4.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한 홍보
- ③토론위원회가 제1항의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 대담·토론회의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2. 대담·토론회의 주제

3.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4.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5. 후보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에 관한 사항
6. 후보자의 준수사항
7. 기타 대담·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대담·토론회장의 설비) ①토론위원회는 중계방송사의 협조를 받아 대담·토론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 23>

②대담·토론회장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1.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좌석
2.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대담·토론회의 진행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4.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5. 기타 대담·토론회에 필요한 시설

제12조(대담·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①토론위원회는 사회자 및 중계방송사 관계자등과 협의하여 대담·토론회에서 활용할 진행표(이하 “토론진행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토론진행표는 전체 대담·토론회 시간을 배분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9. 23>

1. 타이틀(처음에 나오는 제명을 말한다)
2. 사회자의 시작 인사
3. 후보자 소개(후보자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설명
5. 후보자의 기조연설(기조연설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대담·토론회규칙 설명
7. 대담·토론회의 진행
8. 후보자의 맺음말(맺음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

제13조(대담·토론회의 진행) ①토론위원회는 제10조(대담·토론회의 공표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때에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

충답변을 말하며,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방법은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첨 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한다. <개정 2005·

9. 23>

②후보자는 대담·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노트북·도표·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 다만,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정당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에 있어서 발언 요지를 정리한 낱장으로 된 자료(기조연설 또는 맺음말 원고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후보자는 지참한 자료를 방송화면에 직접 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 23>

③대담·토론회는 제12조의 토론진행표의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사회자는 대담·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론진행표의 순서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후보자의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발언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이 경우 발언시작시각, 발언종료시각 10초전 및 발언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대담·토론회의 방송화면 구성은 중계방송사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 23>

제14조(대담·토론회장의 질서유지) ①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경호와 대담·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담·토론회장에는 미리 출입증을 배부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장을 참작하여 적당한 수 이내에서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출입증을 배부할 수 있다.

제 3 장 정책토론회

제15조(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정책토론회의 참석대상이 되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함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보조금의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정책토론회의 개최일로부터 기산하여 가장 최근에 경상보조금이 지급된 정당을 말한다. <개정 2005·9. 23>

②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대담·토론회의 규정 준용) 정책토론회에 초청할 정당의 선정,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정책토론회의 공표·홍보·설명회, 정책토론회장의 설비, 정책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정책토론회의 진행 및 정책토론회장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일전 7일 현재”로, “후보자”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초청할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정당정책토론회의 경우에는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05·9. 23>

제 4 장 보 칙

제17조(중계방송) ①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토론위원회가 그 녹화물을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중계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종료 후에 지체없이 중계방송 내용의 녹화물을 중계방송사에서 제출받아 당해 선거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재방송 등) ①방송사는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를 재방송할 경우 사전에 토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제1항의 재방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에 그 재방송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토론내용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정당 또는 후보자(“토론참여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가 재방송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토론참여자가 재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전직 임·직원이었거나 현직 임원과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재방송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토론회에서 토론참여자가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 등의 사유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재방송 중단 요청 등 사실 규명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 23]

제18조(토론회 결과보고) 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은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기록·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및 보고서 발간)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소위원회 또는 평가회를 통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와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선거종료후 1월 이내에, 정당정책토론회의 경우에는 토론회 종료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 23>

②토론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 관한 보고서를 선거종료 후 3월 이내에 발간한다. 다만, 정당정책토론회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1회 발간한다. <개정 2005·9. 23>

제20조(각종 공고·통지·통보 서식) 이 규정에 의하여 토론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통지·통보는 별표에 의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5·9.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 선거방송토론백서

2008년 12월 인쇄

2008년 12월 발행

발행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판권
소유

서울시 관악구 백재길 17

Tel : 02-3473-9947,8

인쇄 : 정우문화사

<비매품>